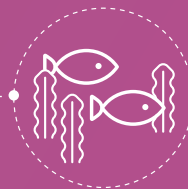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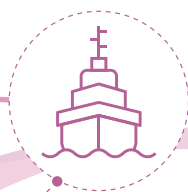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방안 수립

South Korea's Strategic Approaches to International Oceans and Fisheries
Cooperation with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전혜은 · 한덕훈 · 김주형 · 이민정 · 임해주 · 허재영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방안 수립

South Korea's Strategic Approaches to International Oceans and Fisheries
Cooperation with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전혜은 · 한덕훈 · 김주형 · 이민정 · 임해주 · 허재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저자	전혜은, 한덕훈, 김주형, 이민정, 임해주, 허재영		
내부연구진	연구책임자	전혜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전략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한덕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전략연구본부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전략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이민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전략연구본부 연구원
	공동연구원	임해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전략연구본부 연구원
	공동연구원	허재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전략연구본부 전문연구원

연구기간	2025. 4. 1. ~ 2025. 12. 31.
-------------	-----------------------------

보고서 집필내역

연구책임자	전혜은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2, 3, 4절, 제3장 3절, 제4장, 제5장, 제6장
내부연구진	한덕훈 제1장, 제6장 일부
	임해주 제3장 1, 2절, 제5장
	김주형 제4장 1, 3절
	이민정 제2장 1절, 제3장 1, 2절, 제4장 1절
	허재영 제3장 2절 일부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문경연 전북대학교 교수
	장영태 인하대학교 교수
	김현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수에너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미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기술원
	권석재 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 기술위원장
	홍승용 전)해양수산부 차관
	이민영 전)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김정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신현애 한국원양산업협회 전무
	진호정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장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군소도서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은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기상이변 등 복합적 위협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이들 국가는 광활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풍부한 해양생물자원을 보유한 'Large Ocean States'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국토와 취약한 경제 기반으로 인해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노출되고 있다. 군소도서국에서 해양수산 부문은 단순한 산업 영역을 넘어 식량안보, 생계, 문화적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은 이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4년 앤티가바바다에서 개최된 제4차 SIDS 국제회의는 향후 10년간 군소도서국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으며,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 블루이코노미 육성, 해양 거버넌스 강화를 중심으로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책임 있는 공여국으로서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지속 확대해 왔으나, 군소도서국이라는 특수한 협력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전략적 접근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군소도서국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 수요와 국제사회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본 연구는 군소도서국이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과 해양수산 부문의 전략적 중요성을 조명하고, 국제사회가 이들 국가와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부터 효과적인 협력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였다. 특히 협력국 수요 - 우리나라 수행 의향 - 실제 협력 실적 간 3자 정합성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협력 한계를 식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분야별 협력 형태가 아닌 기능 기반의 모듈형 협력 모델인 'OCEAN SHIELD'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모듈형 협력 모델은 군소도서국의 다양한 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태평양과 카리브해 각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협력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국제기구·지역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협력국의 공동 파트너 역할 전환 등 우리나라가 군소도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을 심화·확대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 방향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 해양수산 국제협력 외연 확대와 군소도서국과의 호혜적 협력 관계 구축에 실질적인 정책 지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해양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나라가 군소도서국의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데 본 연구가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완성을 위해 헌신한 연구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해 주신 국내외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6년 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조 정 희

목차

정책제안 _i

요약 _v

Executive Summary _xiii

01	서론 _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1. 연구 내용	6
	2. 연구 방법	8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검토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18

02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분야 현황 및 도전과제 _21	
	제1절 권역별 특성과 일반현황	21
	1. 정의 및 권역별 구분	21
	2. 권역별 일반 현황	22
	제2절 권역별 해양수산 현황	30
	1. 태평양	30
	2. 카리브해	42
	제3절 권역별 해양수산 분야 협력 수요 및 도전과제	56
	1. 태평양	56
	2. 카리브해	65
	제4절 소결	73

03 국제사회 및 주요국의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동향 _75

제1절 해양수산 국제협력 방향	75
1.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75
2. 주요국	81
제2절 해양수산 국제협력 지원 실적 및 사례 분석	86
1. 태평양	86
2. 카리브해	94
제3절 소결	102

04 우리나라의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현황 및 한계 _107

제1절 전략적 국제협력 필요성 및 추진 방향 분석	107
1. 전략적 국제협력 필요성	107
2. 정책적 협력 추진 방향 분석	109
제2절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실적 분석	115
1. 분석 프레임워크	115
2. 분석 결과 및 한계	116
제3절 군소도서국과의 해양수산 국제협력 수요 분석	120
1. 분석 프레임워크	120
2. 분석 결과	123
제4절 군소도서국과의 해양수산 국제협력 정합성 분석	135
1. 분석 프레임워크	135
2. 분석 결과	135
3. 향후 협력 방향	143
제5절 소결	148

05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전략 수립_153	
	제1절 군소도서국 맞춤형 협력 방향	153
	1. 모듈형 협력 모델 및 권역별 차별화 접근의 필요성	153
	2. 태평양 군소도서국 협력 방향	156
	3.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협력 방향	158
	제2절 군소도서국 특화 해양수산 국제협력 모델 수립	160
	1. OCEAN SHIELD 모델(안) 개요	160
	2. OCEAN SHIELD 구성 요소별 추진 방안	166
	제3절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실행과제	188
	1.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188
	2. 협력국	190
	3. 우리나라	192
	제4절 소결	194

06	결론 및 정책 제언_197	
	제1절 연구 결과	197
	제2절 정책 제언	200

참고문헌_203

부록_219

표 목차

〈표 1-1〉 본 연구의 주요 국내 선행연구	12
〈표 1-2〉 본 연구의 주요 국외 선행연구	15
〈표 2-1〉 태평양 군소도서국의 구분과 주요 특징	23
〈표 2-2〉 태평양 군소도서국 일반 현황(2023년 기준)	24
〈표 2-3〉 태평양 군소도서국 경제 현황(2023년 기준)	26
〈표 2-4〉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및 CARICOM 회원 여부	27
〈표 2-5〉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일반 현황(2023년 기준)	28
〈표 2-6〉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경제 현황(2023년 기준)	29
〈표 2-7〉 태평양 군소도서국 수산분야 현황(2019~2023년)	32
〈표 2-8〉 태평양 군소도서국 해양·관광 분야 현황(2019~2023년)	36
〈표 2-9〉 태평양 군소도서국 해운·항만·기초인프라 분야 현황(2019~2023년)	38
〈표 2-10〉 태평양 군소도서국 에너지 분야 현황(2019~2023년)	41
〈표 2-11〉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수산 분야 현황(2019~2023년)	43
〈표 2-12〉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해양·관광 분야 현황(2019~2023년)	47
〈표 2-13〉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해운·항만·기초인프라 현황(2019~2023년)	50
〈표 2-14〉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에너지 분야 현황(2019~2023년)	55
〈표 2-15〉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를 통해 파악된 해양수산 협력 수요	56
〈표 2-16〉 제1차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파악된 국별 해양수산 협력 안건	58
〈표 2-17〉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통해 파악된 해양수산 협력 수요	65
〈표 3-1〉 태평양 군소도서국 수출입 현황(2024년 기준)	87
〈표 3-2〉 태평양 군소도서국 국제개발협력 현황(2018~2022년)	90
〈표 3-3〉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수출입 현황(2024년)	95
〈표 3-4〉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국제개발협력 현황(2018~2022년)	98
〈표 4-1〉 해양수산 협력 분야별 키워드	117
〈표 4-2〉 군소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ODA사업 분야별 분포(2019~2023년)	117
〈표 4-3〉 태평양 군소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ODA사업 분야별 분포(2019~2023년)	118
〈표 4-4〉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ODA사업 분야별 분포(2019~2023년)	118
〈표 4-5〉 태평양 도서국 협력 수요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29

〈표 4-6〉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협력 수요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34
〈표 4-7〉 3자 정합성 평가 결과	142
〈표 5-1〉 OCEAN SHIELD 전략 키워드 및 기능 기반 대응 모듈(안)	162
〈표 5-2〉 Surveillance 사업 예산 범위(안)	169
〈표 5-3〉 Human Resources 사업 예산 범위(안)	172
〈표 5-4〉 Infrastructure 사업 예산 범위(안)	176
〈표 5-5〉 Ecosystem 사업 예산 범위(안)	179
〈표 5-6〉 Law 사업 예산 범위(안)	182
〈표 5-7〉 Development 사업 예산 범위(안)	186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구성도	9
〈그림 2-1〉 태평양 지역 해수면 높이 변화 추이(1993~2023년)	35
〈그림 2-2〉 카리브해 지역 해수면 높이 변화 추이(1993~2023년)	46
〈그림 2-3〉 태평양 도서국 요청 주요 해양수산 협력 안건(종합)	59
〈그림 2-4〉 카리브해 요청 주요 해양수산 협력 안건(종합)	67
〈그림 3-1〉 태평양 군소도서국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 추이(2014~2022년)	88
〈그림 3-2〉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 추이(2014~2022년)	96
〈그림 5-1〉 모듈형 협력 모델 및 권역별 차별화 접근의 필요성	156
〈그림 5-2〉 OCEAN SHIELD 모듈별 구성 요소	187

정책제안

■ 분석 내용 및 방법

1. 본 연구는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현황 및 협력 수요 → 국제사회 동향 → 우리나라 실적·한계 → 전략·모델 → 실행과제의 순서로 단계적 분석을 수행하였음. 각 장은 상호 연계된 구조로 설계되며, 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적용 가능한 기능 기반 모듈형 해양수산 협력 모델(OCEAN SHIELD)과 주제별 실행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2. 정량적 분석을 통해 군소도서국의 해양수산 분야 현황을 바탕으로 한 도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군소도서국 대상 협력사업 실적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분야별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음. 정성적 분석에서는 문헌 중심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외 정책 문서, 외교 어젠다, 설문조사 및 현장 인터뷰를 결합하여 협력 전략의 현실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특히, 협력 수요-수행 의향-협력 실적 3자 정합성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협력 한계를 식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음. 또한, 군소도서국과 실제 국제개발협력 경험이 있는 해양수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서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현장의 기술·제도 수요를 파악하였음. 설문조사 결과의 해석을 보완하고, 제안

될 협력 모델의 실행 가능성과 적정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가가 참여한 소규모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도 병행하였음

3. 연구 결과, 태평양과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이 공통적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연안-해양 자원 의존성, 산업 구조의 단순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 국가별 기반시설, 정책·제도·인력 수준은 크게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특히 기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ODA는 태평양 및 수산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수산-관광-연안관리-기후-해양안보 등 복합적 기능이 동시에 요구되는 군소도서국의 실제 수요와 충분히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러한 구조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분야(field) 중심 접근’을 넘어, 군소도서국이 당면한 문제를 ‘기능(function) 단위’로 재구조화하여 국가별·권역별 조건에 따라 조합할 수 있는 모듈형 전략 모델 OCEAN SHIELD를 도출하였음

■ 정책제안

1.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는 군소도서국 협력 전주기에서 핵심 파트너로 기능해야 함. 한국은 기구와 함께 공동조사 및 데이터 생산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플랫폼을 활용해 국가 간 수요 조율과 정책 협의를 수행하며, 국제 기후·해양 펀드 등을 활용한 공동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함. 아울러 기구와의 정례 정책협의체를 운영하여 협력의 지속성·제도화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2. 협력국은 외부 ODA의 수혜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협력사업 기획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 파트너로 전환되어야 함. 이를 위해 협력국은 협력사업 기획에 필요한 기초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개하고, 수요 기반 협력사업 요청 능력을 강화하며, 해양-수산-환경-관광 부처 간 조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3. 우리나라는 OCEAN SHIELD와 같은 모듈형 전략을 바탕으로 군소도서국의 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권역별 전략적 차이를 고려한 접근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함. 해양수산부 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협업 기능의 고도화 및 정부-국제기구-협력국-전문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협력 이해관계자가 참여함과 동시에 기존 해양수산 ODA사업 성과와 연계할 수 있는 장기적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요 약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방안 수립

전혜은 · 한덕훈 · 김주형 · 이민정 · 임해주 · 허재영

1. 서론

- 현재 우리나라의 군소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협력 전략 부재와 실제 협력 수요 사이의 ‘정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군소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해양수산 국제협력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군소도서국-특히 태평양과 카리브해-의 해양수산 협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정책·전략 체계가 부재한 상태임
- 태평양은 기존 협력 기반이 있으나 전략적 정비가 필요하고, 카리브해는 협력 경험이 없으나 국제사회가 강하게 개입하고 있는 대표 권역이라는 점에서, 두 지역을 동시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그간 정상회의·고위급 포럼·다자협력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확인된 협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경험·역량을 기반으로 한 실행 가능한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함

-
- 기존 연구가 태평양 중심이며 공여국 전략 비교 및 취약성 진단에 치중되었던 점을 보완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수요와 모델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님

2.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분야 현황 및 도전과제

- 두 권역 모두 해양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된 취약성을 지니고 있으나, 산업 구조, 기초 인프라, 정책 여건 등에 있어서는 뚜렷한 권역 간·국가 간 차이를 보였음. 특히, 해양수산 부문의 통계 미비, 산업화 수준의 차이, 기초 인프라 격차는 단일한 협력 모델의 적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듈형 협력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태평양 권역 군소도서국의 경우, 수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해양자원 활용이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 되나, 도로·전력·항만 등 인프라 기반이 취약하여 어획-가공-유통 간 가치사슬 형성에 한계가 있었음
- 반면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전력 접근성 100%에 가까운 국가가 대부분이고, 일부 국가는 항만·도로·통신 등 인프라가 양호하였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안전한 식수 접근성은 떨어지고, 수산업의 경제적 비중은 매우 낮으며, 정책 통계는 대부분 미집계 상태로 사업 설계와 성과 모니터링 기반이 취약했음. 더욱이, 태평양 권역에 비해 국가 간 차이가 극심했음
- 두 권역 모두 데이터 기반 협력 설계가 불가능한 국가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서, 통계 생태계 구축, 데이터 생산 역량 강화, 국가 단위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사전 협력이 필수적임

- 이와 더불어, 태평양 권역은 문화권별·언어권별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기반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마이크로네시아와 멜라네시아 등 지역별 특화 전략 수립이 요구됨
- 카리브해의 경우, 개발도상국형 협력과 시장개척형 협력 접근을 병행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국가군을 분류하고 차등형 협력 전략을 설계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 해양수산 국제협력의 전략적 정합성과 사업 실행력을 동시에 제고하며, 장기적으로는 해양수산 국제협력 정책을 브랜드화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위한 협력 방향은 다음과 같음
 - 현황-수요-우리나라의 비교우위 간 연계성을 갖춘 삼각형 기반의 협력 전략을 도출할 것
 - 기능별 모듈형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어획기술, 양식기술, 수산물 가공, 유통 인프라, 해양쓰레기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등 분야별 기능을 조합하여 맞춤형 협력사업을 구성할 것
 - 사전 기반 구축형 협력(데이터 수집, 제도 설계, 역량 강화 등)을 병행하여 협력 실행의 기반을 마련할 것
 - 권역 간·국가 간 차등형 전략 수립을 통해 협력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글로벌 가치사슬 내 편입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것

3. 국제사회 및 주요국의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동향

- 국제기구, 지역기구, 주요국은 각국의 이해관계와 군소도서국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여 해양수산 협력을 추진하고 있었음
- 국제기구는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관리, 해양생태계 보전, 블루이코노미 육성을 핵심 축으로 하는 다층적 해양수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음

-
- 태평양 지역기구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IUU 어업 대응,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역내 공동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음. 카리브해 지역기구는 수산 거버넌스 통합과 기후적응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었음
 - 주요국 또한 권역별 협력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해양수산 협력을 추진하고 있었음
 - 태평양과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의 경제 현황 분석 결과, 두 권역 모두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었음. 단, ODA 수혜 현황에서는 차이가 있었음
 - 태평양과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DI 유입도 대부분 국가에서 미미하거나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음
 - ODA 의존도는 태평양 도서국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수산 분야 ODA도 전체 ODA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반면 카리브해 지역은 상대적으로 ODA 의존도가 낮고 수산 ODA 비중도 대부분 제한적이었음
 - 해양수산 협력 사례 분석 결과, 단순 재정지원을 넘어 제도 개선, 기술역량 강화,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자원 메커니즘 구축을 통합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이 확인되었음
 - FDI 기반 협력 사례 분석 시 현지 인력 역량 강화, 환경·사회 규제체계 정비, 기술 이전 제도화, 산업 생태계 다변화가 시사점으로 도출됨
 - ODA 협력 사례 분석 시 거버넌스 및 정책 구축 지원, 지역기구 전문성 활용, 성과관리체계 도입, 제도화된 자원 메커니즘 구축이 시사점으로 도출됨

4. 우리나라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현황 및 실적 분석

-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과의 해양수산 국제협력 현황을 협력국의 공식 수요, 우리나라 ODA 담당자의 협력 의향, 실제 ODA 추진 실적 등을 바탕으로 3자 정합성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 수산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심각한 정합성 불일치가 확인되었음
- 협력국과 우리나라 담당자 모두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해양관광, 해양보호(침식 포함), 에너지, 해양안보 분야의 실제 이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수요는 일치하나 실행이 안 되는” 구조적 격차가 드러남
- 이러한 정합성 불일치의 근본 원인은 해양수산 분야가 해양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공유하는 특성상 수산자원의 이용·관리, 인적 자원의 활용, 해양환경 관리 등에서 분야 간 업무의 중첩이 불가피한 구조적 특성을 지니며, 현재의 국제협력 체계로는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됨
- 이러한 정합성 불일치는 표면적으로는 분야별 수요-공급 격차로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해양수산 국제협력 체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 해양수산부 부처 전체를 대표하는 통합적 국제협력 목표가 설정되지 않고, 각 과에서 분야별 국제협력 목표를 수립하므로 중장기적 계획에 부합하는 일관된 목표 달성이 어려움
- 대부분의 해양수산 ODA사업 수행 담당자가 국가기관 소속이라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전문성 유지가 곤란함
- 부처 간 연계와 민관협력 사례가 없어 사업 기획 및 수행 등에 있어 한계가 발생함
- 개별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 차원의 다자협력 추진으로 중장기 전략이나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체계로 발전하기 어려움

5.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전략 수립

- 군소도서국이 직면한 도전은 전통적인 분야(field) 구분(해양, 수산, 해운, 항만 등)을 넘어, 기능(function) 단위에서 서로 긴밀히 얽혀 있는 복합적 구조임이 확인됨
- 이는 기존 분야 중심 ODA 방식으로는 수요-실적 간 정합성을 맞추기 어렵고, 사업의 효과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의미함
- 본 연구는 해양수산 분야를 기능 단위로 재구조화하고, 이를 조합하여 국가별로 최적화된 사업을 구성하는 모듈형 협력 모델로서 OCEAN SHIELD를 제안함
- Surveillance - Human Resources - Infrastructure - Ecosystem - Law - Development 등 여섯 가지 기능으로 구성된 이 모델은 국가별 산업·제도·역량 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모듈을 조합할 수 있어, 군소도서국이 요구하는 다차원적 수요와 한국의 재정·제도적 제약을 동시에 고려한 실현 가능한 협력 구조를 제공할 수 있음
- 아울러 OCEAN SHIELD의 6개 기능별 추진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개념적 모델을 넘어 실제 사업으로 연결가능한 실천 전략을 구체화하였음. 각 기능은 단독으로도 적용 가능하지만, 국가별 우선과제에 따라 조립(assembly)될 때 가장 높은 정책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OCEAN SHIELD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행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국제기구·지역기구는 데이터·정책·기술 기반이 취약한 군소도서국에서 사실상의 협력 관문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동조사·공동사업·국제펀드 연계 등 전주기 협력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음

- 협력국은 통계 생산·정책 조정·행정역량 강화 등 협력사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보가 필수적임
- 우리나라는 모듈형 사업 기획 체계 구축, 지역기구와의 연계 강화, 사전 기반 조성 사업 확대, 협업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전략적·체계적 접근을 제도화해야 함

6. 결론

- 기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ODA는 태평양 및 수산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수산·관광·연안관리-기후-해양안보 등 복합적 기능이 동시에 요구되는 군소도서국의 실제 수요와 충분히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태평양과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이 공통적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연안·해양 자원 의존성, 산업 구조의 단순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 국가별 기반시설, 정책·제도·인력 수준은 상이하여 협력 수요도 다양하기 때문임
-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분야(field) 중심 접근’을 넘어, 군소도서국이 당면한 문제를 ‘기능(function) 단위’로 재구조화하여 국가별·권역별 조건에 따라 조합할 수 있는 모듈형 전략 모델 OCEAN SHIELD를 도출함
- OCEAN SHIELD는 감시(Surveillance), 인적 역량(Human Resources), 인프라(Infrastructure), 생태(Ecosystem), 법제(Law), 개발(Development)의 여섯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되며, 각 기능 아래에 세분화된 모듈을 배치해 협력국이 필요로 하는 기능만 선택·결합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가짐

- 또한, 권역별 협력 방향을 비교한 결과, 태평양과 카리브해는 동일한 OCEAN SHIELD 모델을 공유하되, 적용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점이 확인됨
- 태평양 군소도서국은 지역기구와의 협력 구조가 비교적 정비되어 있고, 우리나라와의 기존 수산 협력 경험이 풍부하며, 현지에서의 우리나라 기술 수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존재함. 이에 따라 태평양 협력은 OCEAN SHIELD의 다양한 기능 모듈을 국가가 직접 조립하는 직접형 전략이 적합함
- 반면,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관광 중심의 서비스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물리적 인프라는 태평양보다 양호하지만, 해양수산 정책·제도·통계 기반은 취약한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경험도 거의 없는 실정임. 국제·지역기구를 통한 간접·연계형 접근이 전략적으로 적합함
- 우리나라의 대(對)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은 국제기구·지역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협력국의 공동 파트너로서의 역할 전환, 그리고 맞춤형 협력 전략의 제도화를 통해 장기적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는 협력 전주기에서 핵심 파트너로 기능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이들과 공동조사·데이터 생산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 조율, 공동 자원 조달, 정례 정책협의체 운영 등으로 협력 지속성과 제도화를 확보해야 함
- 협력국은 ODA 수혜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기획·집행에 참여하는 공동 파트너로 전환되어야 하며, 기초 통계 생산·공개, 수요 기반 사업 요청 역량 강화, 해양·수산·환경·관광 부처 간 조정 체계 마련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OCEAN SHIELD와 같은 모듈형 전략을 바탕으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권역별 접근 방식을 제도화하며, 해양수산부 내 협업 기능 고도화 및 정부-국제기구-협력국-전문가-민간 참여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존 ODA 성과와 연계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EXECUTIVE SUMMARY

South Korea's Strategic Approaches to International Oceans and Fisheries Cooperation with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Hae-Eun Jeon · Deuk-Hoon Han · Ju-Hyung Kim · Min-Jung Lee ·
Hae-Ju Im · Jae-Young Huh

1. Introduction

- South Korea currently faces a structural policy gap, whereby substantial cooperation demands from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in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exist without an integrated strategic framework capable of accommodating them. To address this gap,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structured international oceans and fisheries cooperation strategy targeting SIDS.
- Korea has repeatedly identified cooperation needs in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from SIDS, particularly in the Pacific and Caribbean regions, yet lacks the policy and strategic framework to accommodate these demands.

-
- The Pacific region has an existing foundation for cooperation but requires strategic reorganization and enhancement, whereas the Caribbean, despite limited prior cooperation experience, represents a key region with strong international community engagement. In this context, the simultaneous analysis of both regions holds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 In light of thi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y in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focusing on SIDS in the Pacific and Caribbean regions. To this end, the study systematically consolidates cooperation needs identified through summit meetings, high-level forum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itiatives, and proposes operationally feasible cooperation models based on South Korea's experience and capabilities.
 - Existing research has been predominantly Pacific-centered and has focused on donor country strategy comparisons and vulnerability assessments. This study differentiates itself from existing research by proposing field-based demands and models applicable to practical implementation.

2. Pacific and Caribbean SIDS in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 Both regions exhibit high degree of dependence on marine resources and share common vulnerabilities to climate change, yet demonstrate distinct inter-regional and inter-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ial structure, basic infrastructure, and policy conditions. In particular, the lack of statistical systems in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disparities in levels of industrialization and gaps in basic infrastructure constrain the applicability of a uniform cooperation model. This has underscored the necessity of adopting a modular cooperation strategy.
- In the case of Pacific SIDS, fisheries account for a relatively high share of GDP, and the utilization of marine resources constitutes a core pillar of economic growth. However, the weak infrastructure foundation in roads, electricity, and ports has limited the formation of value chains linking fishing, processing, and distribution.
- In contrast, most Caribbean SIDS demonstrate near-universal electricity access rates, and some countries possess relatively well-developed infrastructure in ports, roads, and communications. However,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remains generally low,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fisheries is very limited, and policy-relevant statistical data remain insufficient, resulting in weak foundations for project design and performance monitoring.

Moreover, inter-country disparities are far more pronounced compared to the Pacific region.

- Given that a large number of countries in both regions lack the capacity for data-driven cooperation design, preliminary cooperation is essential for establishing statistical ecosystems, strengthening data production capabilities, and securing country-level baseline data.
- In addition, the Pacific region exhibits extensive diversity across cultural and linguistic groups, necessitating cooperation approaches grounded in understanding of local cultur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region-specific strategies for areas such as Micronesia and Melanesia.
- In the case of the Caribbean, development assistance and market development cooperation approaches should be pursued in parallel. It will be necessary to categorize countries according to readiness and feasibility and to design differentiated cooperation strategies accordingly.
- South Korea must enhance both the strategic coherence and project implementation capacity of its international oceans and fisheries cooperation, while building a foundation for long-term policy branding. To achieve this, the following cooperation directions are proposed.
- Develop a three-pronged cooperation strategy that establishes linkages among current status, demand, and South Korea's comparative advantages.

- Establish function-based modular cooperation models that combine sector-specific functions—including fishing technology, aquaculture technology, fishery product processing, distribution infrastructure, marine debris response, and renewable energy transition—to design customized cooperation projects.
- Pursue preliminary foundational cooperation in parallel, encompassing data collection,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capacity strengthening,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cooperation implementation.
- Develop differentiated strategies across regions and countri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practical impact of cooperation, while supporting long-term integration into global value chains.

3.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ceans and Fisheries with SIDS: Trend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untries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g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untries have been advancing oceans and fisheries cooperation by formulating strategies that reflect their respective strategic interests as well a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IDS.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established multilayered oceans and fisheries cooperation frameworks centered on four core pillars: climate change response,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
-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and blue economy development.
- Pacific regional organizations have developed intra-regional joint governance mechanisms for sustainable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the fight against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In the Caribbean, regional organizations have focused on integrating fisheries governance with climate-resilient regional cooperation.
 - Major countries have also strategically pursued oceans and fisheries cooperation strategies in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region-specific cooperation.
 - An analysis of the economic conditions of Pacific and Caribbean SIDS shows that both regions experience persistent trade deficits, although their patterns of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dependence differ.
 - Most countries in both Pacific and Caribbean SIDS demonstrate severe import dependence, while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remain minimal or exhibit unstable patterns in many countries.
 - Pacific island states tend to show higher ODA dependence, with fisheries ODA accounting for a considerable share of total ODA. In contrast, the Caribbean region demonstrates relatively lower ODA dependence, with fisheries ODA representing a limited proportion in most cases.
 - The analysis of oceans and fisheries cooperation cases indicates that financial assistance alone is insufficient to ensure sustainable outcomes. Instead,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combining institutional reform, technical capacity building,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sustainable financing mechanisms.

- FDI-based cooperation cases highlight key implications such as local workforce capacity building, the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and social regulatory frameworks, institutionalized technology transfer, and diversification of industrial ecosystem.
- ODA-based cooperation case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governance and policy support, the effective use of regional organization expertise, the introduc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ustainable financing mechanisms.

4. South Korea's International Oceans and Fisheries Cooperation with SIDS: Current Status and Performance Analysis

- A three-way coherence analysis of South Korea's international oceans and fisheries cooperation with Pacific and Caribbean SIDS was conducted based on partner countries' official demands, South Korean ODA officials' cooperation intentions, and actual ODA implementation performance. The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coherence misalignments in most areas, with the exception of traditional fisheries.

-
- The analysis identified a structural pattern of "aligned demand but absent implementation" in several key areas. Despite strong interest from both partner countries and South Korean officials, marine tourism, marine protection (including erosion), energy, and maritime security have seen virtually no actual implementation.
 - The fundamental cause of these coherence misalignments lies i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Given that the sector shares the ocean as a common spatial domain, inter-sectoral overlap is inevitable in areas such as fisheries resource utilization and management, human resource deployment, and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The curr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 proves inadequate for managing these complexities.
 - While these coherence misalignments appear on the surface as sector-specific demand-supply gaps, they are fundamentally stem from structural limitations in South Korea's oceans and fisher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 In the absence of integra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objectives representing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s a whole, each division establishes sector-specific international cooperation goals, making it difficult to achieve coherent objectives aligned with mid- to long-term plans.
 - Since most official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oceans and fisheries ODA projects belong to government agencies, it is difficult to ensure work continuity and maintain expertise.

- The absence of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creates limitations in projec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 The pursuit of multilateral cooperation at the individual program or project level makes it difficult for such efforts to evolve into mid- to long-term strategies or a sustainable partnership framework at the national level.

5. International Oceans and Fisheries Cooperation Strategy for SIDS: Strategy Development

- The analysis confirms that the challenges facing SIDS constitute a complex structure in which issues are closely intertwined at the functional level, transcending traditional field-based classifications such as oceans, fisheries, shipping, and ports.
- This indicates that conventional field-based ODA approaches face difficulties in achieving coherence between demand and implementation and have limitations in securing project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 This study proposes OCEAN SHIELD, a modular cooperation model that restructures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into functional units and combines them to design country-specific optimized projects.
- This model consists of six functions—Surveillance, Human Resources, Infrastructure, Ecosystem, Law, and Development—and enables

the selective combination of modules according to each country's industrial, institutional, and capacity levels. It thus provides a feasible cooperation framework that simultaneously considers the multidimensional needs of SIDS and South Korea's fisc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 Furthermore, by presenting detailed implementation approaches for each of the six functions of OCEAN SHIELD, this study outlines practical strategies that go beyond a conceptual model and can be directly linked to actual project implementation. Each function can be applied independently; however, the greatest policy impact can be achieved when the modules are assembled in accordance with country-specific priorities.
-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OCEAN SHIELD, the following operational foundations should be established.
 -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function as de facto cooperation gateways in SIDS where data, policy, and technical foundations are weak. They can therefore be utilized as full-cycle cooperation partners through joint surveys, joint projects, and linkages with international funding mechanisms.
 - Partner countries must secure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necessary for cooperation projects to function effectively, including statistical production, policy coordination, and administrative capacity building.
 - South Korea should institutionalize a strategic and systematic approach by establishing a modular project design system, strengthening linkages with regional organizations, expanding upstream enabling projects, and advancing collaborative frameworks.

6. Conclusion

- South Korea's existing oceans and fisheries ODA has been concentrated in the Pacific region and the fisheries sector. This narrow focus has not sufficiently aligned with the actual demands of SIDS, which simultaneously require multiple functions including fisheries, tourism, coastal management, climate response, and maritime security.
- This is because, while Pacific and Caribbean SIDS share common characteristics such as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dependence on coastal and marine resources, and simple industrial structures, their actual levels of infrastructure, policy, institutions, and human resource vary considerably across countries, resulting in diverse cooperation needs.
- Therefore, this study moves beyond the conventional 'field-based approach' to develop OCEAN SHIELD, a modular strategy model that restructures the challenges facing SIDS into 'functional units' that can be combined according to country-specific and region-specific conditions.
- OCEAN SHIELD is designed around six core functions—Surveillance, Human Resources, Infrastructure, Ecosystem, Law, and Development—with subdivided modules under each function. This structure provides flexibility for partner countries to select and combine only the functions they require.

-
- Furthermore, comparative analysis of region-specific cooperation directions confirms that while the Pacific and Caribbean share the same OCEAN SHIELD model, their application approaches must differ fundamentally.
 - Pacific SIDS possess advantages including relatively well-established cooperation structures with regional organizations, extensive experience in fisheries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nd high receptivity to South Korean technology at the local level. Accordingly, Cooperation with the Pacific is suited to a direct implementation strategy, in which countries independently assemble the functional modules of OCEAN SHIELD.
 - In contrast, Caribbean SIDS are characterized by tourism-centered service economies and relatively better physical infrastructure than the Pacific. However, they often lack robust oceans and fisheries policy, institutional, and statistical foundations, and have limited experience in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Under these conditions, an indirect and partnership-based approach through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is strategically appropriate.
 - South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oceans and fisheries with SIDS should move toward building a long-term cooperation ecosystem. This requires three key elements: strategic partnerships with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the transformation of partner countries into active collaborator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ustomized cooperation strategies.

-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should function as core partners throughout the entire cooperation cycle. South Korea should establish joint survey and data production systems with these organizations, and ensure cooperation continuity and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demand coordination, joint financing, and regular policy consultation mechanisms.
- Partner countries should transition from mere ODA recipients to joint partners participating in projec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his requires the production and disclosure of basic statistics, strengthened capacity for demand-based project requests, and the establishment of coordination mechanism across oceans, fisheries, environment, and tourism ministries.
- South Korea should leverage modular strategies such as OCEAN SHIELD to identify customized projects, institutionalize region-specific approaches, and build a cooperation ecosystem linked to existing ODA achievements. This should be supported by strengthened internal collaboration withi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operation of regular consultation mechanisms involving the govern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artner countries, experts, and the private sector.

0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흔히 군소도서국이라고 불리는 군소개발도서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은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 대상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소도서국은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 의존도가 높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반면, 우리나라는 해양자원 확보가 필요하고 선진적인 해양수산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의 「Making Development Co-operation Work for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군소도서국에 대한 효과적 개발협력 방안)」을 번역하여 참고하는 등 관심을 가져왔으며¹⁾, 2022년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오세아니아 권역과의 지역별 맞춤형 전략적 협력관계 증진을 제시

1)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2018.5.4.), 군소도서국(SIDS)에 대한 효과적 개발협력 방안(검색일: 2025. 7.9.). 해당 자료는 OECD(2018)의 번역 정리본임

하는 등²⁾ 군소도서국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왔다. 2023년 5월에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여 태평양 지역에 대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하였다.³⁾ 군소도서국에서도 정상회의와 고위급 포럼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협력 안건(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이하 IUU) 어업 대응, 해양쓰레기, 연안침식, 기후적응, 해양관광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⁴⁾

군소도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은 단순한 개발협력을 넘어, 우리나라의 해양·기후·경제 전략 전반과 직결되는 다층적 중요성을 가진다. 군소도서국의 국가 규모는 작지만 이들의 국제사회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국제연합(UN: United Nation, 이하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1국 1표’ 원칙에 따라 국제규범 형성과 의제 설정 과정에 실질적인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으며⁵⁾, 특히 해양·기후 분야에서는 군소도서국이 글로벌 담론의 핵심 축으로 여겨진다.⁶⁾ 즉, 이들과의 협력은 한국이 중견국으로서의 외교 무대 확장과 국제 해양 거버넌스에서의 전략적 영향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군소도서국은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이하 EEZ)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과의 협력은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접근성, 합법적 조업 환경 유지, 해상 물류 안정성과 같은 실제적 국익과 직결된다. 태평양은 우리나라의 주요 해상 운송 루트이자 원양어업 활동의 핵심 어장이며, 카리브해는 미주-유럽-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의 교차 지점이다. 따라서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조업 안정성,

2) 대한민국 정부(2022), pp. 14–15.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6.12.)(검색일: 2025.4.16.)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6.12.)(검색일: 2025.4.16.); 외교부,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 비공식 번역본(검색일: 2025.10.27.)

5) United Nation(e), Voting System(검색일: 2025.8.1.)

6) UNDP(2024),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re on the frontlines of climate change – here's why(검색일: 2025.8.1.)

항만·해상 안전 협력, 공급망 리스크 관리 등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해운·수산업뿐 아니라 수출입 물동량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경제 전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군소도서국은 양식·가공·유통·해양환경·기후 적응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높은 협력 수요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제도·정책 노하우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이와 같이 군소도서국과의 협력은 해양수산 분야 기술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적 영향력 확대-해양경제 안보-공급망 안정-기후 리더십 강화-신시장 창출이라는 복합적 국익과 직결되는 전략적 시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군소도서국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 협력 전략을 아직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접근성과 정책 연속성 등의 이유로 아시아 지역에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를 집중해 왔고⁷⁾ 그 결과 태평양·카리브해·인도양에 걸쳐 분포한 다수의 군소도서국은 ODA 대상국임에도 불구하고⁸⁾ 중점협력국에서 배제되어 왔다.⁹⁾ 외교부 조직 구도에서도 태평양·카리브해·인도양 도서국이 여러 부서에 분산 관리되고 있어, 군소도서국 대상 협력이 부처·지역 단위로 분절되어 있는 실정이다.¹⁰⁾ 이는 장기적으로 협력 전략의 부재, 사업 축적의 어려움, 수요 대응의 비일관성으로 이어졌다.

반면,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 해양강국은 이들의 지정학적 중요성, 광대한 EEZ, 국제기구 내에서의 투표권, 기후변화 대응에서 요구되는 역할, 해양 안보와 자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7) 관계부처 합동(2021.1.20.),

8) OECD(2025), DAC list of ODA recipients(검색일: 2025.6.30.)

9) ODA Korea, 국가협력전략(CPS)(검색일: 2025.1.18.)

10) 아태2과에서 스리랑카·몰디브 등 남태평양 도서국을, 동남아1과와 아프리카2과에서 동티모르·세이셸 등 인도양 도서국을 나눠서 관리하고 카리브·중남미협력과에서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을 각각 담당하고 있음. 외교부, 조직도(검색일: 2025.5.25.)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Pacific Partnership Strategy』를 발표하고¹¹⁾, ‘미국-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U.S.-Pacific Island Country Summit)’를 개최하였으며¹²⁾, 일본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되는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PALM: Pacific Islands Leaders Meeting)’를 통해 태평양 도서국과의 정례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¹³⁾ 영국은 2022년 6월 호주, 미국,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태평양 도서국들과 ‘Partners in the Blue Pacific(PBP)’을 발족하였다.¹⁴⁾ 중국은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一帶一路) 이니셔티브를 통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¹⁵⁾ 정수나·김영완(2017), 2022년 솔로몬제도과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등¹⁶⁾ 남남협력 기반의 경제·안보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국제기구 역시 군소도서국에 대한 제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UN은 「The SIDS Accelerated Modalities of Action (SAMOA) Pathway」¹⁷⁾를 통해 행동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이하 FAO)는 「The SIDS Solutions Platform」¹⁸⁾을 운영 중이다. OECD도 「The Helping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graduate to success」¹⁹⁾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11) The White House(2022), Indo-Pacific Strategy(검색일: 2025.5.25.)

12) U.S., Department of State. U.S.-Pacific Island Country Summit(검색일: 2025.5.25.)

1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Pacific Islands Leaders Meeting(PALM)(검색일: 2025.5.25.)

14) The White House, Statement by Australia, Japan, New Zeal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artners in the Blue Pacific(PBP)(검색일: 2025.5.25.)

15) 정수나·김영완(2017), p. 81.

16) 국가안보전략연구원(2022), p. 1.

17) United Nations(c), The SAMOA Pathway(검색일: 2025.5.25.)

18) FAO, SIDS Solutions Platform(검색일: 2025.6.25.)

19) OECD(2024b)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향한 군소도서국의 해양수산 협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정책·전략 체계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의 협력 전략 부재와 실제 협력 수요 사이의 ‘정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군소도서국-특히 태평양과 카리브해-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해양수산 국제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태평양은 기존 협력 기반이 있으나 전략적 정비가 필요하고, 카리브해는 협력 경험이 없으나 국제사회가 강하게 개입하고 있는 대표 권역이라는 점에서, 두 지역을 동시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그간 정상회의·고위급 포럼·다자협력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확인된 협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경험·역량을 기반으로 한 실행 가능한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소도서국은 지리적 고립성, 경제 규모의 제약, 기후변화 취약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해양수산 분야는 이들 국가의 경제 기반이자 국제협력의 핵심 분야이다. 그러나 IUU 어업, 자원 고갈, 해양오염, 인프라마비, 전문인력 부족 등 복합적 문제는 기존 방식의 단편적 지원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협력 대상국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능별·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군소도서국 협력은 정책·제도 기반이 미흡하고, 태평양·카리브해·인도양 도서국 대부분이 중점협력국에 포함되지 않아²⁰⁾ 일관된 전략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공백을

20) ODA Korea, 국가협력전략(CPS)(검색일: 2025.1.18.)

해소하고,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 차별화된 협력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태평양과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의 해양수산 분야 협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실적과 국가별·권역별 수요 간의 정합성을 분석하여 기존 협력의 구조적 한계를 도출하며, 셋째,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군소도서국 협력의 방향성을 기능 단위에서 재설정한 모듈형 협력 모델(OCEAN SHIELD)을 개발하고자 한다. 나아가 넷째, 각 모듈이 실제 협력 과정에서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실행과제를 제안함으로써, 군소도서국의 협력 수요를 실질적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본 연구의 최종 목적으로 둔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현황 및 협력 수요 → 국제사회 동향 → 우리나라 실적·한계 → 전략·모델 → 실행과제의 순서로 단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장은 상호 연계된 구조로 설계되며, 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적용 가능한 기능 기반 모듈형 해양수산 협력 모델(OCEAN SHIELD)과 주체별 실행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구성 및 방법론,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제시하여 본 연구가 기존 군소도서국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설명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협력이 정책·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황에서, 왜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지를 분석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의 해양수산 분야 현황과 도전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권역별 일반 현황과 경제·해양수산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기구 통계 및 국가 지표를 활용하여 어업·양식·가공·연안·기후·인프라 등 분야별 취약성과 관련 수요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량 데이터 기반으로 권역별 차별적 과제를 식별하였으며, 이는 이후 전략 설계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군소도서국 협력 동향을 종합 분석하였다. FAO·UN·OECD·SPC·CRFM 등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의 협력 방향을 검토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전략과 사례를 비교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차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과 기존 공여국의 공백 영역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협력 현황과 실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상회의 및 고위급 협의에서 제기된 수요를 정리하고, 실제 우리나라가 추진한 협력사업의 분야를 분류했다. 또한 협력 수요-수행 의향-협력 실적-정합성 3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협력 한계를 식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권역별 협력 전략(태평양·카리브해)과 모듈형 해양수산 협력 모델(OCEAN SHIELD)을 제시하였다. 모듈형 모델은 기존 분야 중심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감시(S)-인력(H)-인프라(I)-생태(E)-제도(L)-개발(D)의 기능 단위로 협력을 재구조화하였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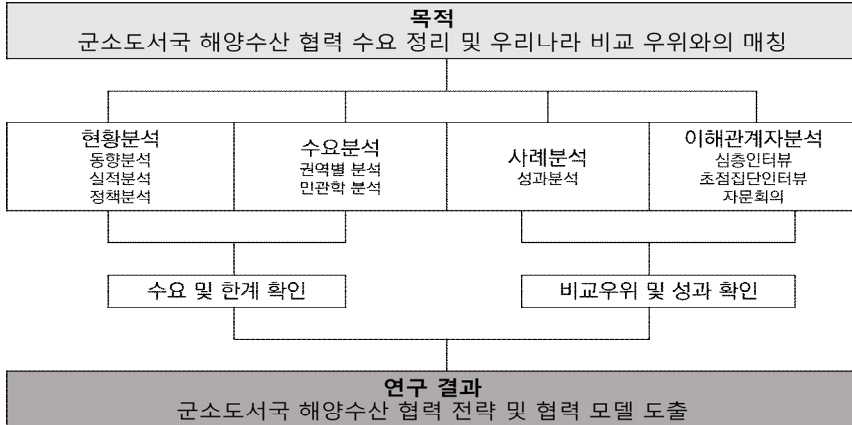
기능별 세부 모듈과 구성 요소별 추진 방안을 개발하고, 국가 개발 수준과 권역 특성(태평양의 직접형·카리브해의 간접형)까지 고려한 차별적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자기구·협력국 정부·한국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실행과제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였다.

제6장에서는 연구의 핵심 성과를 정리하고, 국가 정책에 적용 가능한 정책 제언으로 연결하였다. 본 장에서는 실천적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정부의 해양수산 협력 정책과 ODA 중장기 전략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을 대상으로 실효적 해양수산 국제협력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정량적 통계분석과 정성적 질적분석을 결합한 통합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단순 사례 수집을 넘어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도전과제 진단 → 사업 현황 평가 → 전략 수립이라는 3단계 분석 체계를 설정하고 각 방법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였다. 분석 범위는 최근 고위급 외교 채널을 통해 협력 수요가 명확히 제기된 태평양·카리브해 권역으로 한정하여 정책적 활용 가능성과 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림 1-1〉 연구 구성도



자료: 저자 작성

정량적 분석에서는 OECD DAC, FAO, IMF, WB 등 주요 국제기구의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군소도서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GDP 대비 수산업 비중을 통해 해양경제 의존도를 측정하고, FAO 어업자원 지표와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 지정 현황을 바탕으로 IUU 어업 및 자원 고갈 위험을 정량화하였으며, WMO와 NOAA의 기후변화 지표를 활용하여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항만·가공시설 등 해양수산 인프라에 대한 국가별 정보를 분석하여 주요 도전과제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군소도서국 대상 협력사업 실적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분야별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성적 분석에서는 문헌 중심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외 정책 문서, 외교 어젠다, 설문조사 및 현장 인터뷰를 결합하여 협력 전략의 현실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인태전략」,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등 국내 정책 문서를 분석해 군소도서국 협력이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전략에서 갖는 의미와 우선순위를 확인하였고, 권역별 정상회의와

고위급 포럼의 공식 의제를 검토하여 권역별 협력 수요와 외교적 기대치를 식별하였다. 이어 군소도서국과 실제 국제개발협력 경험이 있는 해양수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서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현장의 기술·제도 수요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의 해석을 보완하고, 제안될 협력 모델의 실행 가능성과 적정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가가 참여한 소규모 표적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도 병행하였다. FGI를 통해 설문조사로 파악한 협력 수요와 정책 방향 간의 정합성을 보완하였다.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서도 모듈형 협력 모델 및 접근 방향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향후 고도화 방향 등에 대해 질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정량·정성 통합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제2장에서 도출된 군소도서국의 도전과제와 제4장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협력 의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5장에서 제시하는 맞춤형 협력 모델의 논리적 타당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1) 국내 연구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군소도서국 관련 연구는 지역, 주제, 방법론 측면에서 몇 가지 공통된 흐름과 한계를 보인다. 우선 지역적으로는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며, 카리브해 도서국을 직접 다룬 연구는

드물었다. 예를 들어, 장학봉 외(2010)는 해양 분야 ODA 전략 수립을 위해 태평양, 인도양, 카리브해 등 세 권역을 포괄하였으나, 실제 분석과 사례는 태평양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정명화 외(2015), 정수나·김영완(2017), 박나연 외(2022), 조원득(2023), 설규상 외(2019), 정수나(2018) 등은 모두 남태평양 또는 태평양 도서국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카리브해 지역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주제 측면에서는, 군소도서국 자체의 개발 수요나 협력 분야보다는, 해당 지역을 둘러싼 중국,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의 지정학적 접근 전략을 분석하는 데 집중된 경향이 강했다. 예컨대, 박나연 외(2022)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 조원득(2023)은 중국 진출과 이에 대한 미국·호주의 대응, 설규상 외(2019)는 중국의 타이완 고립화 전략을 중심으로 한 외교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태평양 도서국을 분석의 중심에 두었으나, 실질적인 개발협력 수요보다는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의 도서국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방법론적으로는 대부분의 연구가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정성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으며, ODA 예산 통계나 원조 규모 등의 기초적 정량 분석은 일부 포함되었으나 실증분석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정수나(2018)는 한국과 일본의 원조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면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이 역시 원조 성과 평가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장학봉 외(2010) 역시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했지만, 분석보다는 전략 수립 제언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최인아 외(2023)와 박영민 외(2023)는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한 태도국 접근 방안을 제시하여 기존 연구에 비해 한국 정부 전략과의 연계성을 제시한 연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역시 협력의 실효성 검토나 사업 성과의 정책 환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찾기 어려웠다.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증장기적 추진 방향을 제시한 연구나 (한덕훈 외, 2021) 방향과 더불어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업(안) 까지 도출한 연구(전혜은 외, 2025)도 있었으나 두 연구 모두 해양수산 ODA에 한정되며 특정 권역을 대상으로는 분석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내 선행연구는 군소도서국과의 실질적 협력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량적 근거, 수요 기반 분석, 정책 성과 검토, 협력 분야별 세부 전략 도출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카리브해 국가에 대한 분석은 사실상 결여되어 있어,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협력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기능은 제한적이었다.

〈표 1-1〉 본 연구의 주요 국내 선행연구

연구 제목 및 목적	주요 내용
• 과제명: 소도서국가(SIDS)와의 해양협력 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장학봉 외(2010) • 연구목적: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규모 확대에 맞춰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 분야 ODA 전략을 구축하여 국제적 위상 제고 도모	• 한국 ODA 정책 및 소도서국 협력 현황 • 미국, 일본, EU, 중국, 호주 등 주요국 소도서국 지원 사례 검토 • 태평양, 인도양, 카리브해 등 지역별 소도서국의 해양협력 수요 분석 • 협력 가능 분야 도출 • 추진 전략 제시
• 과제명: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발굴 연구: 아프리카 및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정명화 외(2015) • 연구목적: 권역별 해양수산 협력사업 방향 및 사업(안) 제시	•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 현황 및 사례 분석 • 주요국 해양수산 ODA 현황 및 사례 분석 •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분석 • 협력 방향 및 협력사업(안) 제시
• 과제명: 신기후체제 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 분석 • 연구자(연도): 강상인 외(2017) • 연구목적: 파리협정 이후 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 분석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대한 주요 협상 결과 및 시사점 도출하여 한국의 대응 방향 제시	• NDC(국가결정기여) 협상 동향 • 국가별 기후변화 적응 보고 협상 동향 및 국제 지원 체계 • 전 지구적 이행점검 분석 •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 결과 •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연구 제목 및 목적	주요 내용
• 과제명: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중국 원조 결정 요인 연구 • 연구자(연도): 정수나·김영완(2017) • 연구목적: 중국의 남태평양 도서국 대상 원조 배분 동기 분석하여 경제적·외교적 목적 규명	• 중국 남태평양 도서국 협력 전략 • 경제적 동기 • 외교적 동기 •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 과제명: 해양수산 전문가관 지정에 따른 해양수산 ODA 중장기 발전 전략 • 연구자(연도): 한덕훈 외(2021) • 연구목적: 원활한 해양수산 ODA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 국내외 현황 분석 및 ODA 방향 분석 • 국내 해양수산 ODA 체계 분석 • 중장기 해양수산 ODA 발전 과제 제시
• 과제명: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전략경쟁 동향과 시사점 • 연구자(연도): 박나연 외(2022) • 연구목적: 주요국(미국, 중국, 호주, 일본)의 태평양 도서국 전략적 경쟁 동향 분석 및 이에 대한 태평양 도서국과 한국의 대응 방안 도출	• 중국 태평양 도서국 협력 전략 분석 • 주요국별(미국, 호주, 일본 등) 중국 대태도국 전략에 대한 대응 전략 • 태도국 입장 검토 •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 과제명: 중국의 태평양 도서국 정책 - 타이완의 국제적 고립화 전략을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설규상 외(2019) • 연구목적: 중국의 태평양 도서국 대상 타이완의 국제적 고립 강화 전략 분석 및 중국과 타이완 간 외교 경쟁 변화 평가	• 중국의 태평양 도서국 전략 분석 • 타이완 대응 사례 분석 • 태평양 도서국 입장 분석 •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 과제명: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 확대와 미·호 전략적 대응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 연구자(연도): 조원득(2023) • 연구목적: 중국의 남태평양 지역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호주 전략 대응 분석, 향후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평가, 한국에의 시사점 도출	•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 현황 • 미국 대응 사례 • 호주 대응 사례 • 태평양 도서국 입장 분석 •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 과제명: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한-태평양 도서국 중장기 협력 방안 • 연구자(연도): 최인아 외(2023) • 연구목적: 우리나라와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환경 분석 및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연계한 중장기 협력 방안 도출	• 태평양 도서국 협력 환경 • 주요국(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중국)의 대태도국 협력 전략 분석 •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태평양 도서국 협력 연계 방안 •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 과제명: 윤석열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따른 태평양 도서국(太平洋島嶼國) 접근 전략 연구	• 태평양 도서국 협력 환경 • 윤석열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분석

연구 제목 및 목적	주요 내용
- 연구자(연도): 박영민 외(2023) - 연구목적: 한국의 태평양 도서국 접근 전략 분석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된 협력 방향 도출	- 주요국(미국, 중국, 일본, 호주)의 대태평양 도서국 전략 비교 - 한국의 태평양 도서국 접근 전략 제안 -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 과제명: 한국과 일본의 원조 결정요인 연구 - 남태평양 도서국을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정수나(2018) - 연구목적: 한국과 일본의 남태평양 도서국 원조 결정요인 비교 분석을 통해 두 국가의 원조 전략 및 정책적 차이 도출	- 한국과 일본의 원조 결정요인 도출 (어업자원, 무역, 외교) -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 과제명: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 연구자(연도): 전혜은 외(2025) - 연구목적: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의 성과와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협력국 및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전략 도출	- 국내외 해양수산 정책 분석 - 국내 해양수산 ODA 현황 분석 및 수요 분석 - 해양수산 특화 국제개발협력 모델 사업(안) -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성과 관리 체계 개선(안)

자료: 저자 작성

2) 국외 연구

국외에서 수행된 군소도서국 관련 연구는 국내 연구에 비해 협력 분야의 다양성과 정책연계성, 실증 기반 분석이 보다 풍부하게 나타났다. 특히, 국제기구와 주요 연구자들은 군소도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달성, 기후변화 대응, ODA 정책 개선, 구조적 취약성 측정 및 대응 전략 등 실질적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왔다.

UN-OHRLLS(2014)의 SIDS Accelerated Modalities of Action(S.A .M.O.A. Pathway)은 군소도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전략과 실행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 OECD는 군소도서국 대상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군소도서국의 특수성에 관점을

두고 전반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으며(OECD, 2018), 2024년에는 군소도서국의 ODA 졸업과 다차원 취약성(MVI) 대응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강조하였다(OECD, 2024a). Uitto et al.(2017)의 연구는 태평양과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의 정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평가(M&E)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Petzold et al.(2019)은 군소도서국만이 아니라 유사한 취약성을 가진 다른 소규모 섬 지역을 포괄하는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수산 및 해양자원 분야 협력 전략을 다룬 McManus et al.(2019)의 연구는 영국의 Blue Belt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군소도서국 수산자원 보전 ODA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Vollmer et al.(2024)은 군소도서국 농어촌 지역을 위한 다차원 빈곤지수(MPI: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재설계 모델을 제안하여 계량 기반 정책 설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태평양 도서국 포럼(Pacific Islands Forum, 이하 PIF)(2022)의 ‘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은 태평양 도서국의 장기적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한 권역 주도형 로드맵으로 주목받는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별(태평양-카리브-인도양) 차이와 주제별(기후, 경제, 해양, 빈곤, ODA 졸업 등) 대응 필요성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국제적 정책 논의와 연계된 실행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국내 연구들이 주로 전략 경쟁이나 정성적 분석에 치우친 것과 비교될 때 수요 기반 협력 전략 수립과 성과 측정 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1-2〉 본 연구의 주요 국외 선행연구

연구 제목 및 목적	주요 내용
• 과제명: SIDS Accelerated Modalities of Action(S.A.M.O.A.) Pathway • 연구자(연도): UN-OHRLLS(2014) • 연구목적: 군소도서국(SIDS)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및 실행 방안 제시	•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의 연계방안 • 기후변화, 해양 및 수산 자원 보호, 재난 위험 관리, 경제적 회복력 강화 등의 이슈 분석 • 국제기구 및 주요국 간 협력 통한 실행 전략 제시

연구 제목 및 목적	주요 내용
• 과제명: Making Development Co-operation Work for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 연구자(연도): OECD(2018) • 연구목적: 군소도서국이 직면한 개발환경 특수성 고려하여 효과적인 개발협력 방안 도출 및 ODA 활용과 혁신적 지원 수단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군소도서국 개발 환경 분석 • 개발 자원 현황 • ODA 및 국제협력 현황 • 효과적인 개발협력 방안
• 과제명: Climate change: thinking small islands beyo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 연구자(연도): Petzold & Magnan(2019) • 연구목적: 군소도서국 포함 소규모 섬 지역 전반의 기후변화 취약성 및 적응 방안 연구	• 군소도서국 및 소규모 섬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 정책적 시사점(군소도서국만이 아닌 기타 소규모 섬 지역 포함, 기후변화 적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적·국제적 협력 필요성 강조)
• 과제명: Commonwealth SIDS and UK Overseas Territories sustainable fisheries programmes • 연구자(연도): McManus et al.(2019) • 연구목적: 영연방 군소도서국 및 영국 해외 영토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개발을 위한 ODA 역할 분석	• ODA 활용 지속가능 수산업 및 양식업 개발 프로젝트 사례 검토 • 해양 생물 다양성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방안 분석 • 영국 정부의 ‘Blue Belt’ 프로그램을 통한 SIDS 지원 현황 평가
• 과제명: Evalu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Lessons from the Pacific and the Caribbean • 연구자(연도): Uitto et al.(2017) • 연구목적: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의 지속가능발전 평가 및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구축	•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군소도서국의 정책적 노력 평가 • 기존 모니터링 및 평가(M&E) 시스템 분석을 통한 개선 사항 제안 • 향후 추진 방향(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개발 프로그램 실행 강조 등)
• 과제명: Helping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graduate to success • 연구자(연도): OECD(2024b) • 연구목적: 군소도서국이 고소득국가로 성장함에 따라 ODA 수원국에서 졸업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 기존 체계에 따른 군소도서국 ODA 수원국 졸업 시스템 현황 분석 • 다차원 취약성 지수(MVI)를 활용한 SIDS의 지원 필요성 제시 • 성공적인 ODA 수원국 졸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제안
• 과제명: 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 • 연구자(연도): PIF(2022)	• 2050년까지 태평양 지역의 경제·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제시 • 정치적 리더십, 경제 개발, 해양 보호, 기술 발전 등의 핵심 과제 제시

연구 제목 및 목적	주요 내용
연구목적: 태평양 도서국의 장기적 지속가능 발전 전략 수립	태평양 공동체의 협력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방안 논의
- 과제명: The Decade of Action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Measuring and Addressing SIDS' Vulnerabilities to Accelerate SDG Progress - 연구자(연도): Sachs et al.(2019) - 연구목적: 군소도서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측정하고 SDG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다차원 취약성 지수(MVI) 개발	- 군소도서국의 구조적 취약성(소규모 경제, 기후위험, 원격성 등)이 SDG 달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대서양/인도양 군소도서국,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태평양 군소도서국 간의 취약성 차이 분석 - COVID-19 팬데믹이 군소도서국 경제(관광·송금 의존) 및 SDG 달성에 미친 영향 평가 - 국제 금융 메커니즘(ODA, 채무경감, 혁신적 재원조달)의 필요성 강조
- 과제명: The Rural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Applied to 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 - 연구자(연도): Vollmer et al.(2024) - 연구목적: 농촌 빈곤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기존 다차원 빈곤지수(MPI)를 군소도서국의 농촌 현실에 맞게 조정	- FAO-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OPHI) 데이터 활용 다차원 빈곤지수(MPI) 조정 - R-MPI 적용 키리바시 및 마셜제도 농촌 빈곤율 측정 결과 - 정치적 리더십, 경제 개발, 해양 보호, 기술 발전 등의 핵심 과제 제시 - 태평양 공동체의 협력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방안 논의
- 과제명: More Than Just SIDS: Local Solutions for Global Problems on Small Islands - 연구자(연도): Petzold et al.(2024) - 연구목적: 군소도서국만 아니라 다양한 소규모 섬들이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분석	- 섬 내부의 정치·경제적 관계(중심-주변 관계, 지역 네트워크 등)가 기후변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책적 제언(군소도서국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섬 지역의 대응 전략 수립 필요, 개별 섬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필요 등)
- 과제명: Alternative Development Strategies for SIDS: Building Competitiveness in New Industries - 연구자(연도): Terauds et al.(2021) - 연구목적: 군소도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대체적 개발 전략 제시 및 정책 방향 제안	- 군소도서국의 취약성과 회복력 구축 필요성 분석 - 대체 경제 개발 전략 도출 - 경제 개발 전략 실행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 저자 작성

2.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군소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해양수산 국제협력 전략 수립에 있어,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요 기반 실행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기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온 카리브해 군소도서국까지 분석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지역적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태평양 도서국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 경쟁 구도나 지정학적 시사점 중심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카리브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태평양과 카리브해 권역을 병행 분석하여, 지역별 협력 수요와 정책 환경의 이질성을 고려한 권역 맞춤형 협력 전략을 도출한다.

둘째, 기존 연구가 공여국 중심 전략 비교나 구조적 취약성 진단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군소도서국이 현장에서 제기한 해양수산 협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해양쓰레기 관리, IUU 어업 대응, 수산 인프라 구축, 연안생태계 보존, 해양 기반 에너지로의 전환 등 협력 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모델을 설계한다.

셋째, 협력 전략 수립에 있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기존 ODA 사례의 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는 기존 국내 연구에서 부족했던 실증적 평가 기반을 보완하고, 향후 정책 환류 체계를 고려한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장에서 확인된 수요를 반영하고 전략의 실효성을 높인다. 연구 범위는 협력 수요가 명확히 파악된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으로 한정하되, 조사 내용의 깊이와 정책 연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단순한 협력 방향 제시를 넘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국제협력 정책이 실질적 실행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성과 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02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분야 현황 및 도전과제

제1절 권역별 특성과 일반현황

1. 정의 및 권역별 구분²¹⁾

군소도서국은 UN 지역위원회 산하 39개 회원국과 18개의 준회원국으로 구성되며²²⁾, 사회·경제·환경적으로 독자적이고 심각한 취약성을 지닌 국가군으로 정의된다. 군소도서국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환경 및 개발에 있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군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바 있다.²³⁾ 군소도서국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평균적으로 자국 국토 면적의 28배에 달하므로 해양자원이 국가 경제의 핵심을 이룬다.²⁴⁾ 군소도서국에는 세계 인구의 1%

21) UN(a), About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검색일: 2025.6.18.)

22) UN(b), List of SIDS(검색일: 2025.6.23.)

23) UN(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io de Janeiro, Brazil, 3-14 June 1992(검색일: 2025.5.25.)

24) UN(a), About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검색일: 2025.6.18.)

미만에 해당하는 약 6,5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고립성, 경제 기반의 불안정성,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한 높은 취약성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다각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²⁵⁾

군소도서국은 지리적으로 카리브해 지역(Caribbean), 태평양 지역(Pacific), 그리고 대서양·인도양·남중국해 지역(AIS: Atlantic, Indian Ocean and South China Sea)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태평양 군소도서국과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룬다.

2. 권역별 일반 현황

1) 태평양

(1) 구분 및 주요 특징

UN에서 군소도서국으로 규정한 태평양 도서국은 총 14개국으로 12개의 독립국과 2개의 뉴질랜드 자치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²⁶⁾, 지리·문화적 기반에 따라 멜라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등 세 권역으로 구분된다.²⁷⁾

태평양 군소도서국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들은 영토와 인구 면에서 소규모 섬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군소도서국에 속하는 39개 UN 회원국 중 태평양 군소도서국은 12개국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각국이 다른 국가와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²⁸⁾ 아울러,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 위치함과 동시에

25) 위의 문서

26) 동티모르는 UN 분류상 태평양 도서국에 포함되나, 우리나라 정부 및 대외정책 문서에서는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로 분류되며, 멜라네시아·마이크로네시아·폴리네시아 중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태평양 도서국에서 제외하였음

27) 외교부(2023a), pp. 10-11.

28) 박나연·김영선(2022), p. 5.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상 물류의 주요 회랑이자, 동·서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광대한 EEZ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제적으로 활용하여 해양자원, 특히 참치 등 원양어업 중심의 수산자원 활용을 통해 외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 안보를 연계하는 지역 공동 대응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표 2-1〉 태평양 군소도서국의 구분과 주요 특징

구분	해당 국가	주요 특징
멜라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피지,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 토착민 대부분 곱슬머리와 어두운 피부 • 화산섬과 광범위한 열대림 분포 • 풍부한 수자원과 삼림자원 • 부족장 중심의 강한 공동체 결속
마이크로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마셜제도, 팔라우, 키리바시, 나우루	• 작은 섬들이 넓은 바다에 분포 • 멜라네시아계, 폴리네시아계, 필리핀계가 혼재 • 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신탁통치 영향으로 일본 문화 영향과 일본 개발사업 활발
폴리네시아	투발루, 사모아, 통가, 쿡제도, 니우에	• 토착민 대부분 큰 키, 갈색 피부, 곱슬머리 • 대만·멜라네시아계 이주민 구성 • 전통 해양 문화 보존 • 태평양 도서국 중 비교적 경제 수준과 기술력이 우수

자료: 외교부(2023a), p.10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러나 내수시장의 불안정성과 교통 기반의 제약,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한 재해 빈도 증가 등으로 경제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지역기구인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태평양 공동체(SPC: Pacific Community, 이하 SPC)²⁹⁾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식량안보, 보건, 통계, 교육 등 다차원적 개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³⁰⁾

29) 태평양공동체(Pacific Community, 약칭 SPC)는 태평양 도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지역 간 협력기구로, 수산, 보건, 교육, 기후변화 등 다분야에서 기술 협력, 연구, 정책 자문 등 기능을 수행함. 본 기구는 과거 South Pacific Community(SPC)로 알려졌으나, 1997년 지역적 포용성과 정체성을 반영하여 Pacific Community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2015년부터 해당 명칭이 법적 명칭으로도 공식 채택되었으며, 지역 내 널리 알려진 약칭인 SPC는 계속 사용되고 있음. Pacific Community의 약칭으로 PC는 사용하지 않음. SPC, History(검색일: 2025.6.24.)

30) SPC(2025)(검색일: 2025.6.24.)

(2) 일반 현황

태평양 군소도서국은 면적과 인구는 작지만, 방대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자원 관리와 수산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해당 국가들은 폴리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지리적 위치뿐 아니라 언어, 문화, 역사 및 정치 체제의 차이에 따른 구분으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네시아에는 미국의 자유 연합협정(COFA: Compact of Free Association) 체결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³¹⁾ 미국과의 제도적 연계성이 강하며, 멜라네시아는 상대적으로 인구 및 자원 규모가 크고 개발 수요가 많다. 폴리네시아는 문화적 유사성과 관광 중심의 경제구조, 소규모 경제의 특징이 뚜렷한 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지역 구분은 각 권역의 정책 수요와 협력 방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다수의 토착어와 영어를 포함한 공용어가 혼재하는 복합적인 언어 환경을 갖고 있어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미친다.

키리바시,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등은 EEZ 규모가 200만 km² 이상으로 매우 넓으며, 피지,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등은 인구와 경제 규모 측면에서 비교적 중견급 국가로 평가된다. 이러한 태평양 군소도서국의 다양성은 지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의 필수성을 보여준다.

〈표 2-2〉 태평양 군소도서국 일반 현황(2023년 기준)

국가명	면적(km ²)	인구(명)	언어	지역 구분	EEZ(km ²)
쿡제도	236	7,761	영어(공용어), 쿡 아일랜드 마오리어 (공용어), 기타	폴리네시아	1,960,027
피지공화국	18,274	951,611	영어(공용어), 이타우케이(공용어), 피지 힌두어(공용어)	멜라네시아	1,281,703
키리바시공화국	811	116,545	키리바시어, 영어(공용어)	마이크로네시아	3,437,132

31)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검색일: 2025.6.28.)

국가명	면적(km ²)	인구(명)	언어	지역 구분	EEZ(km ²)
마셜제도공화국	181	82,011	마셜어(공용어) 외	마이크로네시아	1,992,022
마이크로네시아	702	99,603	영어(공용어) 외	마이크로네시아	2,996,415
나우루공화국	21	9,892	나우루어(공용어) 외	마이크로네시아	308,506
니우에	259	1,681	니우에어(공용어), 니우에 영어, 영어(공용어) 외	폴리네시아	316,584
팔라우공화국	459	21,864	팔라우어(공용어), 영어(공용어) 외	마이크로네시아	604,253
파푸아뉴기니 독립국	462,840	10,046, 233	토크피진어(공용어), 영어(공용어), 히리모투어(공용어), 기타	멜라네시아	2,396,575
사모아독립국	2,831	208,853	폴리네시아인 사모아어 (공용어), 영어(공용어), 기타	폴리네시아	131,535
솔로몬제도	28,896	726,799	멜라네시아인 피진어 (다수어), 영어 (공용어, 소수), 기타	멜라네시아	1,596,464
통가왕국	747	104,889	통가어, 통가어계 합성어, 토착 통가어	폴리네시아	664,751
투발루	26	11,733	투발루어(공용어), 영어(공용어), 사모아어, 키리바시어(뉴이어)	폴리네시아	751,672
바누아투공화국	12,189	318,007	비스라마어(공용어), 영어(공용어), 프랑스어(공용어)	멜라네시아	827,626

자료: CIA(2025), The World Fact Book(검색일: 2025.6.10.); Sea Around Us(2025), Sea Around Us Global Fisheries Catch Data(EEZ)(검색일: 2025.6.9.) 데이터 바탕으로 저자 작성

태평양 군소도서국은 대부분 1인당 실질 GDP가 3,000~7,000달러 수준으로 낮고, 국가 경제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투발루(79.85%), 통가(54.26%), 마셜제도(48.21%) 등은 ODA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외부 지원의 영향력이 크다. 국가별 차이도 상당한데, 예를 들어, 파푸아뉴기니는 GDP 규모는 크지 않지만 ODA 비중은 2.22%로 낮고, 팔라우는 1인당 GDP는 높으나 ODA(21.51%)와 FDI 의존도(16.97%) 또한 높아 경제 구조적 특성이 다르다.

〈표 2-3〉 태평양 군소도서국 경제 현황(2023년 기준)

국가명	1인당 실질 GDP(달러)	ODA 수혜금액 (달러)(2022)	국가 경제에서 ODA 비율(%)	GDP 대비 FDI 투자유입 비중(%)
쿡제도	15,600	-	-	-
피지공화국	13,700	358,049,988	7.61(2022년)	1.67
키리바시공화국	3,200	91,099,998	22.06(2022년)	1.83
마셜제도공화국	6,800	140,339,996	48.21(2022년)	0.79
마이크로네시아	3,900	150,389,999	31.46(2022년)	-
나우루공화국	12,500	35,490,002	13.95(2022년)	-
니우에	11,100	-	-	-
팔라우공화국	15,800	55,669,998	21.51(2022년)	16.97
파푸아뉴기니독립국	4,200	661,169,983	2.22(2022년)	0.27
사모아독립국	6,300	126,269,997	15.54(2022년)	0.26
솔로몬제도	2,500	252,729,996	16.05(2022년)	4.83
통가왕국	6,900	295,049,988	54.26(2022년)	0.56(2022년)
투발루	5,800	63,560,001	79.85(2022년)	0.27
바누아투공화국	3,100	125,059,998	10.6(2022년)	0.82

자료: CIA(2025), The World Fact book(검색일: 2025.6.10.); World Bank Group(2025),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25.6.19.); UNCTADstat 데이터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25.6.19.)

2) 카리브해

(1) 구분 및 주요 특징

군소도서국에 포함된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총 16개국³²⁾으로, 이 중 14개국이 카리브해 지역 국가 간 경제통합과 대외정책 조율을 위해 설립된 카리브공동체(CARICOM: Caribbean Community, 이하 CARICOM)에 정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³³⁾

32) UN(b), List of SIDS(검색일: 2025.6.23.)

33) 외교부(2023b), pp. 4-5.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미주·유럽·남미를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미국·영국 등과 역사적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최근 미국의 관심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인프라 투자 및 개발금융을 확대하며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³⁴⁾

카리브해 도서국은 경제적으로 관광업, 농수산물 수출, 금융 서비스 등에 기반한 좁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³⁵⁾ 이에 따라 CARICOM은 역내 단일시장·경제권 구축, 무역 장벽 완화, 노동력 이동 촉진 등을 통해 경제통합을 강화하고 있다.³⁶⁾

〈표 2-4〉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및 CARICOM 회원 여부

국가	CARICOM 회원국 해당 여부
가이아나	○
그레나다	○
도미니카공화국	×
도미니카연방	○
바베이도스	○
바하마	○
벨리즈	○
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세인트키츠 네비스	○
수리남	○
앤티가바부다	○
아이티	○
자메이카	○
쿠바	×
트리니다드 토바고	○

자료: UN(b), CARICOM 개황(2023), p.4 바탕으로 저자 작성

34) Waqavakatoga, W. et al.(2024), pp. 14-18.

35) 외교부(2023b), pp. 13-17.

36) 외교부(2023b), pp. 13-17.

(2) 일반 현황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대부분 인구 100만 명 이하의 소규모 국가로, 언어·문화적 다양성이 매우 크며,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크레올어 등 다양한 언어가 혼용되고 있다. 또한, EEZ 면적 대비 육지 면적이 작아 해양자원 의존도가 높은데, EEZ 규모는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가이아나 등이 상대적으로 크다. 국가 간 경제규모, 언어, 역사적 배경 등이 상이하여 일률적 접근보다는 다층적 지역 맞춤형 협력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표 2-5〉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일반 현황(2023년 기준)

국가명	면적(km ²)	인구(명)	언어	EEZ(km ²)
앤티가바부다	443	102,634	영어(공용어), 앤티구안 크레올어	107,939
바하마	13,880	410,862	영어(공용어), 아이티계 크레올어	628,026
바베이도스	430	304,139	영어(공용어), 바잔어	183,773
벨리즈	22,966	415,789	영어(공용어), 스페인어, 크레올어, 마야어, 독일어, 기타	36,182
쿠바공화국	110,860	10,966,038	스페인어(공용어)	364,511
도미니카연방	751	74,661	영어(공용어), 프랑스어	28,593
도미니카공화국	48,670	10,815,857	스페인어(공용어)	269,489
그레나다	344	114,621	영어(공용어), 프랑스어	26,133
가이아나공화국	214,969	794,099	영어(공용어), 가이아나 크레올어, 아메리카 토착어, 기타	140,369
아이티공화국	27,750	11,753,943	프랑스어(공용어), 크레올(공용어)	123,525
자메이카	10,991	2,823,713	영어, 자메이카 방언	263,284
세인트키츠네비스연방	261	55,133	영어(공용어)	10,209
세인트루시아	616	168,038	영어(공용어), 세인트루치안 크레올어	15,472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389	100,647	영어, 빈센티안 크레올어, 프랑스어	36,304

국가명	면적(km ²)	인구(명)	언어	EEZ(km ²)
수리남공화국	163,820	646,758	네덜란드어(공용어), 영어(다수어), 스라낭 통고어 (수리남어계 크레올어), 기타	127,817
트리니다드토바고 공화국	5,128	1,408,966	영어(공용어), 트리니다디안 크레올 영어, 토바고니안 크레올 영어, 캐리비안 힌두어, 기타	79,798

자료: CIA(2025), The World Fact Book(검색일: 2025.6.10.); Sea Around Us(2025), Sea Around Us Global Fisheries Catch Data(EEZ)(검색일: 2025.6.9.) 데이터 바탕으로 저자 작성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의 경제 수준은 국가 간 편차가 상당한데, 1인당 실질 GDP는 3,000달러(아이티)에서 49,300달러(가이아나)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매우 크다. 다수 국가에서 ODA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도미니카연방(9.77%)과 아이티(4.39%)는 비교적 높은 의존도를 보인다.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비중은 앤티가바부다(16.13%)와 그레나다(16.71%)가 두드러진다.

〈표 2-6〉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경제 현황(2023년 기준)

국가명	1인당 실질 GDP(달러)	ODA 수혜금액 (달러)(2022년)	국가 경제에서 ODA 비율(%)	GDP 대비 FDI 투자유입 비중(%)
앤티가바부다	29,000	6,140,000 (2021년)	0.4 (2021년)	16.13
바하마	33,100	-	-	2.25
바베이도스	19,200	-	-	3.35
벨리즈	12,500	20,379,999	0.75(2022년)	0.52
쿠바공화국	12,300	137,490,005	0.49(2019년)	-
도미니카연방	17,400	59,520,000	9.77(2022년)	7.28
도미니카공화국	23,100	367,000,000	0.34(2022년)	3.91
그레나다	16,900	-93,639,999	-8.19(2022년)	16.71
가이아나공화국	49,300	198,979,996	2.23(2022년)	-6.61
아이티공화국	3,000	890,719,971	4.39(2022년)	0.12
자메이카	10,300	95,139,999	0.57(2022년)	1.94

국가명	1인당 실질 GDP(달러)	ODA 수혜금액 (달러)(2022년)	국가 경제에서 ODA 비율(%)	GDP 대비 FDI 투자유입 비중(%)
세인트키츠네비스 연방	30,400	-	-	2.93
세인트루시아	23,400	33,410,000	1.56(2022년)	5.08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18,300	15,490,000	1.62(2022년)	6.94
수리남공화국	19,000	54,779,999	1.57(2022년)	-1.54
트리니다드토바고 공화국	31,700	-	-	-5.68

자료: CIA(2025), The World Fact book(검색일: 2025.6.10.); World Bank Group(2025),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25.6.19); UNCTADstat Data centre(검색일: 2025.6.24.)
데이터 참조 저자 작성

제2절 권역별 해양수산 현황

1. 태평양

1) 수산

태평양 군소도서국은 국가별로 주요 어업 형태와 생산량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어획 중심의 수산업이 발달한 국가는 파푸아뉴기니,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나우루 등으로, 이들 대부분은 EEZ 기반의 원양어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수산물 수출 비중도 높은 편이다. 양식업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피지, 통가 등이며, 팔라우, 투발루 등에서도 소규모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수산물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수출이 활발한 국가는 파푸아뉴기니, 마셜 제도, 키리바시, 피지 등이다. 수산물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조사

대상국(파푸아뉴기니, 키리바시, 피지,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제도, 투발루 등)이 수출액이 수입액을 상회하는 흑자 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파푸아뉴기니와 키리바시 등은 큰 폭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수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키리바시(64.6%), 투발루(60.1%), 마이크로네시아(40.2%), 마셜제도(29.9%) 등에서 높게 나타났고, 팔라우(0.16%), 통가(0.6%), 사모아(0.9%)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 현황은 <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7〉 태평양 군소도서국 수산물아 현황(2019~2023년)

국가 명	어획생산량(톤)						양식생산량(톤)						수산물 수출액(천 USD)						수산물 수입액(천 USD)						수산물 GDP 기여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쿡제도	5840.64	2651.61	5479.32	6461.6	3941.77		8.5	8.5	8.5	8.5	8.5		1989.2	1701.025	1837.497	1845.024	1446.853	1	7	3	3	4								
피지 공화국	4169.887	3759.712	3300.948	3262.62	3241.343		305	322.3	206.1	211	542.3		1188.5614	1217.9888	8245.467	8245.367	1081.357	5	374	0.97	2278.383	6.62	2.13	2.24	2.23	1.9	2.2			
키리바시 공화국	2386.9932	2127.543	1911.3054	2032.9405	2391.8116		2	2	2	2	2		1703.33	1738.9804	1719.0945	1518.9313	1749.2917		1049.525.6	22	74	1753.1263	72	72	14			52.5	64.6	
마셜제도 공화국	1015.5616	8818.992	9581.907	9163.63	7393.57		0.07	9.66	2.12	25.84	2.96		7302.1	9009.008	6543.554	7159.494	7587.1	3826	2498.42	14	84	6088.89	33.2	38.7	27.1	27.7	29.9			
마이크로네시아	1815.6913	1936.6943	1661.151	1782.3534	1626.6178		0.5	0.5	0.5	0.5	0.5		1156.87	1255.0666	1266.3123	1736.8991	1727.9743		5331.4412	23	12	1981.55	29.5	31.9	34.0	44.5	40.2			
나우루 공화국	3352.5	9238.8	1204.09	1067.50	1032.33		0.3	0.5	0.5	0.5	0.5																			
나우에	38	34	38	37	39																									
팔라우 공화국	3932.95	776	824	813.07	803.31		17	15	11.2	10	11		1549.65	2944.2	407.04	409.62		518	568.2	1	333.05	282.86	0.33	0.55	0.11	0.17	0.16			
파푸아 뉴기니 독립국	3050.3658	2235.1981	93.47	2446.1206	2291.8395		2271	2322	2342	2462	2552		5281.31	5174.7728	3767.552	3576.2522	4028.9904	6	1.55	2.47	0.94	8.73	2.19	2.09	1.58	1.37	1.27			
사모아 독립국	1117.2	9953.04	9153.21	9989.24	1036.055		15.3	10.01	10	10	13.25		1312.5	1592.205	1055.425	6955.62	7576.88	5900.5	5564.38	6528.07	6109.52	6728.09	1.49	1.74	1.21	0.82	0.90			
솔로몬 제도	6827.388	4087.767	4981.203	4789.509	4006.115		5607	5507	1246.374	1187.93	710.13		6029.6	6286.875	3525.231	4548.829	5411.486	963	1205.23	1098.33	1192.89	1140.86	3.73	3.88	2.29	2.99	3.5			

국가 명	어획생산량(톤)						양식생산량(톤)						수산물 수출액(천 USD)						수산물 수입액(천 USD)						수산물 GDP 기여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통기양국	1212.61	1097.12	1115.21	1326.03	1144.14		90	105.2	100	100	100		4570.48	2465.9	4028.83	3320.42			1384	1765.95	1418.39	1678.06	1301.42	0.84	0.92	0.5	0.78	0.6		
투발루	8357.28	1129.5	3108.651	4278.1	4897.9		0.4	0.4	0.2	0	0.25		1664.3	1074.494	9634.4	1832.62	3550.94		127	31.93	48.57	39.99	25.17	34.66	19.85	18.62	30.44	60.1		
바누아투 공화국	5718.439	6386.349	7007.054	8491.533	6891.757		16.18	3.08	3	4	5		1227.74	1033.2554	1222.6292	1621.535			2413	3157.27	3053.89	3079.69	3079.59	13.42	11.03	13.44	12.88	15.9		

자료: FAO, FishStatJ 자료(검색일: 2025.5.23.)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해양·관광

태평양 군소도서국의 관광 및 해양보호구역 현황도 국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관광 유입 통계에서 피지는 2019년 약 894천 명이 방문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32천 명까지 급감했으나, 2022년에는 636천 명으로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다. 그 외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바누아투 등도 팬데믹 이전 십만 명 단위의 유입을 기록했으나, 투발루는 2022년 기준 0.24천 명(약 240명)이 방문하는 등 연간 천 명 미만의 소규모 유입에 그쳤다. 관광 고용 현황의 경우, 마셜제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0.4천 명 수준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교통 이용 현황에서는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사모아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표를 보였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팬데믹 시기인 2020~2021년에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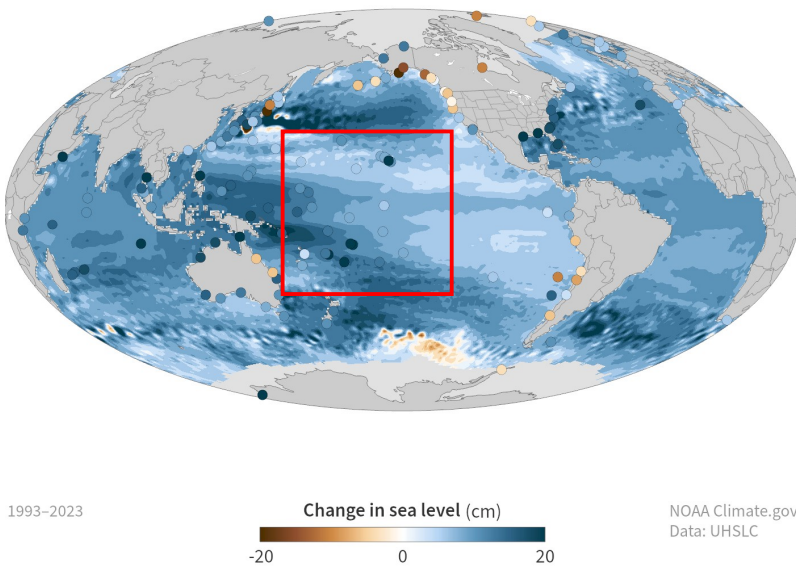
영해 내 해양보호구역 비중은 팔라우가 2020~2023년까지 100%를 유지하다 2024년 98%를 기록하는 등 독보적으로 넓은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키리바시는 약 11.8~11.9% 수준을 유지했으며, 피지(0.9%), 마셜제도(0.3%), 사모아(0.1~0.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마이크로네시아, 나우루, 투발루, 바누아투 등은 보호구역 비중이 0%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면 상승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서 태평양 지역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약 4mm씩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약 3.4mm)을 초과했으며, 해양 온난화 현상과 해양 산성화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³⁷⁾ 또한, 해수면 상승의 장기적 영향으로 만조 홍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2023~24년 기상 연도 동안 평균 13일의 홍수 일수를 경험했다. 2025년 태평양 도서국 지역은

37) WMO(2025), pp. 6-7.

5일에서 16일의 만조 홍수 일수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모든 지역 중 가장 큰 예측치이다.³⁸⁾

〈그림 2-1〉 태평양 지역 해수면 높이 변화 추이(1993~2023년)
SEA LEVEL CHANGE (1993-2023)



자료: NOAA Climate.gov, Climate Change: Global Sea Level(검색일: 2025.8.1.)

38) NOAA(2025), Annual High Tide Flooding Outlook, p. 9(검색일: 2025.7.18.)

〈표 2-8〉 태평양 군소도서국 해양·관광 분야 현황(2019~2023년)

국기명	관광유입통계(천 명)						관광고용현황(천 명)						관광교통이용현황(천 명)						영해 중 해양보호구역 비중(%)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쿡제도	169	172	25	26	114	.	.	.	.	.	.	.	.	.	.	.	.	.	.	.	.	.	.	.	.	.
피지공화국	870	894	147	32	636	60.9	61.4	62.3	.	.	.	.	.	.	.	.	.	.	.	.	.	0.9	0.9	0.9	0.9	0.9
키리바시 공화국	7.1	7.9	1.4	0.1	1.8	0.5	.	0.5	.	0.3	9.0	12.0	1.4	0.1	.	11.8	11.8	11.8	11.8	11.8	11.8	11.8	11.8	11.8	11.9	
마셜제도 공화국	.	.	.	.	.	0.4	0.4	0.4	0.4	0.4	6.8	6.1	1.2	0.0	.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마이크로네시아연방	.	.	.	.	.	0.8	0.8	.	.	.	.	.	.	.	.	.	0	0	0	0	0	0	0	0	0	
나우루공화국	.	.	.	.	.	.	.	.	.	.	.	.	.	.	.	.	.	.	.	.	.	.	.	.	.	
나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팔라우공화국	106	94	18.4	.	.	.	.	.	.	.	106	94	18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8	
파푸아뉴기니 독립국	195	211	39	17	69	.	.	.	.	.	195	211	39	17	69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사모아독립국	172	181	24	3	50.5	.	.	.	.	.	172	181	24	3	50.6	0.1	0.1	0.1	0.1	0.1	0.1	0.1	0.1	0.1	0.2	
솔로몬제도	27.9	28.9	4.4	0.7	.	.	.	.	.	.	28	29	4.4	0.7	.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통가왕국	54.0	67.3	9.0	0.2	18.4	.	.	.	.	.	77	94	12	0	22.3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투발루	3.1	3.7	0.6	0.0	0.24	.	.	.	.	.	3.1	3.7	0.6	0.0	0.2	0	0	0	0	0	0	0	0	0	0	
바누아투 공화국	116	121	21.9	.	30	.	.	.	.	.	350	256	82	.	65	0	0	0	0	0	0	0	0	0	0	

자료: UN Tourism(2025), Tourism Statistics(검색일: 2025.6.9.) 및 해당 데이터원 내 INBOUND TOURISM(검색일: 2025.6.19.); World Bank Group (2025),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25.6.19.) 데이터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해운·항만·기초인프라

태평양 군소도서국은 식수, 해상 운송, 도로 인프라 등 기본 인프라 수준에서 국가 간 격차가 매우 큰 양상을 보였다. 식수 접근성의 경우, 팔라우(90.44%)가 가장 높은 안전 식수 보급률을 기록한 가운데 사모아(62.19%), 피지(41.8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가(29.53%), 키리바시(14.41%), 투발루(8.71%)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기초 식수 접근성은 팔라우(99.57%), 투발루(99.26%), 사모아(99.04%) 등 대부분의 국가가 90%를 상회하였으나, 파푸아뉴기니(50.24%)와 솔로몬제도(67.45%)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해상 운송 인프라를 살펴보면, 항만 물동량은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국가 중 파푸아뉴기니(204,518 TEU, 2020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선 보유 척수는 마셜제도(4,180척)가 가장 많았고, 팔라우(427척), 바누아투(338척), 투발루(270척) 등이 뒤를 이었으며, 나우루(6척)는 가장 적었다. 주요 항만은 국가별 물류의 핵심 기반으로, 파푸아뉴기니가 포트모르즈비, 라바울 등 7개 항만을, 피지가 라우토카, 수바 등 5개 항만을 운영하며 해상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 외 솔로몬제도(6개), 바누아투(3개), 키리바시(3개) 등도 여러 항만을 확보하고 있다.

도로 인프라 분석 결과, 도로 총연장은 파푸아뉴기니가 약 89,761km로 가장 길었으며 피지(17,101km), 솔로몬제도(16,252km)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로 밀도(도로 길이/국가 면적) 기준으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나우루는 21km²의 면적에 약 100.68km의 도로를 보유해 1km²당 약 4.8km의 매우 높은 도로 밀도를 기록하였으며, 투발루(약 4.35km/km²) 또한 높은 밀도를 보였다. 반면 파푸아뉴기니는 도로 길이는 가장 길지만 면적 대비 도로 밀도는 약 0.19km/km²에 불과해, 국토 면적 대비 도로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명	전체 인구 중 인전식수접근성(%)										전체 인구 중 기초식수접근성(%)										항만물동량(TEU: 20 foot equivalent units)										상선수 (척)	주요 항만	도로 길이 (2023)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roads (km)	area (km²)
	2018	2019	2020	2021	2022	2022	2021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사모아 독립국	62.02	62.08	62.11	62.15	62.19	95.41	96.42	97.4	98.27	99.04																						2,716.54	2,831	
솔로몬 제도	.	.	.	.	.	67.01	67.15	67.30	67.45	.																						16,252.19	28,896	
통기왕국	29.47	29.48	29.49	29.51	29.53	98.66	98.7	98.74	98.77	98.81																						2,388.08	747	
투발루	8.54	8.58	8.63	8.67	8.71	99.18	99.2	99.22	99.24	99.26																						113.01	26	
바누아투 공화국	.	.	.	.	.	89.64	90.07	90.49	90.91	91.34																						4,523.61	12,189	

자료: World Bank Group(2025),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25.6.19.); UNOCHA(2025), HDX(검색일: 2025.6.19.); CIA(2025), The World Fact Book(검색일: 2025.6.10.) 데이터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에너지

태평양 군소도서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큰 지역이나, 국가별 전력 생산 구조와 접근성에는 뚜렷한 편차가 존재했다.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 비중(2021년 기준)은 사모아(20.38%)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키리바시(16.37%), 투발루(15.84%), 바누아투(14.42%), 통가(14.2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마셜제도(2.43%), 마이크로네시아(3.53%), 파푸아뉴기니(4.67%), 팔라우(4.60%) 등은 여전히 5% 미만의 낮은 비중을 보였다. 키리바시는 2018년 이후 16% 이상의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며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흐름을 보이고 있다.

1인당 CO₂ 배출량(2023년 기준)은 국가 간 격차가 매우 극명하게 나타났다. 팔라우는 1인당 81.21톤으로 타 도서국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피지(2.39톤), 사모아(2.16톤), 통가(2.10톤) 순으로 나타났다.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나우루, 투발루 등은 집계상 0.00톤으로 기록되었다.

전력 접근성(2023년 기준)은 상당수 국가에서 보편적 보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셜제도, 나우루, 팔라우, 사모아, 통가, 투발루는 100%의 접근성을 달성하며 완전 보급을 기록했다. 피지(99.3%)와 키리바시(95.9%)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파푸아뉴기니는 전력 접근성이 20.5%에 불과해 지역 내 에너지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바누아투(61.6%)와 솔로몬제도(81.3%)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급률을 기록했다.

〈표 2-10〉 태평양 군소도서국 에너지 분야 현황(2019~2023년)

국가명	재생에너지 전기생산비율(%)						1인당 CO2 배출량(톤)						전체 인구 중 전력접근성(%)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2020	2023
국제도	.	.	.	.	.	.	.	.	.	.	.	.	.	.	.	.	.	.
피지공화국	7.04	8.57	8.85	9.87	9.96	2.10	2.11	2.21	2.21	2.33	2.39	96.1	97.1	92.1	92	99.3	92	99.3
키리바시 공화국	16.90	17.89	16.37	16.37	16.37	0.68	0.67	0.70	0.70	0.72	0.73	89.3	91	92.8	94.4	95.9	94.4	95.9
마셜제도	2.40	2.43	2.43	2.43	2.43	0.00	0.00	0.00	0.00	0.00	0.00	96.8	98.3	99.8	100	100	100	100
마이크로네시아연방	4.46	4.29	4.71	4.42	3.53	0.00	0.00	0.00	0.00	0.00	0.00	80.1	81.9	83.6	85.3	86.9	85.3	86.9
나우루 공화국	3.13	3.09	3.86	6.69	9.82	0.00	0.00	0.00	0.00	0.00	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니우에	.	.	.	.	.	.	.	.	.	.	.	.	.	.	.	.	.	.
필리핀공화국	3.37	3.59	3.51	3.92	4.60	71.26	71.74	74.73	74.73	78.73	81.2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파푸아뉴기니 독립국	6.78	5.20	4.82	4.60	4.67	0.74	0.61	0.56	0.56	0.57	0.57	23.6	20.5	20.9	19	20.5	19	20.5
사모아독립국	13.54	14.02	14.04	17.92	20.38	1.92	1.93	2.01	2.01	2.10	2.16	99.2	100	98.3	98.3	100	98.3	100
솔로몬제도	6.93	5.55	5.80	5.15	5.69	0.49	0.49	0.50	0.50	0.52	0.52	69.4	72.9	76.3	76	81.3	76	81.3
통가왕국	9.33	10.88	12.71	14.21	14.20	1.79	1.82	1.91	1.91	2.02	2.10	98.4	99.9	100	100	100	100	100
투발루	23.27	19.25	19.23	15.84	15.84	0.00	0.00	0.00	0.00	0.00	0.00	99.7	99.4	99.7	100	100	100	100
바누아투 공화국	11.53	13.85	17.91	17.80	14.42	0.85	0.84	0.86	0.86	0.89	0.90	64.5	67.3	70	71.6	61.6	71.6	61.6

자료: World Bank Group(2025), World Development Indicator 데이터베이스로 저자 작성(검색일: 2025.6.19.)

2. 카리브해

1) 수산

〈표 2-11〉에 따르면, 대부분의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어획에 의존하는 수산물 생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어획 생산량 측면에서 벨리즈(197,660톤, 2023년 기준)가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으며, 가이아나(36,396톤), 수리남(31,870톤), 쿠바(13,416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인트키츠 네비스(675톤), 도미니카연방(369톤) 등은 연간 어획량이 1,000톤 이하에 그쳐 국가 간 생산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양식업의 경우, 조사 대상국의 절반 이상이 연간 생산량 50톤 이하로 산업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쿠바(12,824톤)는 예외적으로 높은 양식 생산 실적을 기록했으나, 그 외 국가들은 어획 대비 양식 비중이 매우 낮아 지역 내 양식 인프라 보급 격차가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산물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벨리즈, 쿠바, 가이아나, 수리남, 바하마 등은 수출액이 수입액을 상회하는 수출 우위 국가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연간 수출액은 약 2,700만 달러에서 6,000만 달러(2022년 기준)에 달해 국제 수산물 시장과의 연계성이 권역 내에서 높은 편이었다. 반면,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등은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였다.

수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수리남(1.6%, 2022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1% 미만에 머물러, 국가 경제 내 수산업의 상대적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특정 수치가 반복적으로 기재되는 등 자료의 연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여 정책 수립 시 데이터 신뢰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표 2-11〉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수산 분야 현황(2019~2023년)

국가명	어획생산량(톤)					양식생산량(톤)					수산물 수출액(천 USD)					수산물 수입액(천 USD)					수산업 GDP 기여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앤티가 바부다	3165	3115	3205	3230	3265	20	20	20	20	20	1234	1408	1652	3038	1190	2344	2013	1680	1716	1841	0.07	0.08	0.12	0.19	0.06				
바하마	1014	7433	8704	9345	8699	6	6	1	1	1	8197	8314	6645	9438	9679	6109	4351	3494	3597	5967	0.65	0.64	0.67	0.83	0.74				
바베이도스	875.1	1033	846.6	855.5	898.5	25.5	25.5	10.5	5.5	5.5	2177	1437	1587	1466	1641	8254	7627	7382	7934	9074	0.04	0.02	0.03	0.03	0.03				
벨리즈	2125	1854	1898	2031	1976	579	524	609	730	880	2107	2410	1919	2614	2713	302.7	231.1	251.8	322.4	410.3	0.92	1.01	0.94	1.08	0.95				
쿠바 공화국	1855	2018	1805	1463	1341	2716	2624	2295	1554	1282	8395	7612	5414	7627	6935	1490	2243	8790	4150	4518	0.08	0.07	0.05	.	.				
도미니카 연방	860.4	527	287.9	290	369	0	0.1	1.5	2.5	2	115.8	54.45	36.1	42.05	28.32	570.9	569.4	491.3	380.0	1	0.02	0.01	0.01	0.01	0.00				
도미니카 공화국	1606	1406	1766	1798	1728	3165	3430	3750	3750	3820	2358	2381	1048	9570	1080	7278	6999	7739	8623	7755	0.03	0.03	0.01	0.01	0.01				
그레나다	2064	1896	1317	1953	3622	22.5	22.5	22.5	26	26	2273	3734	2261	2929	3009	999.5	1005	824.1	917.4	1201	0.19	0.31	0.22	0.26	0.25				
가이아나 공화국	4057	4132	3421	3625	3639	243.0	137.6	141.7	953.4	1565	1108	9885	5488	4120	5096	2616	3549	3543	2073	2630	2.32	1.85	1.00	0.51	0.35				
아이티 공화국	1635	1635	1622	1671	1642	1555	1560	1610	1685	1655	2479	5566	1856	2772	1241	2631	2095	1905	2349	1734	0.15	0.37	0.13	0.13	0.06				
자메이카	1347	1287	1323	1252	1252	1122	926.7	884.2	963.2	970.2	1142	1188	1217	2081	1536	3411	3643	3557	3808	3554	0.07	0.08	0.09	0.14	0.09				

국가명	어획생산량(톤)					양식생산량(톤)					수산물 수출액(천 USD)					수산물 수입액(천 USD)					수산업 GDP 기여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세인트키츠 네비스 연방	662	646.5	672.5	670	675	2.5	3.5	3.5	4	4	276	197.4	195.3	445.3	550.7	584	637.0	721.9	812.2	0.03	0.02	0.02	0.06		
		4	3														9	3	2						
세인트 루시아	1845.	1423.	1574.	1853.	1852.	119.7	91.89	210.7	209.4	157.3	33.79	150.3	1872.	1573.	1158.	2073.	1908.	2021.	1314.	1848.	0.00	0.01	0.12		
	1	83	69	99	6	2		2	3	2		4	1	66	05	83	21	33	83	85			0.08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1971.	2127.	1587.	1251	1311.	0.24	13.07	13	13	13	2491	2941.	5626.	5122.	4772.	498	557.3	411.1	441.1	305.1	0.28	0.32	0.65		
	79	52	28	66	66							68	38	59	21		8	8	5	7			0.59		
수리남 공화국	3138	2977	3213	3369	3187	69.5	37	40	45	45	9896	7979	5746	6019	6057	2367	2597.	2043.	2090.	3059.	2.48	1.99	1.97		
	8	2	0	5	0						7	4.29	6.4	0.68	5.09		18	15	94	27			1.94		
트리니다 드토바고 공화국	1294	1291	1308	1306	1311	54	4.2	18.	7.4	5.5	2141	1818	1633	1443	1133	1138	1113	1113	9766.	1170	0.09	0.08	0.06		
	1.71	2.65	4.17	9.01	1.33						0.11	0.21	4.73	2.53	2.9	9.36	2.72	5.1	54	4.52			0.04		

자료: FAO, FishStatJ 자료(검색일: 2025.5.23.)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해양·관광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의 관광 및 해양보호구역 현황 또한 국가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관광 유입 통계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2018~2022년 연평균 약 600~700만 명), 쿠바(약 400~470만 명, 팬데믹 전 기준), 자메이카(약 250만 명), 바하마(약 140~180만 명) 등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치하는 주요 국가군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미니카연방,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그레나다 등은 연간 유입객이 5~20만 명 이하 수준에 머물러, 상위 국가들과는 최대 100배 이상의 유입량 차이가 존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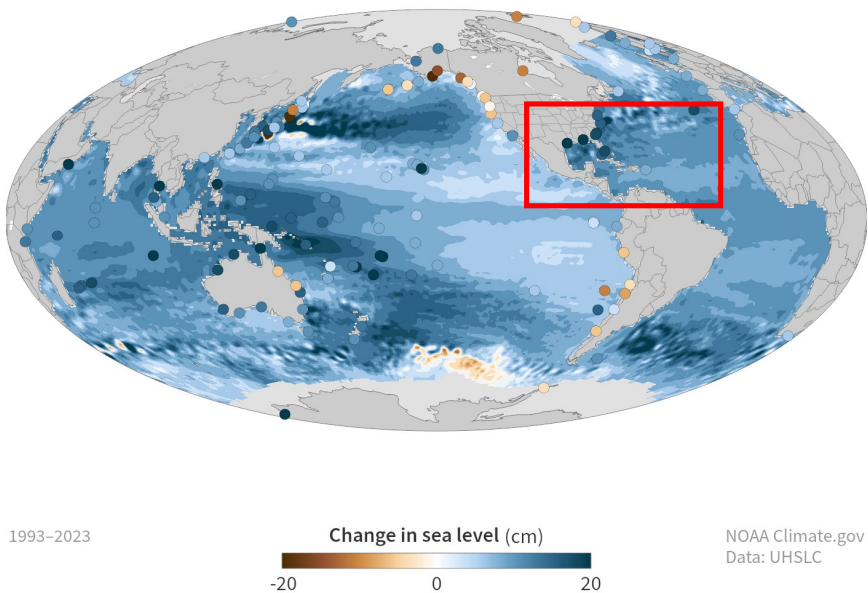
관광 고용 지표의 경우 데이터 확보가 제한적이었으나, 도미니카공화국(2022년 189.6천 명), 트리니다드 토바고(44.1천 명), 벨리즈(15.7천 명) 등은 관련 통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관광교통수단 이용 규모는 권역 내 일부 국가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2022년을 기준으로 도미니카공화국(8,489천 명)과 바하마(7,001천 명)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어 자메이카(3,331천 명)와 쿠바(1,613천 명)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 규모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관광교통수단 이용 규모는 국가별 관광 수용 규모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양보호구역(MPA) 비중은 벨리즈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벨리즈는 2020년 11%에서 2024년 20.4%로 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하며 카리브해 지역 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해양 보호 행보를 보였다. 도미니카공화국은 13~18%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인트키츠네비스(4.5%), 아이티(1.8%)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0~1% 수준의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카리브해 지역도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관찰되었다. 열대 북대서양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1993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3mm씩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으며, 해안선으로부터 0~50km 구간에서는 연간 약 3.45mm씩 해수면이 상승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열대성 저기압(사이클론), 폭우, 홍수, 가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³⁹⁾

〈그림 2-2〉 카리브해 지역 해수면 높이 변화 추이(1993-2023년)
SEA LEVEL CHANGE (1993-2023)



자료: NOAA Climate.gov, Climate Change: Global Sea Level(검색일: 2025.8.1.)

39) WMO(2025), p. 2, 6, pp. 8-12.

〈표 2-12〉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해양·관광 분야 현황(2019~2023년)

국기명	관광유입통계						관광고용현황						관광교통수단현황						영해 중 해양보호구역비중(%)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앤티가 바부다	269	301	125	169	265	.	.	.	.	.	.	.	.	1064	1035	276	250	642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7	
바하마	1633	1807	441	892	1452	.	.	.	.	.	.	.	.	6622	7250	1795	2101	7001	7.9	7.9	7.9	7.9	7.9	7.9	7.9	7.9	7.9	7.9	7.9	7.9	7.9	7.9	7.9	7.9	7.7	
바베이도스	680	523	207	144	.	.	.	.	.	.	.	.	.	1356	966	546	242	89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벨리즈	489	503	144	219	.	22.1	23.0	23.5	17.2	15.7	16.97	16.74	437	.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20.4		
쿠바 공화국	4712	4276	1086	356	1614	.	.	.	.	.	.	.	.	4684	4263	1085	356	1613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4.2		
도미니카 연방	62.9	89.5	21.7	14.7	61.1	.	.	.	.	.	.	.	.	64	90	22	15	6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1		
도미니카 공화국	6569	6446	2405	4994	7163	1601	168.5	174.4	109.3	189.6	7551	7550	2748	5327	8489	18	18	17.3	17.3	17.3	17.3	17.3	17.3	17.3	17.3	17.3	17.3	17.3	17.3	17.3	17.3	17.3	13.3			
그레나다	161	163	44	42	133	.	.	.	.	.	186	188	54	47	149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가이아나 공화국	287	315	87	158	288	.	.	.	.	.	287	315	87	158	28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1			
아이티 공화국	447	286	203	148	.	.	.	.	.	.	1333	938	322	148	.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8				
자메이카	2473	2681	880	1464	2478	.	.	.	.	.	4319	4234	1330	1535	3331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7				
세인트키츠 네비스 연방	125.3	120.1	29.7	20.2	.	.	.	.	.	.	1277	1107	301	123	589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5			

국가명	관광유입통계						관광고용현황						관광교통수단현황						영해 중 해양보호구역 비중(%)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인트 루시아	395	424	131	199	356	.	.	.	.	.	.	.	395	424	131	199	356	0.2	0.2	0.2	0.2	0.2	0.3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80	84	27	24	59	.	.	.	.	.	.	.	356	399	155	57	210	0.2	0.2	0.2	0.2	0.2	0.2	
수리남 공화국	.	.	.	.	.	.	.	.	.	.	.	.	.	.	.	.	.	1.5	1.5	1.5	1.5	1.5	1.5	
트리니다드 토바고 공화국	376	389	95	41	226.5	23.5	23.5	23.5	51.8	39.6	44.1	508	482	141	41	253	0.1	0.1	0.1	0.1	0.1	0.1	0.1	

자료: UN Tourism(2025), Tourism Statistics(검색일: 2025.6.9.) 및 해당 데이터원 내 INBOUND TOURISM(검색일: 2025.6.19.); World Bank Group(2025),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25.6.19.) 데이터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해운·항만·기초인프라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식수 접근성, 해상 물류, 도로망 등 기초 인프라 측면에서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식수 접근성의 경우, 기초 식수 접근성은 대부분의 국가가 90~98%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아이티(67.42%)는 지역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더 엄격한 기준인 안전 식수 접근성은 수치가 확인된 도미니카공화국(44.94%)과 수리남(약 55%) 모두 기초 식수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카리브해 권역은 태평양 권역에 비해 주요 항구의 수와 물동량 측면에서 우위에 있었다. 해상 물류 및 상선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자메이카,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등 3개국이 대규모 항만 물동량 처리가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항만 물동량과 상선 보유량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낮게 나타났다. 바하마,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등은 대규모 상선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항만 물동량이 많지 않았다.

도로 인프라 분석 결과, 도로 총연장은 쿠바(113,916.9km)가 가장 길었으며, 도미니카공화국(65,128.87km), 아이티(44,558.52km), 자메이카(23,671.87km)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로 밀도(도로 길이/국가 면적)를 기준으로 하면 양상은 달라진다. 바베이도스는 430km²의 좁은 면적에 3,648.94km의 도로망을 갖춰 1km²당 약 8.48km의 압도적인 도로 밀도를 기록했다. 이어 바하마(약 0.82km/km²), 벨리즈(약 0.70km/km²)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가이아나(약 0.065km/km²)와 수리남(약 0.10km/km²)은 국토 면적 대비 도로망이 매우 부족하여 접근성 측면에서 큰 제약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13〉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해운·항만·기초인프라 현황(2019~2023년)

국가명	전체 인구 중 안전식수 접근성(%)								전체 인구 중 기초식수 접근성(%)								항만물동량(TEU: 20 foot equivalent units)								상선수 (척)	주요 항구	도로 길이 (2023)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roads (km)	area (km²)
	2018	2019	2020	2021	2020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앤티가 바부다	.	.	.	.	98.37	98.37	98.36	98.36	98.36	98.36	98.36	.	.	.	.	.	.	.	.	.	614	St. John's	2213.96	443				
바하마	.	.	.	.	98.89	98.89	98.89	.	.	.	.	1450000	1792780	1724000	.	.	.	.	.	.	1274	Clifton Pier, Cockburn Town, Freeport, Matthew Town, Nassau, South Riding Point	11354.92	13880				
바베이도스	.	.	.	.	98.50	98.51	98.51	98.51	98.51	98.51	98.51	89460	93899	97000	.	.	.	.	.	.	272	Bridgetown	3648.94	430				
벨리즈	.	.	.	.	98.40	98.40	98.40	98.40	98.40	98.41	.	.	.	.	.	.	.	.	.	.	774	Belize City, Big Creek	16089.92	22966				
쿠바 공화국	.	.	.	.	94.03	94.15	94.27	94.56	94.65	94.65	255362	246352	261080	.	.	.	.	.	.	65	Antilla, Bahai de la Habana, Bahia de Sagua de Tanamo, Cabañas, Casilda, Cienfuegos, Nuevitas Bay, Puerto Guantánamo, Santiago de Cuba	113916.9	110860					
도미니카 연방	.	.	.	.	.	.	.	.	.	.	7401	.	.	.	.	.	.	.	.	.	77	Portsmouth, Roseau	1620.52	751				

국가명	전체 인구 중 안전식수 접근성(%)								전체 인구 중 기초식수 접근성(%)								항만물동량(TEU: 20 foot equivalent units)								상선수 (척)	주요 항구	도로 길이 (2023)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roads (km)
도미니카 공화국	44.59	44.69	44.78	44.86	44.94	95.96	96.14	96.31	96.70	96.75	1781902	2184754	2043326	.	.	.	.	.	.	.	.	.	.	.	.	Andres(Lng Terminal), Las Calderas, Puerto de Haina, Puerto Plata, Punta Nizao Oil Terminal, San Pedro de Macoris, Santa Barbara de Samana, Santa Cruz de Barahona, Santo Domingo	65128.87	48670
그레나다	.	.	.	.	.	.	.	.	.	.	.	22117	.	.	.	.	.	.	6	St. George's	1149.65	344						
가이아나 공화국	.	.	.	.	.	94.60	94.95	95.28	95.57	95.86	58376.5	.	.	.	.	.	.	80	Georgetown, Linden, New Amsterdam	13975.12	214969							
아이티 공화국	.	.	.	.	.	65.9	66.32	66.70	67.06	67.42	177042.75	.	.	.	.	.	.	4	Cap Haitien, Jacmel, Miragoane, Petit Goave, Port au Prince	44558.52	27750							

국가명	전체 인구 중 인적식수 접근성(%)					전체 인구 중 기초식수 접근성(%)					항만물동량(TEU: 20 foot equivalent units)					상선수 (척)		주요 항구	도로 길이 (2023)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roads (km)	area (km²)	
자메이카	.	.	.	.	.	90.85	91	91.03	91.06	91.1	1631011	1975401	2137500	.	40			Falmouth, Kingston, Lucea, Montego Bay, Ocho Rios, Port Antonio, Port Esquivel, Port Kaiser, Rio Bueno, Rocky Point, Savannah la Mar	23671.87	10991	
세인트키츠 네비스연방	.	.	.	.	.	.	.	.	.	.	13560.38	.	.	.	.	341	.		Basseterre, Charlestown	1188.13	261
세인트 루시아	.	.	.	.	.	96.89	96.89	96.89	96.89	96.89	.	.	.	.	.	.	.		Castries, Grand Cul de Sac Bay, Vieux Fort	1902.38	616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	.	.	.	.	97.73	.	.	.	.	18222	.	.	.	.	830	.		Kingstown	977.45	389
수리남 공화국	55.31	55.53	55.76	55.78	55.8	97.09	97.54	97.99	97.99	97.99	.	109600	103874	.	.	13	.		Moengo, Nieuw Nickerie, Paramaribo, Paranam	15652.22	163820

국가명	전체 인구 중 안전식수 접근성(%)						전체 인구 중 기초식수 접근성(%)						항만물동량(TEU: 20 foot equivalent units)						상선수 (척)	주요 항구	도로 길이 (2023)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roads (km)	area (km²)				
트리니다드 토바고 공화국	.	.	.	.	.	.	98.88	98.88	98.88	98.88	98.88	98.88	406778	410393	498544	.	.	102	Galeota Point Terminal, Point Lisas Industrial Port, Point Lisas Port, Pointe-a-Pierre, Port of Spain	12980.13	5128	

자료: World Bank Group(2025),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25.6.19.); UNOCHA(2025), HDX(검색일: 2025.6.19.); CIA(2025), The World Fact Book(검색일: 2025.6.10.) 데이터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에너지 분야

카리브해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역시 국가 간 편차가 매우 컸다. 벨리즈는 2017년 25.95%에서 2021년 59.46%로 비중을 대폭 확대하며 지역 내 독보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수준을 보였다. 이어 도미니카공화국(9.83%)과 자메이카(9.56%)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기록하며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다. 반면, 트리니다드 토바고(0.07%), 바하마(0.48%), 도미니카 연방(0.77%) 등은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해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 진전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CO₂ 배출량(2023년 기준)의 경우,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1인당 19.90톤으로 타 국가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바하마(4.22톤), 수리남(4.18톤), 가이아나(4.00톤) 순으로 배출량이 많았다. 반면 아이티는 1인당 0.30톤으로 배출량이 가장 낮았으며, 벨리즈(0.68톤)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0.95톤)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거나 산업 규모가 작은 국가들도 1톤 미만의 낮은 배출량을 유지했다.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낮게 유지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전력 접근성(2023년 기준) 측면에서는 대다수 국가가 보편적 전력 공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쿠바 등 상당수 국가가 100% 또는 이에 근접한 접근성을 기록하며 기초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다만, 아이티는 전력 접근성이 51.3%에 불과해 카리브해 지역 내에서 에너지 공급 격차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확인되었다.

(표 2-14)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에너지 분야 현황(2019~2023년)

국가명	재생에너지 전기생산비율(%)					1인당 CO2 배출량(톤)					전체 인구 중 전력접근성(%)				
	2017	2018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앤티가바부다	1.85	2.83	3.69	4.95	5.66	3.72	3.00	3.30	3.30	3.46	100	100	100	100	100
바하마	0.22	0.22	0.26	0.31	0.48	4.49	3.63	4.01	4.02	4.22	100	100	100	100	100
바베이도스	2.31	2.30	3.41	5.45	7.33	2.97	2.38	2.68	2.69	2.82	100	100	100	100	100
벨리즈	25.95	28.32	42.05	50.57	59.46	0.70	0.56	0.62	0.65	0.68	92.7	96.8	97.7	98.6	99.6
쿠바공화국	3.44	2.95	3.68	4.28	4.52	2.19	1.93	1.90	1.88	2.00	99.8	99.9	100	100	100
도미니카연방	1.11	1.18	0.83	0.79	0.77	1.24	1.01	1.12	1.13	1.20	99.9	100	100	100	100
도미니카공화국	3.75	4.93	6.15	9.04	9.83	2.62	2.44	2.67	2.64	2.77	99	100	98.1	98.1	99.6
그레나다	1.47	1.54	1.62	1.97	1.97	1.30	1.05	1.16	1.16	1.22	93	93.4	93.7	94.2	94.4
가이아나공화국	7.83	7.92	7.11	7.23	7.11	3.46	4.12	4.01	4.04	4.00	91.6	92.3	92.9	93	98.9
아이티공화국	0.38	0.43	2.88	5.99	6.96	0.32	0.31	0.30	0.29	0.30	45.4	46.3	47.2	49.3	51.3
자메이카	8.17	8.20	8.55	9.95	9.56	2.99	2.08	2.27	2.24	2.42	98.9	99.7	100	100	97.7
세인트키츠 네비스연방	3.67	3.63	3.50	4.41	4.53	2.66	2.16	2.40	2.41	2.54	100	100	100	100	100
세인트루시아	0.98	2.19	2.57	2.75	2.54	1.76	1.42	1.57	1.57	1.65	100	100	100	100	100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0.55	0.77	1.08	2.53	1.62	0.97	0.79	0.88	0.89	0.95	100	100	100	100	100
수리남공화국	0.91	0.99	0.92	-13.87	-6.06	4.39	4.25	4.22	4.07	4.18	97.9	98.4	98.8	99	99.6
트리니다드 토바고공화국	0.07	0.07	0.07	0.07	0.07	24.33	21.78	20.96	20.44	19.90	100	100	100	100	98.7

자료: World Bank Group(2025),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25.6.19.) 데이터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3절 권역별 해양수산 분야 협력 수요 및 도전과제 —

1. 태평양

1) 협력 수요 분석

우리나라는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3년마다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외교장관회의 기간 중에는 매년 고위급관리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고위급관리회의에는 차관 혹은 차관보급이 참석하며 2025년까지 총 7회 진행되었다. 이 두 회의를 통해 확인된 해양수산 분야 협력 수요는 다음과 같다.

〈표 2-15〉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및 고위급관리회의를 통해 파악된 해양수산 협력 수요

회차 및 일시	주요 안건
제1차 외교장관회의 (2011.5.31.) ⁴⁰⁾	• 연수훈련사업의 확대 및 개선 • 기후변화 • 자원·원양 어업 분야
제1차 고위급관리회의 (2012.9.18.) ⁴¹⁾	• 수산 인프라 및 역량 강화(한국기업 수산자원 투자 확대) • 지속가능한 자원 개발(심해저 광물 및 에너지, 천연자원) • 통계 및 시장 정보 공유, 통상 지원(어업 시장 접근성) • 수산 분야 교육훈련 확대(전문기술 인력 양성) • 기후변화 대응 연계 수산정책 개발(국제기구 협력)
제2차 고위급관리회의 (2013.10.22.) ⁴²⁾	• 해양·수산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 • 어족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 협력 •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 생태계 보호 지원 • 해양자원의 전략적 활용 및 공동개발 기반 조성

40) 외교부 보도자료(2011.6.1.)(검색일: 2025.5.1.)

41) 외교부 보도자료(2012.9.18.)(검색일: 2025.5.1.)

42) 외교부 보도자료(2013.10.21.)(검색일: 2025.5.1.)

43) 외교부 보도자료(2014.11.24.)(검색일: 2025.5.1.)

회차 및 일시	주요 안건
제2차 외교장관회의 (2014.11.24.) ⁴³⁾	• 해양수산자원 보존 및 관리 역량 강화 • 수산 자원 공동관리 및 과학기술 협력 • 불법어업(IUU) 대응 및 협력 체계 구축 • 심해저 자원 및 해양에너지 개발 협력(OTEC 기반 재생에너지 협력) • 해양수산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
제3차 고위관리회의 (2015.10.6.) ⁴⁴⁾	• SDG 14(해양자원 지속가능 이용) 이행 협력 • 해양·수산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강화 • 해양환경 관리 및 해양과학 연구 협력 • 심해저 자원, 해양운송, 해양관광 등 해양 기반 산업 협력 • IUU 어업 및 해양오염 대응을 위한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RPCF 사업)
제4차 고위관리회의 (2016.10.25.) ⁴⁵⁾	• 해양·수산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해양협력 추진 • 한국 원양어업과 태평양 도서국 간 상생협력 모색 • 해양·수산 분야를 21세기 미래 협력지평으로 설정 • 향후 외교장관회의를 위한 해양협력 분야 사전 논의
제3차 외교장관회의 (2017.12.7.) ⁴⁶⁾	• IUU 어업 대응 및 수산자원 모니터링·통제·감시(MCS) 협력 강화 • 지속가능한 어업 개발을 위한 훈련 지원 및 항만, 어항시설 개발 협력 • 해양환경 관리 및 해양과학연구 협력 지속 •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해양운송, 해양관광 등 연계 분야 협력 확대 • 해수온도차 발전(OTEC) 등 해양 기반 재생에너지 공동 프로젝트 모색
제5차 고위관리회의 (2018.10.23.) ⁴⁷⁾	• 해양광물 및 수산자원의 전략적 중요성 인식 및 공동관리 강화 • RPCF 활용 'IUU 어업 및 해양오염 실시간 원격감시 사업' 지속 확대 • 태도국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 강화 • 개도국 수산·양식 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수산대학 설립 지지 요청 • 해양수산 협력을 통한 미래자원 공동개발 기반 구축
제6차 고위관리회의 (2019.10.17.) ⁴⁸⁾	• 해양수산 분야 인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속 추진 • 해양과학 연구 및 수산기술 교육·훈련 협력 강화 •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 요청 • 태도국 맞춤형 수산협력 프로그램 확대 필요

44) 외교부 보도자료(2015.10.6.)(검색일: 2025.5.1.)

45) 외교부 보도자료(2016.10.18.)(검색일: 2025.5.1.)

46) 외교부 보도자료(2017.12.7.)(검색일: 2025.5.1.)

47) 외교부 보도자료(2018.10.23.)(검색일: 2025.5.1.)

48) 외교부 보도자료(2019.10.17.)(검색일: 2025.5.1.)

회차 및 일시	주요 안건
제4차 외교장관회의 (2021.11.16.) ⁴⁹⁾	• 수산·양식 분야 역량 강화 • IUU 어업 감시·통제 기술 개발 협력 • 해양환경 관리 및 오염 대응 분야 협력 • 항만 인프라 구축 협력 확대 • 해수온도차 발전(OTEC) 등 해양기반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제5차 외교장관회의 (2022.10.26.) ⁵⁰⁾	• 해양수산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 협력 • 해양수산 분야 역량 강화 지원 • IUU 어업 감시 협력 지속 및 원격탐지기술 활용 • 항만 인프라 개발 협력 • 해양오염 방지(방사능 포함)에 대한 협력 및 공동 대응
제7차 고위관리회의 (2023.3.24.) ⁵¹⁾	• 해양 분야 협력 지속 및 확대 • 한국의 해양 관련 개발 경험 공유 •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된 해양 생태계 보호 지원 • 인적 역량 강화 중심 해양수산 분야 프로그램 확대 •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해양 관련 성과사업 도출

자료: 외교부 보도자료(검색일: 2025.5.1.) 참고하여 저자 작성

우리나라와 태평양 도서국 간 정상회의는 2023년에 최초로 개최되었다. 태평양 군소도서국 측에서는 IUU 어업 대응, 해양쓰레기 관리, 해양생태계 복원 및 블루카본 관리, 해양수산 전문가 양성, 소규모 어항 건설, 어촌특화 개발 등을 협력 안건으로 제안하였다.⁵²⁾

〈표 2-16〉 제1차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파악된 국별 해양수산 협력 안건

국가명	협력 안건
키리바시	• 한국 최대 원양어장으로 수산협력 중요 • 어촌 특화개발, 경제발전 노하우 공유
투발루	• 해수면 상승 대응 협력 • 기후변화 및 해양수산 분야 중점 협력 희망

49) 외교부 보도자료(2021.11.16.)(검색일: 2025.5.1.)

50) 외교부 보도자료(2022.10.26.)(검색일: 202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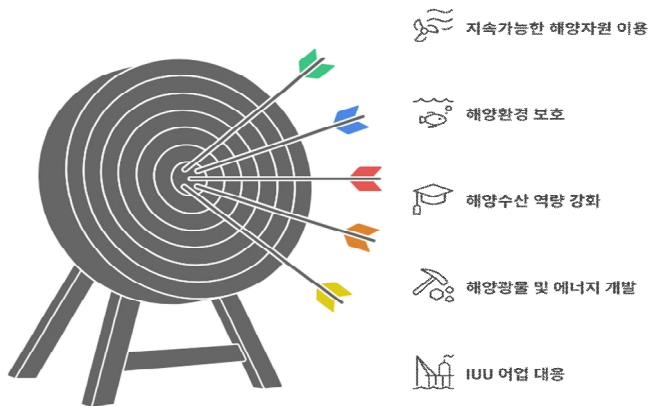
51) 외교부 보도자료(2023.3.26.)(검색일: 2025.5.1.)

5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6.12.)(검색일: 2025.4.16.)

국가명	협력 안건
통가	• 해수 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 희망
바누아투	• 항만 개발 한국 참여 요청 • 기후변화 및 개발협력 협력 강화
파푸아뉴기니	• 항만 현대화 사업 등 인프라 ODA 대상 • KOICA 사무소 재개소 요청
쿡제도	• 심해저 자원(망간, 철, 니켈 등) 개발 협력 요청
마셜제도	• 해수온도차 발전사업 한국 참여 요청
솔로몬제도	• 대학(해양학과) 역량 강화, 해양수산 관련 교육훈련 확대
니우에	• 수교 직후 개발협력 및 기후변화 협력 강화 예정
팔라우	• 해양수산 포함한 재생에너지, IT, 인프라 분야 협력 희망 • 직항편 재개 통한 인적교류 활성화
사모아	• 해양수산 분야 협력 관심 표명(총리회담에서 확인)
나우루	• 보건외교 외 해양수산 분야 협력 언급(회담 맥락상 포괄적 협력 논의)
피지	• 해양수산 협력센터 설립 추진 • 불법어업 대응 역량 강화 • 수산시장 리모델링 등 어촌특화사업
마이크로네시아	• 생물표본실 설치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 사업 추진(과학기술 기반)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6.12.)(검색일: 2025.4.16.) 참고 저자 작성

〈그림 2-3〉 태평양 도서국 요청 주요 해양수산 협력 안건(종합)



자료: 저자 작성(NAPKIN AI 활용)

2) 전략적 중요성 및 도전과제

(1) 전략적 중요성

태평양 군소도서국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영토와 인구 면에서 소규모 섬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군소도서국에 속하는 39개 UN 회원국 중 태평양 도서국은 12개국 포함되며, 각국이 다른 국가와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⁵³⁾ 지리적 측면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 위치하면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상 물류의 주요 회랑이자, 동·서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국가는 광대한 EEZ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 안보를 연계하는 지역 공동 대응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태평양 도서국은 해양자원, 특히 참치 등 원양어업 중심의 수산자원 활용을 통해 외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시장의 불안정성과 교통 기반의 제약,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한 재해 빈도 증가 등으로 경제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지역 기구인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태평양 공동체(SPC)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식량안보, 보건, 통계, 교육 등 다차원적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⁵⁴⁾

가. 수산

태평양 군소도서국은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EEZ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자국 영토 면적의 수천 배에 달하는 해양 관할권을 관리한다. 이 해역에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참치 어장이 분포하고 있는데, 나우루 협정(PNA: 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당사국인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53) 박나연·김영선(2022), p. 5.

54) SPC(2025)(검색일: 2025.6.24.)

마셜제도, 나우루,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투발루의 8개국은 전 세계 참치 공급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참치 자원 보유국이다.⁵⁵⁾ 참치 조업과 관련한 원양어업은 이들 국가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어획권 판매와 해상 어업 접근과 관련된 라이선스 수입이 국가 정부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⁵⁶⁾

2021년 기준, 14개 태평양 도서국·영토의 수산 및 양식업 생산량은 약 171만 톤, 가치는 약 24억 미국 달러로 추산된다.⁵⁷⁾ 연안어업은 지역 주민의 식량안보와 단백질 섭취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며, 소규모 상업 활동과 자급적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 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⁵⁸⁾

나. 해양관광

태평양 군소도서국의 해양관광은 풍부한 해양자원과 독특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핵심 산업으로, 지역 경제와 지정학적 영향력 모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관광산업은 많은 도서국에서 GDP와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외화 수입의 주요 원천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관광 자원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해양과 연계된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문화·경제적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전략 자산이다.⁵⁹⁾

‘태평양지속가능관광정책프레임워크(Pacific Sustainable Tourism Policy Framework, 2021-2030)’는 관광을 통해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동시에, 섬과 해양 생태계를 보전·회복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은 단기적 수익 창출뿐 아니라, 장기적인 자원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태평양 군소

55) Gillett & Fong(2023), p. 435.

56) Gillett & Fong(2023), pp. 486-490.

57) Gillett & Fong(2023), pp. 426-427.

58) Gillett & Fong(2023), pp. 425-429.

59) Everett, Simpson & Wayne(2018), pp. 12-14.

도서국들은 글로벌 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 Global Sustainable Tourism Council)가 인정한 ‘태평양 지속가능관광기준(PSTS: Pacific Sustainable Tourism Standards)’을 채택하여 관광 목적지와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표준과의 산업 간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투자와 협력 유치를 촉진하고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태평양 도서국이 해양관광 분야에서 단순 소비지 역할을 넘어, 지속가능성과 환경 보전을 선도하는 국제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⁶⁰⁾

다. 해상 물류

태평양 군소도서국의 해상 물류 부문은 광대한 해양 공간과 글로벌 해상 운송 네트워크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기반으로 중요성을 갖는다. 이들 국가는 넓은 해양 관할 구역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감시하는 능력은 해양 안보와 자원 보호뿐 아니라 국제 해상무역의 안전에도 직결된다. 해당 권역의 해역은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주요 해상 통로에 위치해 있어 글로벌 해상 물류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송과 연결성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전체 국제 무역 물동량은 상대적으로 환태평양 주요국 및 선진국에 비하여 적은 수준이지만, 어업 제품과 특산물 수출의 잠재성을 확대하기 위해 안정적인 해상 연결성과 물류 컨테이너 운송 인프라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지정학적으로 태평양 군소도서국은 해상 통제권과 항만 인프라를 활용하여 주요 해양 거버넌스 논의와 해상 안보 협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⁶¹⁾

60) GSTC(2021)(검색일: 2025.8.11.)

61) World Bank(2023), pp. 30-36.

라. 해양 기반 에너지 및 기후변화

태평양 군소도서국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위치한 국가군으로, 해수면 상승, 연안 침식, 기후 재난의 빈도 및 강도 증가 등 심각한 기후변화 위협에 직면해 있다.⁶²⁾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의제를 선도하는 전략적 외교 주체로서 위상이 부각되고 있으며, 군소도서국 연대와 다자 외교 무대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평양 지역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력망 노후화, 재정적인 제약, 기술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환 속도가 제한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이 2025년 발간한 「Energy Transition Readiness Assessment for Developing Asia and the Pacific」 보고서에 따르면, 태평양 군소도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화석 연료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총 에너지 비용의 약 80%에 해당한다고 한다.⁶³⁾ 태평양 권역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높은 에너지 비용, 취약한 인프라, 기후 위기 증가로 위협받는 이들 국가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태평양 도서국 내 협력과 국제 파트너십을 통한 인프라 투자, 기술 이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⁶⁴⁾ 특히, 에너지 안보 확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선진국과 국제기구와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공동 추진, 기후 금융 접근 확대, 녹색 기술 협력 등에서 국제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이는 해양수산 부문과 연계한 청정에너지 전환을 통해 기후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62) Rosmiati(2025)(검색일: 2025.8.11.)

63) ADB(2025), p. 57.

64) ADB(2025), pp. 57-61.

(2) 도전과제

현황 및 협력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태평양 군소도서국의 해양수산 분야 도전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해양수산 산업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 및 에너지 공급망이 매우 취약하다. 태평양 도서국은 도로망, 항만, 상선 등 수산물 유통을 뒷받침할 물류 인프라의 국가 간 격차가 극심하다. 특히 파푸아뉴기니나 솔로몬제도와 같이 어획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들은 수산 가공 및 보관을 위한 전력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접근성은 각각 20.5%와 81.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에너지 부족은 냉장·저온 저장 기반의 콜드체인 구축을 어렵게 하여, 어획물의 적기 운송 및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에 심각한 병목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광산업 간의 전략적 연계가 부족하다. 해양보호구역(MPA) 지정 비율은 국가별로 0%에서 100%까지 편차가 매우 크며, 이는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피지는 대규모 관광객이 방문하는 핵심 관광 거점임에도 해양보호구역 비중은 0.9%에 불과해 관광-보전의 선순환 구조가 미흡하다. 반면, 팔라우는 자국 영해의 약 10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관리하며 적극적인 보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지역 내에서도 보전 전략의 양극화가 뚜렷하다.

셋째,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데이터 및 행정 역량의 격차가 크다. 생산, 무역, 고용 등 수산업 전반의 통계 미비는 정교한 정책 수립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다. 쿡제도, 나우루, 니우에 등의 국가는 수산업 GDP 기여도나 항만 물동량 등 핵심 지표가 상당 부분 미집계 상태이며, 탄소 배출이나 에너지 소비 데이터 역시 국가 간 정밀도 차이가 크다. 이러한 데이터 공백은 국제협력 사업 기획 시 정확한 수요 산출과 성과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카리브해

1) 협력 수요 분석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매년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25년 6월 기준 총 14회 개최되었으며, 제2차·제12차·제15차에서는 해양 수산을 주제로 개최하였다.

〈표 2-17〉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통해 파악된 해양수산 협력 수요

회차 및 일시	주요 안건
제1차 고위급 포럼 (2011.10.6.) ⁶⁵⁾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환경 친화적 성장 모델 개발 - 신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에너지 효율 개선 - 기후·재난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문 통합 협력
제2차 고위급 포럼 (2012.7.31.) ⁶⁶⁾	- 해양환경 보호 및 관리 기술 협력 - 연안 및 해양생태계 보전(관광·수산업 등 해양 기반 산업에 의존) - 해양에너지 기반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제3차 고위급 포럼 (2013.10.22.) ⁶⁷⁾	연안·해양 생태 기반 관광산업 지속가능성 확보
제4차 고위급 포럼 (2014.11.24.) ⁶⁸⁾	-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연안침식에 대한 취약성 개선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유통 인프라 개선 - 기후위기 대응 능력 향상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적응 전략과 연계한 해양경제 개발 - 항만 기반 해운·물류 또는 조선(선박수리 및 조선소 인프라 구축) 협력
제5차 고위급 포럼 (2015.10.20.) ⁶⁹⁾	- 해양 기반 기후위험에 대한 취약성 개선 -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협력 - 해양 기반 에너지와 과학 기술 접목 추진 및 관련 역량 강화
제6차 고위급 포럼 (2016.10.26.) ⁷⁰⁾	- 해양환경 및 연안 생태계 보호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협력(다자기구 협력 포함) - 해양교육·연구 및 해양자원 관리 역량 강화(식량안보 및 고용 창출)
제7차 고위급 포럼 (2017.11.8.) ⁷¹⁾	- 해양 및 연안 생태계 손실 대응 필요(산호초 파괴 등), 해양 생물다양성 - 해수면 상승, 연안침식, 해양 산성화, 해수온 상승 등에 대한 종합 대응 - 카리브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거버넌스 필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및 농수산 연계 협력(해수면 상승 대비) - 지속가능 해양경제

회차 및 일시	주요 안건
제8차 고위급 포럼 (2018.10.31.) ⁷²⁾	기후변화와 연계된 식량안보 문제 인식 및 대응(직접 언급 없음)
제9차 고위급 포럼 (2019.7.10.) ⁷³⁾	- 해양수산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 협력 (해양생태계 붕괴 및 산호초 손실, Sargassum 해조류 급증) - 해양재해, 해양오염, 연안침식 대응 협력 - 재해로 인해 파괴된 해양 기반 인프라(항만) 복구 -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해양 기반 재난 대응 협력
제10차 고위급 포럼 (2020.11.11.) ⁷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대응 및 식량안보 협력(직접 언급 없음)
제11차 고위급 포럼 (2021.11.1.) ⁷⁵⁾	- 기상예보 시스템 및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술가 양성 - 카리브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취약성 인식 및 협력 강조
제12차 고위급 포럼 (2022.11.30.) ⁷⁶⁾	-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경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 -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산업 탈탄소 전략 협력 - 해양기반경제 협력 및 해양산업 육성 협력 확대 - 카리브 해안 복원력 협력(해안 침식 모니터링)
제13차 고위급 포럼 (2023.10.10.) 77)78)79)	- 해양환경 보전 협력 - 해양국가 간 협력
제14차 고위급 포럼 (2024.11.5.) ⁸⁰⁾	- 기후변화 대응 - 식량안보(직접적인 해양수산 언급은 없었음)
제15차 고위급 포럼 (2025.11.18.) ⁸¹⁾	- 해조류(Sargassum) 예보·경보·수거·활용 분야에 대한 기술 협력 - 기후 회복력 및 연안 인프라 구축 - 해양공간관리(MSP)·국가 해양정책 등 제도 및 거버넌스 구축 - 스마트 해양관리 및 스마트항만 기술 협력 - 기후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재난 대비 - 수산·양식 산업 개발 및 IUU 대응·EEZ 감시 등 해양안보 강화 - 해양과학·해양정책·블루이코노미 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 활성화

자료: 외교부 보도자료(검색일: 2025.5.1.); KOICA(2023)(검색일: 2025.5.25.); Williams(2023)(검색일: 2025.5.25.) 참고 저자 작성

65) 외교부 보도자료(2011.10.6.)(검색일: 2025.5.1.)

66) 외교부 보도자료(2012.7.26.)(검색일: 2025.5.1.)

67) 외교부 보도자료(2013.10.20.)(검색일: 202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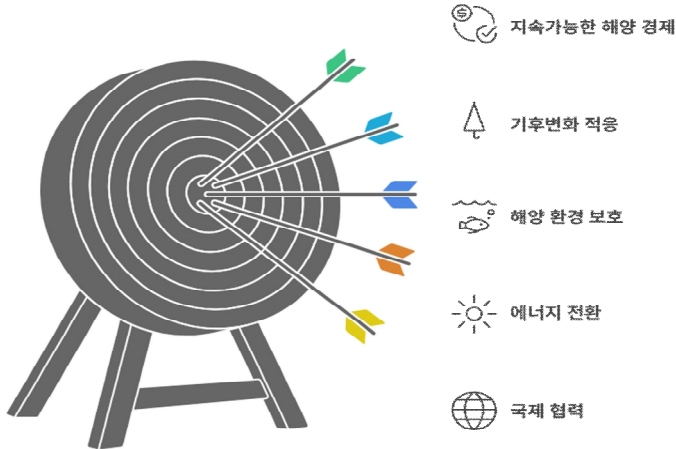
68) 외교부 보도자료(2014.10.20.)(검색일: 2025.5.1.)

69) 외교부 보도자료(2015.10.18.)(검색일: 2025.5.1.)

70) 외교부 보도자료(2016.10.25.)(검색일: 2025.5.1.)

71) 외교부 보도자료(2017.11.5.)(검색일: 2025.5.1.)

〈그림 2-4〉 카리브해 요청 주요 해양수산 협력 안건(종합)



자료: 저자 작성(NAPKIN AI 활용)

2) 전략적 중요성 및 도전과제

(1) 전략적 중요성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주와 유럽, 남미를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강대국들과 오랜 외교적, 문화적, 역사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⁸²⁾ 특히, 미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안보 이익으로 인해 이 지역을 전통적 영향권으로 간주하였으나, 최근 수십 년간 개발 재정 및 외교적 관심은 점차 축소되고

72) 외교부 보도자료(2018.10.30.)(검색일: 2025.5.1.)

73) 외교부 보도자료(2019.7.9.)(검색일: 2025.5.1.)

74) 외교부 보도자료(2020.11.11.)(검색일: 2025.5.1.)

75) 외교부 보도자료(2021.12.1.)(검색일: 2025.5.1.)

76) 외교부 보도자료(2022.11.30.)(검색일: 2025.5.1.)

77) 외교부 보도자료(2023.10.10.)(검색일: 2025.5.1.)

78) KOICA(2023)(검색일: 2025.5.25.)

79) Williams(2023)(검색일: 2025.5.25.)

80) 외교부 보도자료(2024.11.5.)(검색일: 2025.5.1.)

81) 외교부 보도자료(2025.11.18.)(검색일: 2025.11.19.)

82) Waqavakatoga et al.(2024), p.14.

있다.⁸³⁾ 반면,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카리브해 도서국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와 개발금융을 통해 지역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태평양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긴장이 덜한 편이다.⁸⁴⁾

이들 국가는 경제적으로 관광업, 농수산물 수출, 금융 서비스 등에 기반한 좁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CARICOM은 역내 단일시장·경제권 구축, 무역 장벽 완화, 노동력 이동 촉진 등을 통해 경제통합을 강화하고 있다.⁸⁵⁾

가. 수산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이 보유한 해양 공간은 육지 면적의 82배 이상에 달하며, 다른 군소도서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육지에 비해 방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⁸⁶⁾ 이들 국가에게 해양은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지역 GDP의 약 18%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부문으로, 주민들의 삶과 생계 전반에 직결된다.⁸⁷⁾ 멸치·정어리·청어 등 소수 어종 중심의 소규모 원양어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태평양 도서국과 달리, 카리브해는 대서양 및 인접 해역에서 다양한 원양어종과 저서어종이 높은 어획량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⁸⁸⁾

카리브해 수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남획 문제로, 2020년 기준 상업 대상 어종의 55% 이상이 이미 남획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⁹⁾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체계 구축과 공동 모니터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과도한 어획과 IUU 어업을 규제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83) Waqavakatoga et al.(2024), pp. 14-16.

84) Waqavakatoga et al.(2024), pp. 14-18.

85) 외교부(2023b), pp. 13-17.

86) Caricom Impacs(2023), p. 3.

87) Caricom Impacs(2023), pp. 3-7.

88) FAO(2023), pp. 1-6.

89) Caricom Impacs(2023), p. 3.

특히 어업 관리 조치, 불법어업 감시·통제 시스템과 관련한 과학적·기술적 역량 강화 분야에서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잠재성이 크며, 이를 통해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선도적인 역할과 모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⁹⁰⁾

나. 해양관광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의 해양관광 부문은 해당 권역의 핵심 경제적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블루 이코노미 내 최대 산업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해안 및 해양 관광은 2016년 기준으로 약 4,700만 달러 규모로, 전체 블루 이코노미 부가가치의 약 12%를 차지하였으며⁹¹⁾, 특히 전 세계 크루즈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⁹²⁾ 앤티가바바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GDP의 절반 이상이 관광업에서 발생할 정도로 높은 의존도를 보이기 때문에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는 해당 권역의 경제적, 외교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⁹³⁾

한편, 대규모 해양관광 개발은 자연환경 파괴, 지역 사회문화 훼손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해당 부문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정책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는 생태관광, 커뮤니티 기반 관광 등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로의 다변화가 모색되고 있으며, 산호초·맹그로브·해초지 등 세계적으로 중요한 해양 생태계를 활용한 레저 및 체험 관광 등의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 보전, 지역사회 소득 증대에도 연결될 수 있어, 향후 국제 파트너십 구축과 블루 투어리즘 거버넌스 개선 등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⁹⁴⁾

90) FAO(2023), pp. 1-6.

91) Patil et al.(2016), p. 8.

92) Vaughan(2024), p. 12.

93) Vaughan(2024), pp. 8-12.

다. 해상 물류

카리브해 권역 내 해상 물류를 살펴보면, 카리브해 무역의 90% 이상이 권역 내 해양 영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하루 약 8만 척의 선박이 통항한다.⁹⁵⁾ 주요 항만과 연안 인프라는 국가 경제 활동의 관문 역할을 하며, 해상 물류망은 관광지 접근성, 해산물·연료·공산품 수입, 그리고 지역 안팎에서 무역을 가능하게 한다.⁹⁶⁾ 특히 몇몇 카리브해 군소도서국들은 자유무역 지대와 해양 상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항만과 해운 네트워크는 단순 운송 기능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축으로 평가된다.⁹⁷⁾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이 지니는 해상 물류의 전략적 가치만큼 해양 안보와 회복탄력성 확보도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해상 운송로의 안정성 문제를 부각시켰고, 글로벌 공급망 보호가 지역 내 안보와 직결됨을 상기시켰다.⁹⁸⁾ 또한 사이버 공격,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항만 침수,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는 물류 인프라와 해상교통로를 위협해 경제 활동에 직·간접적 피해를 주고 있다.⁹⁹⁾ 이에 따라 카리브해 국가들은 CARICOM 사이버 보안 전략,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해상법 집행 협력을 통해 물류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있다.¹⁰⁰⁾ 이러한 노력은 블루이코노미 활성화, 역내 식량안보 확보, 수출입 경쟁력 유지뿐 아니라 국제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94) Vaughan(2024), pp.13-20.

95) Caricom Impacs(2023), p. 3.

96) Caricom Impacs(2023), pp. 3-7.

97) Caricom Impacs(2023), pp. 21-26.

98) Caricom Impacs(2023), pp. 13-14.

99) Caricom Impacs(2023), pp. 12-16.

100) Caricom Impacs(2023), pp. 36-45.

라. 해양 기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태평양 군소도서국과 함께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군으로, 허리케인·해수면 상승·산호초 백화 등 기후위기 영향이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카리브해 지역의 기후 피해는 2025년 지역 국내총생산(GDP)의 5%에서 2100년까지 20% 이상으로 증가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중이 지금보다 약 4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¹⁰¹⁾ 이러한 취약성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다양한 산업, 생태계, 지역사회에 상당한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후 적응과 복원력(resilience) 구축에 있어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모델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중요성을 지닌다.¹⁰²⁾

카리브해 지역은 기후 외교 및 해양 외교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사례로 꼽힌다. 특히 해양보호구역(MPA)을 중심으로 한 생태적 연결망 구축은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 생태계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으로, 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⁰³⁾ 재생에너지 전환과 블루카본 기반 해양 생태계 복원 또한 이들 국가의 핵심 의제이다.¹⁰⁴⁾ 이에 따라 단순 에너지 안보 확보를 넘어, 기후 위기 적응과 경제 다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저탄소·회복력 경제 모델 구축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 도전과제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의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도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101) Thomas et al. (2020), p. 8.

102) Roy(2024)(검색일: 2025.8.11.)

103) Kiene & Brenner(2022)(검색일: 2025.8.11.)

104) Kiene & Brenner(2022)(검색일: 2025.8.11.)

첫째, 어획 의존형 소규모 생산 구조와 비대칭적 무역 구조로 인한 경제적 자립성 부족이다. 대부분의 카리브해 국가는 어획 중심의 영세한 수산업 체계에 머물러 있다. 도미니카연방, 세인트키츠네비스 등 다수 국가의 연간 어획량이 1,000톤 이하로 생산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양식업 또한 쿠바 등 일부를 제외하면 연간 10톤 미만의 산업화 전 단계에 그치고 있다.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수입액이 수출액의 약 7.1배에 달하는 등 높은 외부 의존도를 보여, 역내 수산업의 경제적 자력 갱생을 위한 가치사슬 강화가 시급하다.

둘째, 국가 간 극심한 인프라 및 산업 격차로 인한 권역 통합 협력의 어려움이다. 기본 인프라와 관광산업 규모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이질성은 단일한 협력 모델 적용을 저해한다. 항만 물동량 측면에서 자메이카와 도미니카공화국은 상대적으로 현대적 물류 체계를 갖추었지만, 일부 국가는 상선 보유량이 10척 미만에 불과하는 등 해운 기반이 미약하다. 관광객 유입 또한 일부 국가는 연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등 국가 간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는 ‘개발도상국형 기초 지원’과 ‘시장 개척형 산업 협력’이라는 이원화된 접근 전략을 요구한다.

셋째, 통계 관리 미비로 인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및 환류 체계 부재이다. 수산업 GDP 기여도, 관광 고용, 해양보호구역(MPA) 비중 등 해양수산 전반에서 미집계 항목이 다수 발견되어 정밀한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도미니카공화국과 벨리즈 정도를 제외하면 관광 고용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협력사업 기획 시 정확한 수요 산출과 성과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 권역 차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통계 체계 구축과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4절 소결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해양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성과 기후 변화에 대한 공통된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구조, 기초 인프라, 정책 여건 등에서 뚜렷한 권역 간·국가 간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해양수산 부문의 통계 미비와 산업화 수준의 격차는 단일한 협력 모델의 적용을 어렵게 만들며, 이에 따라 국가별 맞춤형 기능을 조합하는 모듈형 협력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양 권역 모두 전통적인 어획 중심 수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산업의 산업화 및 수출 역량, 양식 기반, 해양보호구역 운영, 관광 연계 전략 등은 국가별로 차이가 상당하였다. 태평양 군소도서국은 수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해양자원 활용이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 되나, 도로·전력·항만 등 인프라 기반이 취약하여 어획-가공-유통 간 가치사슬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파푸아뉴기니는 어획량은 많지만 전력 접근성이 낮아 냉장·가공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수산 협력은 단순 기술 지원보다는 인프라 기반 조성 과 병행되어야 한다.

반면 카리브해 권역은 대부분의 국가가 100%에 가까운 전력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메이카와 도미니카공화국처럼 태평양 권역보다 월등히 높은 항만 물동량을 처리하는 등 물류 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안전한 식수 접근성은 떨어지고, 수산업의 경제적 비중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았으며, 수산물 수출입 적자가 심화된 구조를 보였다. 특히 국가 간 관광객 유입 차이가 태평양보다 극심하였다. 결론적으로, 카리브해 대상으로는 수산업 중심 협력보다는 해안침식, 해양쓰레기 등 기후·환경 기반의 광의적 해양 협력을 추진하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지역 개발 연계 양식업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무엇보다도 두 권역 모두 데이터 기반 협력 설계가 불가능한 국가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서, 통계 생태계 구축, 데이터 생산 역량 강화, 국가 단위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사전 협력이 필수적이다. 카리브해의 경우, 개발도상국형 협력과 시장개척형 협력 접근을 병행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국가군을 분류하고 차등형 협력 전략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태평양 또한 문화권별·언어권별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기반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마이크로네시아와 멜라네시아 등 지역별 특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군소도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전략 수립 과정에서 다음의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1. 현황-수요-우리나라의 비교우위 간 연계성을 갖춘 삼각형 기반의 협력 전략을 도출할 것
2. 기능별 모듈형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어획기술, 양식기술, 수산물 가공, 유통 인프라, 해양쓰레기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등 분야별 기능을 조합하여 맞춤형 협력사업을 구성할 것
3. 사전 기반 구축형 협력(데이터 수집, 제도 설계, 역량 강화 등)을 병행하여 협력 실행의 기반을 마련할 것
4. 권역 간·국가 간 차등형 전략 수립을 통해 협력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글로벌 가치사슬 내 편입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것

이러한 접근은 우리나라 해양수산 국제협력의 전략적 정합성과 사업 실행력을 동시에 제고하며, 장기적으로는 해양수산 국제협력 정책을 브랜드화할 수 있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03

국제사회 및 주요국의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동향

제1절 해양수산 국제협력 방향

1.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1) 국제기구

(1) UN

국제연합(UN)은 군소도서국의 해양수산 부문에서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관리, 연안 생태계 보전, 해양오염 저감 등을 핵심 축으로 한 다자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UN 경제사회국(UN 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이하 UN DESA)은 군소도서국이 저지대·연안 집약적 경제구조를 가진 탓에 기후 충격에 극도로 취약하다고 분석하며, 어업, 관광, 수자원 등 기후 민감 부문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적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⁰⁵⁾ 또한, 산호 백화,

해양 산성화, 폭풍 및 해일 등의 자연재해 증가 등은 연안 생태계 악화와 어획량 감소로 직결되므로,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을 병행하는 프로그램 설계를 촉구하고 있다.¹⁰⁶⁾

수산 부문에서는 군소도서국 GDP의 평균 1.5%가 지속가능한 어업에서 발생하며, 이는 세계 평균의 10배로, 경제 및 식량안보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¹⁰⁷⁾ 그러나 남획과 어족자원 감소가 심화되고 있어 UN 산업개발기구(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이하 UNIDO)에서는 수산 관련 산업 역량 개발을 ‘SAMOA Pathway’¹⁰⁸⁾의 우선 과제에 포함하여 기술훈련과 가공 및 유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기후 재난, 해양 산성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양식업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의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¹⁰⁹⁾

연안 및 해양생태계 보전 분야는 ‘Large Ocean States’라는 군소도서국의 해양주권 개념과 직결된다.¹¹⁰⁾ UN DESA는 해양관광·해양생명공학·블루카본 등 블루이코노미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하며, 해양생태계 보호와 경제개발을 결합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¹¹¹⁾ UNIDO 역시 연안 지역의 재해 위험 경감과 기후 적응을 통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안 인프라·생태계 복원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UNIDO에서는 군소도서

105) Yezza et al.(2021), pp. 5-8.

106) UNIDO(2019), pp. 4-5.

107) Yezza et al.(2021), p. 9.

108) SAMOA Pathway(Th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ccelerated Modalities of Action Pathway):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군소도서국을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행동 계획을 뜻하며, 2014년 사모아에서 열린 제3차 SIDS 국제회의에서 출범되었음. 주요 우선순위 분야 중 해양수산과 관련된 분야로는 해양과 바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후변화, 식량 안보, 생물다양성 등이 있음 (UN-OHRLLS, 2014)

109) UNIDO(2019), pp. 6-7.

110) Yezza et al.(2021), p. 9.

111) Yezza et al.(2021), p. 9.

국의 ‘지속 불가능한 폐기물 처리·관리 관행’을 주요 취약 요소로 지적하며, 재사용·재활용·회수·환원(Reduction, Reuse, Recycling, Recovery and Return) 접근법을 통해 해양폐기물을 비롯한 화학물질 및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 순환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¹¹²⁾

(2)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4년 제4차 SIDS 국제회의에서 군소도서국연합(AOSIS: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과 공동으로 「SIDS 공동행동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ction on SIDS)」을 출범시켰다. 동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10년간 UN의 SIDS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비구속적인 협력 틀을 제공하는 등 군소도서국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다자협력 기반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¹¹³⁾

「SIDS 공동행동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ction on SIDS)」의 다섯 가지 공동 행동 우선 분야 중 하나로 꼽힌 ‘지속가능한 해양경제의 발전과 실행 지원’ 부분을 보면, OECD는 군소도서국의 방대한 해양자원을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로 전환·발전시키기 위한 국제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¹¹⁴⁾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는 블루카본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 경제 다각화, 고용 창출, 에너지 수입 의존도 감소, 생계 및 식량안보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OECD는 기존 해양경제의 주축인 해양관광·수산·해운 부문의 지속가능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청정 해상풍력, 해양생명공학, 블루푸드 등 신흥 해양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군소도서국이 이러한 해양경제 달성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근거자료, 정책 자문, 자원 조달 능력이 필수적인

112) UNIDO(2019), pp. 4-7.

113) OECD(2024a), pp. 2-7.

114) OECD(2024a), p. 7.

만큼, OECD는 개발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지원을 핵심 수단으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 OECD는 DAC 회원국을 포함한 개발 협력 공여국 및 공여 기관들이 군소도서국의 해양경제 전략 수립과 실행을 다각도로 지원하도록 촉구하고 있다.¹¹⁵⁾

(3) WMO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는 전 세계의 기상 및 수문(水文) 정보의 표준화와 자유로운 교환을 주도하며, 회원국 간의 협력을 통해 기후·기상 관측, 재해 대응, 환경보호,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는 UN의 전문기구 중 하나다.¹¹⁶⁾ 대표적인 군소도서국 대상 이니셔티브는 ‘EW4All(Early Warnings for All)’이다. EW4All은 2027년까지 수행되는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조기경보체계를 통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험 정보, 모니터링, 소통,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다중위험(end-to-end) 경보 체계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¹¹⁷⁾ 이 이니셔티브는 조기경보가 홍수·폭염·태풍·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이는 가장 비용 효과적 수단으로 입증되었기에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EW4All은 정부·국제기구·민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와 자문패널을 통해 추진되고, Hydromet 개발동맹·REAP 등 기존 글로벌·지역 협력체와 연계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¹¹⁸⁾

115) OECD(2024a), p. 7.

116) WMO, Overview(검색일: 2025.6.25.)

117) Early Warnings for All, About EW4All(검색일: 2025.6.25.)

118) Early Warnings for All, About EW4All(검색일: 2025.6.25.)

2) 지역기구

(1) 태평양 관련 지역기구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이하 WCPFC)는 군소도서국의 해양수산 부문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지속가능한 어업 및 자원관리를 지원하는 다자 간 국제협력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대표적 조치가 「CMM 2013-07」이다. 이 조치는 WCPFC의 모든 보존관리조치(CMM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nd Resolutions)를 적용하거나 해석할 때 군소도서국의 제도적·기술적 제약과 개발 수요를 반드시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군소도서국의 감시·통제·감독(MCS: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이하 MCS) 역량 강화, IUU 어업 대응, 수산 관련 산업 기반 강화, 시장 접근성 제고를 주요 지원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회원국에 대한 기술 이전, 훈련, 장비 지원 등을 선진국 및 역량보유국이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¹¹⁹⁾

태평양 도서국포럼(PIF)은 해양 주권 보전, 기후 위기 대응, 회복력 있는 경제 및 공동체 구축을 위한 포괄적 이행틀로 『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PIF는 회원국 간 해양자원 공동관리, 해양생태계 보전, 불법어업 대응, 해양쓰레기와 핵폐기물 문제 해결, 해양 산성화 대응 등 복합적 도전에 대한 다자협력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다.¹²⁰⁾

태평양 공동체(SPC)는 해양수산 분야를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고, 특히, 회원국의 해양자원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 기반 접근과 기술 협력을 중심에 두고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¹²¹⁾ SPC는 수산자원 평가, 연안 어업 개발, 양식업

119) WCPFC(2013), pp. 1-4.

120) Pacific Islands Forum Secretariat(2022)(검색일: 2025.5.9.), pp. 11-16.

기술 지원을 비롯하여,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및 모니터링 체계를 회원국과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태평양 도서국의 주권적 자원관리 능력 제고와 회복력 있는 해양경제 구축을 목표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¹²²⁾

태평양 도서국포럼 어업기구(FFA: Forum Fisheries Agency, 이하 FFA)는 1979년 설립된 정부 간 기구로, 회원국의 EEZ 내 참치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회원국 국민이 이를 통해 최대한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¹²³⁾ FFA는 「2020-2025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회원국의 국가별 수산법 제정 및 이행을 지원하며, 국가 및 역내 차원에서 정책 자문, 정보 제공, 기술 지원을 수행한다. 또한 회원국들이 WCPFC 협상 및 각종 법적 협정 이행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 지원을 제공한다.¹²⁴⁾ FFA의 활동은 크게 수산자원 관리(지속가능한 어획 보장), 감시·통제·감독, 수산업 개발(가공·유통·투자 촉진 및 고용 창출)로 구분되며, 이를 통해 연간 약 71억 달러 규모의 참치 자원이 태평양 도서국 지역사회의 식량안보, 소득 증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¹²⁵⁾

(2) 카리브해 관련 지역기구

카리브해지역수산기구(CRFM: Caribbean Regional Fisheries Mechanism, 이하 CRFM)는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의 식량안보, 생계 안정,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수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국제협력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¹²⁶⁾

121) SPC(2024), pp. 12-14.

122) SPC(2024), pp. 14-17.

123) FFA(2019), pp. 3-4.

124) FFA(2019), pp. 5-7.

125) FFA(2019), pp. 7-9.

126) CRFM(2024), pp. 1-16.

카리브 공동체(CARICOM)는 CARICOM ‘공동수산정책(CCCFP: The CARICOM Common Fisheries Policy)’을 기반으로 카리브 지역 내 수산 거버넌스를 통합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과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을 추진하며, 국제 파트너와의 기술협력, 재정 동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해양주권과 자원 자립성 증진을 강화하고 있다.¹²⁷⁾

2. 주요국

1) 미국

미국은 태평양 및 카리브해 도서국과의 해양수산 분야 협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기후변화 등 군소도서국이 직면한 복합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태평양 도서국과 관련해서는, 「미국-태평양 파트너십 전략(2022)」 및 2023년 PIF(태평양 도서국포럼) 연계 파트너십 강화 정책을 통해 태평양 도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을 다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태평양 참치조약(South Pacific Tuna Treaty)과 연계한 10년간 6억 달러 규모의 경제지원협정을 추진하며 수산자원 관리·해양안보·블루이코노미를 통합적으로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양식 및 해양공간계획(MSP: Marine Spatial Planning) 지원 등 해양자원 거버넌스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¹²⁸⁾ 또한 미국은 하와이 포드섬에 IUU 어업 대응센터와 해양오염 대응센터를 신설하여 역내 해양영역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및 IUU 어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수면 상승·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태평양

127) CARICOM(2025), pp. 31-33.

128) The White House(2022), FACT SHEET: Roadmap for a 21st-Century U.S.-Pacific Island Partnership(검색일: 2025.11.24.)

조기경보체계 구축, 기상·해양 데이터 수집 인프라 확대 등 기후·해양 회복력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¹²⁹⁾ 아울러 PIF의 「Blue Pacific 2050 전략」을 기반으로 Partners in the Blue Pacific(PBP) 등 지역 협력 체계와 연계한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고, 바누아투·통가·솔로몬제도 등 주요 도서국에 외교공관 및 USAID 지역 사무소를 확대해 현장 기반의 협력 플랫폼을 확충하는 등 해양수산, 기후·환경, 경제발전이 연계된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¹³⁰⁾

카리브해 도서국과 관련해서는, 카리브해의 기후 적응회복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고안된 미국-카리브해 파트너십(PACC 2030: U.S.-Caribbean Partnership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2023)을 통하여 카리브해 연안 및 도서국가의 해양생태계 보전·복원, 해양연안 취약성 대응, 수산업 및 어업체계의 회복력 제고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¹³¹⁾ 또 다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으로는 기후 기업가정신 연합(Coalition for Climate Entrepreneurship)을 통해 자메이카 킹스턴에 카리브해 기후 허브를 설립하여 지역 기업가 지원을 추진 중인 사례가 있다. 또한, 카리브해 지역 안보 이니셔티브(CBSI: Caribbean Basin Security Initiative)를 통해 2010년 이후 9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불법 거래, 국제 범죄, 해상 법 집행 등 역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¹³²⁾ 이와 같은 미국의 노력은 태도국과 카리브해 도서국의 기후변화 대응, 해양 안보, 지속가능한 개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다층적 협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2025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현 정책 기조에 따라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129) The White House(2023), FACT SHEET: Energizing the U.S.-Pacific Islands Forum Partnership(검색일: 2025.11.24.)

130) The White House(2022), FACT SHEET: Roadmap for a 21st-Century U.S.-Pacific Island Partnership(검색일: 2025.11.24.)

131) U.S. Department of State(검색일: 2025.11.24.)

132) The White House(2024), FACT SHEET: U.S. Support to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검색일: 2025.6.24.)

상황 및 정책 방향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SIDS와의 협력 방향 역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2) 유럽연합 및 영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군소도서국을 기후변화와 해양 거버넌스 측면에서 중점협력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지원에 대한 정책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¹³³⁾ 특히, 태평양 도서국과 카리브해 도서국들과는 코토누 협정(Cotonou Agreement) 및 EU-ACP 협정을 통해 제도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해양 및 연안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해오고 있다.¹³⁴⁾ EU는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MPA의 확대, IUU 어업 감시 체계 구축, 해양생태계 보전, 수산자원 관리, 기후변화 완화 등의 분야에서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제도적 협력과 기술 역량 강화를 병행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¹³⁵⁾

영국은 2022년 6월 호주, 미국,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태평양 도서국들과 ‘Partners in the Blue Pacific(PBP)’을 발족하였다. PBP는 태평양의 우선 과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태평양 지역주의를 강화하며, 기후·해양안보·연결성 등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비공식 협력체다. PBP의 모든 활동은 태평양 도서국이 주도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¹³⁶⁾¹³⁷⁾

133) Lannon(2023), pp. 141-142.

134) Lannon(2023), p. 152, pp. 159-163.

135) Lannon(2023), p. 152, pp. 159-163.

136) The White House, Statement by Australia, Japan, New Zeal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artners in the Blue Pacific(PBP)(검색일: 2025.5.25.)

137) Government of UK, Establishing the Partners in the Blue Pacific (PBP): joint statement (검색일: 2025.5.7.)

3) 호주 및 뉴질랜드

호주와 뉴질랜드는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활발한 국제협력 사업과 지원을 추진 중인 대표적인 공여국이다.

호주는 해양환경 분야에서 지역 및 다자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IUU 어업 해결을 위한 역내 공동단속과 MCS 협력 체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니우에조약 부속협정(NTSA: Niue Treaty Subsidiary Agreement)과 같은 법적 틀을 기반으로 자원과 장비 공유, 정보 교환, 공동 작전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FFA, SPC 등 지역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산자원 관리 역량 강화, 연안 어업 지원, 과학기반 연구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적·기술적 기여를 확대하고 있다.¹³⁸⁾ 특히, 2023년 발표된 「호주국제개발정책(Australia's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은 호주의 대외협력 기조를 분명히 보여준다. 동 정책은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는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한 다수의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후 회복력 있는 연안 수산업 육성, 지역사회 생계 지원, 수산업 가치사슬 고도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¹³⁹⁾ 이러한 노력은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자원 관리 주권을 강화하고, 역내 해양경제 기반을 회복력 있게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뉴질랜드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ffective Sustainable Development)」 정책 아래, ‘퍼시픽 리셋(Pacific Reset)’ 기조에 따라 태평양 지역을 국제개발협력의

138) Australian Fisheries Management Authority(검색일: 2025.8.25.)

139) Australian Government(2023), p. 11.

최우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¹⁴⁰⁾ 해양수산 ODA 정책에 있어서는 과학 기반 수산자원 관리, 어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책 자문 제공 등을 통해 태평양 도서국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태평양 어업을 위한 지역 로드맵(Regional Roadmap for Sustainable Pacific Fisheries)」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¹⁴¹⁾

4) 중국 및 일본

중국의 태평양 협력 전략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 一帶一路)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태평양 국가들과의 BRI 협력 각서 체결과 경제·무역·금융·인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태평양 지역 내 연결성 향상과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¹⁴²⁾ 특히, 2022년에는 솔로몬제도와는 안보 협정을 체결하는 등¹⁴³⁾ 경제뿐 아니라 전략적·정치적 영향력도 확대하고 있다. 동일한 이니셔티브로 카리브해와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22년 중국-카리브 개발센터를 개설해 경제·무역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내 경제·해양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¹⁴⁴⁾

일본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되는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PALM: Pacific Islands Leaders Meeting)」를 통해 태평양 도서국과의 정례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2024년 도쿄에서 열린 제10차 PALM에서는 일본과 태도국 간 미래 비전인 ‘Vision for the PALM Partnership towards 2050, Striding forward Together’를 채택하였다.¹⁴⁵⁾ 또한, 일본은 CARICOM

140) New Zealand Foreign Affairs and Trade(검색일: 2025.6.25.)

141) Andrew & Ingrid(2022), pp. 3-10.

142) Belt and Road Portal(2025.11.20.), Political parties of China, Pacific island countries vow to deepen cooperation(검색일: 2025.11.30.)

143) 국가안전전략연구원(2022), p. 1.

144) Belt and Road Portal(2025.11.20.), Xinhua Headlines: China, Caribbean countries deepen comprehensive cooperation(검색일: 2025.11.30.)

14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Pacific Islands Leaders Meeting(PALM)(검색일:

과의 공동 선언인 ‘Partnership for Peace, Development and Prosperity’를 통해 경제·사회 개발, 재해 대응, 어업·해양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및 해양환경 보전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9월 개최된 제8차 CARICOM-Japan 장관급 회의에서 일본은 카리브해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해양·에너지·기후 대응을 포함한 지속 가능 발전 협력을 논의했다.¹⁴⁶⁾

제2절 해양수산 국제협력 지원 실적 및 사례 분석 —

1. 태평양

1) 대외교역 구조와 무역수지

2024년 기준 대부분의 태평양 군소도서국이 전체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구조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4개국 중 파푸아뉴기니만이 1억 5,9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피지, 솔로몬제도, 마이크로네시아와 같은 중소기업 국가들은 일정 수준의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 규모가 수출을 초과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팔라우, 통가, 키리바시, 사모아 등은 수출입 비율이 10배에서 많게는 46배에 달하는 등 구조적인 불균형이 두드러지며,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었다.

2025.5.25.)

14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Japan-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lations.
(검색일: 2025.11.30.)

〈표 3-1〉 태평양 군소도서국 수출입 현황(2024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국가명	수출	수입	수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13,268	4,109	9,159
피지공화국	1,163	3,154	-1,991
솔로몬제도	488	868	-380
마이크로네시아	186	292	-106
바누아투공화국	61	529	-468
마셜제도공화국	58	98	-40
사모아독립국	42	489	-447
나우루공화국	34	63	-29
키리바시공화국	24	335	-311
쿡제도	13	174	-161
통가왕국	8	266	-258
팔라우공화국	3	138	-135
니우에	1	19	-18
투발루	0	34	-34

주: 2024년 수출액 기준 정렬

자료: UNCTADstat Data centre(검색일: 2025.6.24.) 원시자료(UNCTAD Raw Data)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외국인직접투자(F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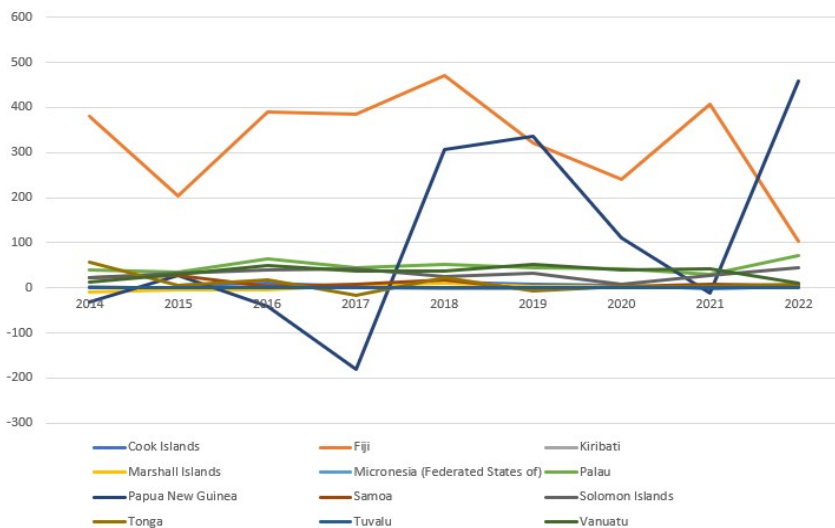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태평양 도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순유입액 추이를 살펴본 결과, 국가별로 유입 규모 및 변동성이 크게 상이하였다.

이 기간에 피지는 연평균 300백만 달러 이상의 FDI를 유치하였으며, 특히 2016년과 2018년에는 각각 390백만 달러, 471백만 달러로 정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104백만 달러로 급감했다. 파푸아뉴기니는 2014년 -30백만 달러, 2017년 -180백만 달러로 음의 수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18년 306백만 달러, 2022년에는 458백만 달러로 크게 반등했다. 팔라우와 바누아투는 10년 가까이 일정 수준의 안정적

유입을 지속하였고, 특히 팔라우는 2022년 72백만 달러로 비교적 투자 선호도가 높은 편에 속했다. 반면 마셜제도, 키리바시, 통가, 사모아는 전체적으로 유입액 자체가 미미하며, 해마다 유입과 유출이 교차되는 불안정한 구조를 보였다.

〈그림 3-1〉 태평양 군소도서국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 추이(2014~2022년)

단위: 백만 달러



주: 나우루, 니우에는 통계가 제공되지 않아 본 데이터 분석에서 제외

자료: UNCTADstat Data centre, Foreign direct Investment(검색일: 2025.6.25.) 원시자료(UNCTAD Raw Data)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국제개발협력

2025년 6월 기준, 태평양 군소도서국 중 ODA 수원국은 총 12개국으로 피지공화국, 키리바시공화국, 마셜제도공화국, 마이크로네시아, 나우루공화국(2026년 졸업 예정), 팔라우공화국,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사모아독립국, 솔로몬제도, 통가왕국, 투발루, 바누아투공화국 등이다.¹⁴⁷⁾

147) OECD(2025), DAC list of ODA recipients(검색일: 2025.6.30.)

태평양 군소도서국은 전반적으로 ODA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보이며, GNI 대비 ODA 수혜 비중이 10~80%에 이르는 국가가 상당수 확인되었다. 특히 투발루(2022년 79.85%), 통가(54.26%), 마셜제도(48.21%), 마이크로네시아(31.46%) 등은 ODA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총액 기준으로는 파푸아뉴기니, 피지, 솔로몬제도 등이 1억 달러 이상 규모로 ODA를 지속적으로 수혜하고 있었다.

수산 분야 ODA 수혜는 대부분의 태도국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마셜제도, 키리바시,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등은 연도별로 수백만 달러 이상의 수산 ODA를 수혜하였다. 특히 마셜제도와 마이크로네시아, 투발루 등은 수산 ODA가 전체 ODA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태도국은 ODA 의존도와 수산 분야 ODA 집중도가 모두 높은 특성을 가지며, 이는 지역의 경제 기반 취약성과 해양(수산)자원 중심의 산업 구조, 정책 기반 미비 등과 맞물려 수산 분야 국제협력 수요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기명	ODA 수혜금액(달러)				수신 분야 ODA 수혜금액(달러)				GNI 대비 ODA 수혜 비중(%)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22
투발루	27,370.0 01	36,480.0 00	43,060.0 01	36,009.9 98	53,560.0 01	809,000	2,074,000	2,700,000 0	2,287,000	1,499,000 0	39.36	79.85
바누아투 공화국	130,940, 002	130,600, 006	154,039, 993	166,899, 994	1125,059 ,998	1,096,000	2,269,000	967,000	1,144,000	1,465,000 0	13.91	10.60

자료: World Bank Group(2025),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25.6.19.);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검색일: 2025.6.25.) 데이터
비탐으로 저자 작성

4) 사례 분석

(1) 태평양 도서국의 FDI 기반 수산업 발전 경험

태평양 도서국은 참치 자원을 포함한 풍부한 수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단순 원물 수출에 의존해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FDI를 적극 활용한 가공·수출 중심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파푸아뉴기니에서는 2010년대 초반 태국의 Thai Union, 필리핀의 Century Canning과 Frabelle Fishing Corporation이 합작하여 라에(Lae) 지역에 Majestic Seafood 참치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¹⁴⁸⁾ 이 공장은 하루 350톤의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약 5,000명의 고용을 창출해 가공·포장·수출을 통한 가치사슬 내재화를 실현하고 있다.¹⁴⁹⁾ 다만, 규제 미비와 외자 의존 심화, 현지 인력의 숙련도 부족은 여전히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남아있다.¹⁵⁰⁾

또한 피지에서는 뉴질랜드 자본이 참여한 Solander¹⁵¹⁾가 장기적으로 연승(longline) 참치어업과 가공·수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업은 매년 약 2,500만 피지 달러(미화 약 1,200만 달러) 규모의 경제적 기여를 하고, 선장·승무원·기관사 등을 포함한 4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며, 현장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¹⁵²⁾ 특히 Solander는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ld Fund for Nature)과 협력하여 혼획 저감과 지속가능 어업 관행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사회적 가치도 창출하고 있다.¹⁵³⁾

148) SeafoodSource(2012.3.6.)(검색일: 2025.8.16.)

149) International Collective in Support of Fishworkers(검색일: 2025.8.16.)

150) Oxford Business Group(검색일: 2025.8.16.)

151) 기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Solander로 표기되나, 일부 외부 출처에서는 Solander Pacific Limited 또는 Solander (Pacific) Ltd. 등도 사용됨. 본 보고서에서는 공식 표기인 Solander를 사용함. Solander, Profile(검색일: 2025.8.16.)

152) Solander, Profile(검색일: 2025.8.16.)

이러한 사례는 태평양 도서국이 FDI를 통해 대규모 고용 창출과 산업화, 가치사슬 내재화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외자 의존, 제도·규제 미비, 인력 역량 부족은 구조적 제약으로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국제협력 전략은 ① 현지 인력 역량 강화, ② 환경·사회 규제 체계 정비, ③ 기술 이전 제도화, ④ 산업 생태계 다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2) 태평양 도서국의 ODA 기반 수산업 발전 경험

태평양 도서국은 기후변화, 자원 남획, 제도 미비 등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호주 외교통상부(DFA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이하 DFAT)는 SPC와 함께 2010년부터 「태평양 도서국 수산식량안보 프로그램(PFFSP: Pacific Fisheries for Food Security Program)」을 추진하였다.¹⁵⁴⁾

총 7년간 2,345만 호주 달러(약 210억 원) 규모로 키리바시, 투발루, 쿡 제도, 사모아 등 15개국에서 수행된 본 사업은 ① 수산업 기반 조성(과학 자문, 수출 인증, 냉장 유통망 개선), ② 수산자원 활용 확대(내수면 양식, 심해어 관리, 어업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③ 커뮤니티 기반 관리체계 확립(워크숍, 교육, 성과관리 도입)으로 구성되었다.¹⁵⁵⁾

DFAT의 외부 종료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본 사업은 적합성·효과성·효율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모두 5점(6점 만점)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의 개발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되었다. 특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지원, SPC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 이전,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확립, 성과관리체계 도입 등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자립성을 강화하는 핵심 성과로 꼽혔다.¹⁵⁶⁾

153) WWF(2012.6.26.)<검색일: 2025.8.16.>

154)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16.1.), pp. 10-12.

155) 위의 문서, p. iii, 42.

156) 위의 문서, pp. 1-20.

이 사례는 군소도서국 협력에서 단순 자원 지원을 넘어 제도 개선, 기술 역량 강화, 주민 참여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태평양 도서국 대상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설계할 때 제도·역량·거버넌스를 아우르는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2. 카리브해

1) 대외교역 구조와 무역수지

2024년 기준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의 수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태평양 군소도서국과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 규모가 수출을 크게 초과하며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아나는 예외적으로 194억 3,400만 달러의 수출과 67억 3,000만 달러의 수입으로 127억 3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지역 내 유일하게 뚜렷한 무역수지 흑자 구조를 보였다. 반면 도미니카연방은 138억 8,800만 달러의 수출에도 불구하고 297억 6,400만 달러의 수입으로 인해 158억 7,6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규모 면에서 가장 큰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나타났다. 앤티가바부다는 수출 2,300만 달러 대비 수입 8억 1,600만 달러로 수입이 수출의 약 36배에 달하며, 도미니카는 수입이 수출의 23배, 세인트루시아는 13배,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은 9배, 세인트키츠네비스는 8.6배로 나타나, 소규모 국가일수록 심각한 수입 의존 구조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표 3-3〉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수출입 현황(2024년)

단위: 백만 달러

국가명	수출	수입	수지
가이아나	19,434	6,731	12,703
도미니카연방	13,888	29,764	-15,876
트리니다드토바고	8,702	9,043	-341
쿠바	1,788	8,784	-6996
자메이카	1,928	7,321	-5393
수리남	1,296	1,648	-352
아이티	710	3,114	-2404
바하마	601	4,271	-3670
바베이도스	461	2,154	-1693
벨리즈	460	1,403	-943
세인트루시아	78	1,028	-950
세인트빈센트그레 나딘	52	484	-432
그레나다	50	448	-398
세인트키츠네비스	34	292	-258
앤티가바부다	23	816	-793
도미니카	10	233	-223

주: 2024년 수출액 기준 정렬

자료: UNCTADstat Data centre(검색일: 2025.6.24.) 원시자료(UNCTAD Raw Data)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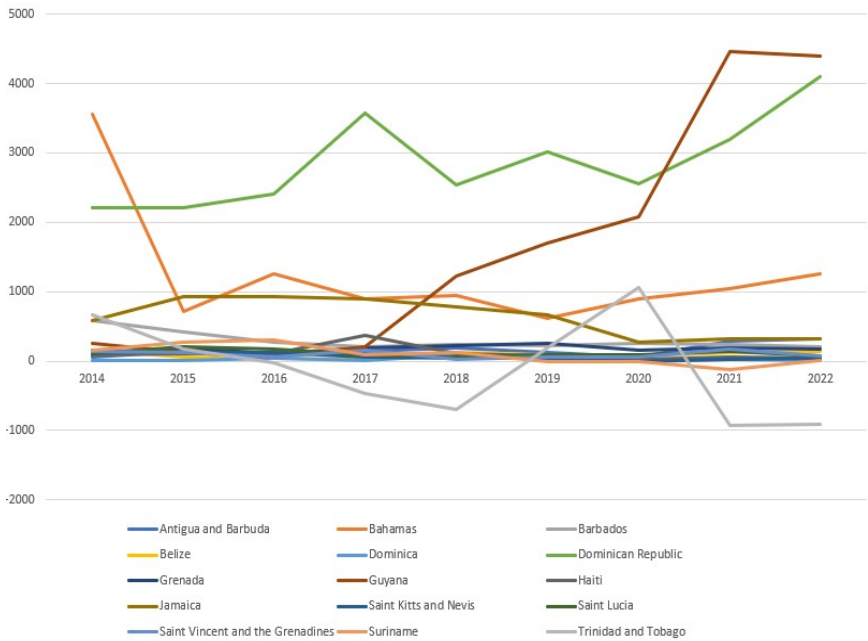
2) 외국인직접투자(FDI)

〈그림 3-2〉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카리브해 도서국의 외국인투자 순유입액(FDI inflows) 추이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국가 간 유입 규모의 편차가 크며 연도별로도 상당한 등락이 나타난다. 가장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국가는 가이아나로 2018년 1,231백만 달러에서 2022년 4,393백만 달러로 급등했다. 도미니카공화국 또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2,209백만 달러에서 2022년에는 4,099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바하마는 2014년 3,551백만 달러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급감하여 2015년 713백만 달러로 감소한 뒤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트리니다드토바고는 변동성이 매우 큰 양상을 보였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순유출을 기록했고,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935백만 달러, -913백만 달러로 부정적인 흐름이 지속되었다. 자메이카와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등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일정 수준의 외국인 투자를 유지했다.

〈그림 3-2〉카리브해 군소도서국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 추이(2014~2022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TADstat Data centre, Foreign direct Investment(검색일: 2025.6.25.) 원시자료 (UNCTAD Raw Data)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국제개발협력

2025년 6월 기준,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중 ODA 수원국은 총 11개국으로 벨리즈, 쿠바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그레나다, 가이아나 (2026년 졸업 예정), 아이티공화국,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공화국 등이다.¹⁵⁷⁾

카리브해 지역은 국가 간 ODA 수혜 규모와 수산 분야 ODA 집중도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아이티는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ODA를 지속적으로 수혜하고 있으며, 쿠바와 도미니카공화국 역시 카리브해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ODA 수혜 규모가 큰 주요 수원국으로 분류되지만, 연도별 수혜액 변동성이 큰 특징을 보였다. 특히 아이티는 GNI 대비 ODA 수혜비중이 2018~2022년 평균 5% 이상으로, 본 지역 내 가장 높은 ODA 의존도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태평양 군소도서국보다 ODA 의존도는 낮았다.

수산 분야 ODA는 전반적으로 매우 미미하였으며, 도미니카연방, 세인트빈센트, 세인트루시아 등 일부 국가만이 수백만 달러대의 수산 ODA를 수혜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등 주요 수산물 생산국도 연도별 수혜액 편차가 컸고, 가이아나, 자메이카도 제한적 수준에 머물렀다. 수산 ODA가 전체 ODA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 1% 미만으로, 수산 분야 개발협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GNI 대비 ODA 의존도에서 편차가 매우 크며, 수산 분야 ODA는 특정국에 집중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분산된 채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157) OECD(2025), DAC list of ODA recipients(검색일: 2025.6.30.)

〈표 3-4〉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국제개발협력 현황(2018~2022년)

국기명	ODA 수혜금액(달러)					수산 분야 ODA 수혜금액(달러)					GNI 대비 ODA 수혜 비중(%)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앤티가바부다	ODA 비대상국														
바하마	ODA 비대상국														
바베이도스	ODA 비대상국														
벨리즈	84,279,998.78	151,940,002.4	158,149,993.9	145,240,005.5	82,540,000.92	14,000	19,000	14,000	23,000	12,000	1.58	1.59	3.50	3.30	0.75
쿠바 공화국	749,990,029	497,140,015	529,109,985	152,399,994	137,490,005	.	387,000	120,000	145,000	465,000	0.76	0.49	.	.	.
도미니카 연방	26,940,001	51,389,999	64,320,000	79,070,000	59,520,000	163,000	304,000	280,000	1,720,000	4,145,000	4.84	8.54	12.54	14.23	9.77
도미니카 공화국	89,300,003	130,919,998	374,450,012	448,420,013	367,000,000	16,000	14,000	.	.	.	0.11	0.15	0.50	0.50	0.34
그레나다	31,740,000	14,680,000	69,599,998	68,139,999	-93,639,999	16,000	38,000	1,485,000	.	.	3.01	1.34	7.16	6.65	-8.19
가이아나 공화국	104,180,000	111,519,997	52,169,998	138,899,998	198,979,996	.	.	11,000	.	.	2.22	2.19	0.97	2.16	2.23
아이티 공화국	1,017,109,995	686,900,024	887,969,991	951,479,980	890,719,971	.	.	.	.	.	6.18	4.62	6.11	4.55	4.39
자메이카	100,309,998	125,169,998	66,870,003	58,580,002	95,139,999	110,000	58,000	50,000	1,000	.	0.66	0.81	0.50	0.41	0.57
세인트키츠 네비스연방	ODA 비대상국														
세인트 루시아	8,560,000	32,110,001	98,180,000	99,949,997	33,410,000	485,000	2,188,000	431,000	446,000	660,000	0.44	1.63	6.71	5.58	1.56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18,150,000	84,480,003	76,139,999	126,220,000	15,490,000	64,000	3,090,000	264,000	.	782,000	2.06	9.29	8.84	14.77	1.62

국가명	ODA 수혜금액(달러)					수산 분야 ODA 수혜금액(달러)					GNI 대비 ODA 수혜 비중(%)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수리남 공화국	14,180,000	23,469,999	27,190,001	28,780,001	54,779,999	.	2,999,000	9,000	47,000	.	0.39	0.65	1.11	1.06	1.57
트리니다드 토바고 공화국	ODA 배대상국														

자료: World Bank Group(2025),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25.6.19.);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검색일: 2025.6.25.) 데이터 기반으로 저자 재작성

4) 사례 분석

(1) 카리브해 도서국의 FDI 기반 수산업 발전 경험

카리브해 도서국은 관광업 중심의 경제 구조 속에서 수산업의 산업화와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해 FDI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이아나는 풍부한 수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낙후된 어항 및 가공·저장 인프라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중국 Hongdong Fisheries Co., Ltd.가 약 2,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수도 조지타운(Georgetown) 인근에 가이아나 수산 산업 단지(Guyana Fishery Industrial Park)를 조성하였다. 약 30,000m² 규모의 이 단지는 하루 200톤의 새우와 90톤의 어류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냉동·냉장 물류, 직업훈련센터 등을 포함한 종합 어업 기지로 운영되고 있다.¹⁵⁸⁾ 이로써 현지 고용 창출과 어가의 소득 기회 확대, 수산물 수출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¹⁵⁹⁾ 그러나, 동시에 관리 역량 부족, 남획 위험, 제도적·환경적 기반의 취약성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¹⁶⁰⁾

반면 자메이카는 전통적으로 관광업에 편중된 외화 획득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2009년~2019년 기간 동안 유입된 FDI의 약 23%가 관광업에 집중되었다.¹⁶¹⁾ 그 결과 수산업으로의 외자 유입은 제한적이었고, 산업 다변화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세계은행 역시 자메이카 경제가 낮은 생산성, 협소한 경제 기반, 관광 의존성 등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¹⁶²⁾ 그러나 최근 자메이카 정부는 수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Floyd Green 농업수산물부 장관은 “지금도 수산업에

158) 21st-Century Maritime Cooperation Committee(2021.2.26.)(검색일: 2025.8.18.)

159) 위의 문서

160) Drugan et al.(2019), pp. 2-5.

161) IFC(2022), p. 5(검색일: 2025.8.18.)

162) World Bank Group, OVERVIEW: JAMAICA(검색일: 2025.8.18.)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며 내수면 양식, 연안 어업, 스포츠 피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참여와 외자 유치를 장려하고자 하였다.¹⁶³⁾

이처럼 카리브해 도서국은 FDI를 통해 수산업 기반을 확충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관광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제도·관리 역량 부족이 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국제협력은 ① 제도적 신뢰성과 정책 일관성 강화, ② 수산업 규제·관리 역량 확충, ③ 지역사회와 연계된 고용·훈련 체계 구축, ④ 관광·수산업 연계를 통한 산업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순 투자 유치를 넘어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적이고 회복력 있는 수산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 카리브해 도서국의 ODA 기반 수산업 발전 경험

카리브해 도서국들은 풍부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화, 무분별한 연안 개발, 해양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태계 훼손과 수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SAID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카리브해 해양생물다양성 프로그램(Caribbean Marine Biodiversity Program)」을 추진하였다.¹⁶⁴⁾

총 1,250만 달러 규모로 도미니카공화국, 그레나다, 아이티, 자메이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등 5개국에서 수행된 본 사업은 ① 해양보호구역 관리 역량 강화, ② 지역 커뮤니티 기반 대체 생계 촉진(생태관광·수산물 가공), ③ 국가 정책 및 제도 개선, ④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 확보 체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¹⁶⁵⁾

USAID의 성과 평가에 따르면, 본 사업은 각국 최초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해양

163) Jamaica Information Service(2021.9.15.)(검색일: 2025.8.18.)

164) The Nature Conservancy(2020), p. 1(검색일: 2025.6.26.)

165) USAID(2017.9.30.), pp. 3-8.

보호 활동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또한 생태관광 및 가공 산업을 통한 소득 창출로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생계 간 균형을 달성하였다.¹⁶⁶⁾ 특히, 카리브해 생물다양성기금(CBF: Caribbean Biodiversity Fund)¹⁶⁷⁾과 카리브해 챌린지 이니셔티브(CCI: Caribbean Challenge Initiative)¹⁶⁸⁾와의 제도적 연계를 통해 장기적 재원 조달 및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한 점이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¹⁶⁹⁾

본 사례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생계 간 균형을 달성한 동시에, 제도화된 재원 메커니즘과 다자협력 기반을 통해 장기적 해양환경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카리브해 도서국 협력 전략 수립 시 단기적 지원을 넘어 제도·재원·참여를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군소도서국을 대상으로 국제사회 및 주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 국제협력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선, 국제기구는 군소도서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관리, 해양생태계 보전, 블루이코노미 육성을 핵심 축으로 하는 다층적 해양수산

166) 위의 문서, pp. 3-8.

167) 카리브해 생물다양성기금은 해양보호 구역의 운영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설계된 지속 가능한 재정 자원 체계로 볼 수 있음

168) 카리브해 챌린지 이니셔티브는 카리브해 국가들이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조약 기반의 다자 협력체로, 카리브 국가 정부, 국제기구, 시민 사회,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음

169) USAID(2017.9.30.), p. 5, pp. 7-11.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UN DESA는 군소도서국의 저지대·연안 집약적 경제구조에 따른 기후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블루이코노미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하였다. UNIDO는 SAMOA Pathway의 우선과제로 수산업 역량 개발과 회복탄력성 강화를 제안하였으며 해양폐기물 억제 및 자원 순환을 지원하고 있었다. OECD는 2024년 제4차 SIDS 국제회의에서 「SIDS 공동행동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로 전환·발전시키기 위한 국제협력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WMO는 EW4All 이니셔티브를 통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통한 기후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지역 차원으로 살펴보면, 태평양 지역의 WCPFC, PIF, SPC, FFA 등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IUU 어업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역내 공동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CRFM과 CARICOM이 수산 거버넌스 통합과 기후적응형 지역협력을 추진하고 있었다.

주요 공여국의 협력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태평양 도서국 대상 별도 전략 및 정책 수립을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었다. 수산자원 관리, 해양 안보, 블루 이코노미, 해양 거버넌스, IUU 어업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을 추진 중이었다. 카리브해에서는 PACC 2030을 통해 연안 및 도서국가의 해양 생태계 보전, 해양연안 취약성 대응, 수산업 회복력 제고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지역 안보 이니셔티브를 통한 역내 안보 협력도 강화하고 있었다. EU는 코토누 협정 및 EU-ACP 협정을 통한 제도화를 바탕으로 해양 및 연안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영국은 타 국가와 공동으로 PBP를 발족하여 태평양 주도의 협력을 지원하고 있었다. 호주는 해양환경 분야에서 지역 및 다자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퍼시픽 리셋 기조하에 태평양 도서국을 최우선 협력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일본은 각 권역과의 협력 비전 설정 혹은 공동 선언을 통해 태평양 및 카리브해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태평양과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의 경제 현황 분석 결과, 두 권역 모두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태평양 14개국 중 파푸아뉴기니만이 무역흑자를 기록하였고, 팔라우·통가 등에서는 수입이 수출의 수십 배에 달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나타났다. 카리브해에서도 가이아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태평양 권역과 마찬가지로 수입이 수출의 수십 배에 달하는 등 수입 의존도가 심각하였다. FDI 유입 측면에서 태평양 지역은 피지와 파푸아뉴기니가, 카리브해 지역은 가이아나와 도미니카공화국이 주요 투자 유치국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유입액이 미미하거나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ODA 의존도는 태평양 도서국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그중에서도 투발루(79.85%), 통가(54.26%), 마셜제도(48.21%) 등이 GNI 대비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수산 분야 ODA도 전체 ODA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카리브해 지역은 상대적으로 ODA 의존도가 낮고 수산 ODA 비중도 대부분 제한적이었다.

사례 분석 결과, FDI 기반 수산업 발전 사례로 파푸아뉴기니의 Majestic Seafood, 피지의 Solander, 가이아나의 수산 산업 단지 등이 고용 창출과 가치사슬 내재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외자 의존 심화, 제도·규제 미비, 현지 인력 숙련도 부족은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ODA 기반 협력 사례인 호주의 태평양 수산 식량안보 프로그램(PFFSP)은 15개국 대상으로 7년간 추진되었으며, 적합성·효과성·효율성·지속가능성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USAID의 카리브해 해양생물 다양성 프로그램(CMBP)은 해양보호구역 확대, 대체 생계 촉진, 카리브해 생물다양성기금(CBF)과의 제도적 연계를 통해 장기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군소도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에서는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제도 개선, 기술역량 강화,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자원 메커니즘 구축을 통합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對)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수행하거나, 일본처럼 수산 전담 공익재단¹⁷⁰⁾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예산과 행정 구조의 현실을 고려한 점진적·기능적 협력 접근이 필요하다.

본 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 장(제4장)에서 제시될 권역별 협력 전략의 정책적 의의 및 수원국 협력 수요 분석과 연계될 예정이며, 특히 2장 소결에서 정리한 전략 수립 원칙(현황-수요-비교우위 연계, 기능별 모듈형 설계, 사전 기반 조성, 차등형 협력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다.

170) 公益財団法人海外漁業協力財団(2025), 財団の役割(검색일: 2025.7.10.)

04

우리나라의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현황 및 한계

제1절 전략적 국제협력 필요성 및 추진 방향 분석

1. 전략적 국제협력 필요성

1) 태평양 군소도서국

태평양 군소도서국은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특히 투발루와 키리바시 등 주요 태평양 군소도서국에서의 어획량이 국내 원양어업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¹⁷¹⁾,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중서부태평양 지역에서 90% 이상의 참치를 어획하고 있다.¹⁷²⁾ 이러한 점에서 태평양 도서국과의 조업 협력 기반 강화는 한국 원양어업의 안정적 생산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다.

171)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2024.1.), p. 13.

172) 한국원양산업협회(검색일: 2025.11.21.)

또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우리나라가 직접 조업쿼터를 배분받는 지역수산기구(RFMO: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로, 중서부태평양 해역의 자원관리 체계는 국내 수산물 공급의 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계된다.¹⁷³⁾ 실제로 한국에서 소비되는 수산물의 상당량이 태평양 수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은, 태도국과의 협력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경제적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2)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태평양 지역에 비하여 한국과의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하지만, 한국의 원양어업과 해운물류 전략 측면에서 잠재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한국은 안정적인 해외어장 확보를 위해 연안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특히 미입어어장 보유국에 대한 자원관리·어업기술 이전과 ODA 기반 협력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⁷⁴⁾ 이러한 관점에서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대서양 수역 원양어업의 접근성과 안정성을 넓히는 데 주요한 연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카리브 지역은 대서양-미주-파나마 운하를 잇는 핵심 해상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특히 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카리브해·대서양을 연결하는 세계 해상 물류의 필수 통로로, 2024 회계연도 기준 한국은 파나마 운하 화물 운송량 세계 4위를 기록하였다.¹⁷⁵⁾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해운·항만 산업에서는 해당 지역의 안정적 물류 조건 확보가 중요한 전략 기제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한국의 해상 물류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협력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논의에서도 상호 협력 기반을 구성할 수 있다.

173)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2024.1.), p. 4.

174)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2024.1.), pp. 13~14.

175) 원형민(2024.11.30.)(검색일: 2025.11.21.)

3) 두 권역이 갖는 공통된 협력 강점

태평양 군소도서국과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모두 해수면 상승, 빈발하는 기후재난, 해양생태계 훼손 등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전형적 기후취약 SIDS로, 국제사회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대표적 지역이다. 이들 국가는 기후적응·해양환경 보전, 연안관리, 재난대응 역량에서 높은 외부협력 수요를 갖고 있으며, 한국은 해양·기후 ODA사업, 기후정보 예측 시스템, 연안적응 인프라 구축, 수산·연안 생태복원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협력의 파트너십 효과가 크다. 특히 한국이 추진 중인 K-OEI(K-Ocean Economy Initiative) 등 해양·기후 중심의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를 태평양과 카리브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경우, 두 지역 모두에서 기후적응 지원·해양생태계 보전·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 촉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한국의 해양기후 외교 위상 또한 크게 제고될 수 있다.¹⁷⁶⁾¹⁷⁷⁾ 이에 따라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한국의 글로벌 해양기후 협력 전략을 확장하는 데 있어 상호 보완적이고 중요한 협력 축을 제공하는 파트너로 기대할 수 있다.

2. 정책적 협력 추진 방향 분석

1) 외교 및 국제개발협력 정책

우리 정부의 태평양 도서국 협력 기본 전략은 2022년 채택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우리 해외직접투자의 66%가 집중되고, 무역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 인도양, 말라

176) 외교부 보도자료(2025.11.18.)(검색일: 2025.11.19.)

177) 최인아 외(2023), pp. 239-243.

카해협, 남중국해를 거치는 해상교통로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¹⁷⁸⁾¹⁷⁹⁾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 기후변화·사이버안전·해양안전 등 비전통 안보 위협 증가를 배경으로 수립되었다. 이 전략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오세아니아, 동남아, 인도양, 중남미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포용·신뢰·호혜의 3대 원칙 아래 9개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중점과제는 ① 국제법을 존중하고 UN 중심의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¹⁸⁰⁾, ②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인권 증진 및 역량 강화와 역내 민주주의 구축을 위해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¹⁸¹⁾, ③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¹⁸²⁾, ④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을 위해 “포괄안보 협력 확대”¹⁸³⁾, ⑤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및 회복력 확보를 위한 역내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¹⁸⁴⁾, ⑥ 우리나라의 과학·정보통신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역내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¹⁸⁵⁾, ⑦ 역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¹⁸⁶⁾ 및 역내 외 다양한 소다자 협력을 선도해 지역·글로벌 문제 해결 기여, ⑧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경제적 위상에 부합하도록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¹⁸⁷⁾ 수행, ⑨ 다양한 문화·인적 교류로 국가 간

178) 대한민국정부(2022), p. 5.

179) 외교부, 인도-태평양 전략 소개(검색일: 2025.10.10.)

180) 위의 문서, p. 19.

181) 위의 문서, p. 20.

182) 위의 문서, p. 21.

183) 위의 문서, p. 22.

184) 위의 문서, p. 25.

185) 위의 문서, p. 26.

186) 위의 문서, p. 27.

187) 위의 문서, p. 29.

그리고 세대 간 “상호이해와 교류 증진”¹⁸⁸⁾ 등이며, 이 중 기후변화 대응, 해양안보, 맞춤형 개발협력은 군소도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태평양 도서국은 이 전략에서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분류되며, 전략을 수립했던 윤석열 정부는 이들 국가와의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했으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아세안의 경우 별도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통해 8개 중점 과제를 제시¹⁸⁹⁾하는 등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에 대한 협력 전략은 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다. 카리브해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별도 지역으로 구분되지 않고 ‘유럽·중남미’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¹⁹⁰⁾,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한 공식 정책문서는 본 연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한정된 ODA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인 중점협력국을 5년마다 지정하고 있으나, 지리적 접근성과 정책 연속성 등의 이유로 아시아 지역에 공적개발원조(ODA)를 집중하고 있다.¹⁹¹⁾ 그 결과 태평양·카리브해·인도양에 걸쳐 분포한 다수의 군소도서국이 ODA 대상국임에도 불구하고¹⁹²⁾ 중점협력국에서 배제되어 왔다. 2025년 기준 적용되고 있는 3기 중점협력국에 포함된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없으며¹⁹³⁾,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중장기 계획인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년)」에서도 군소도서국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¹⁹⁴⁾

188) 위의 문서, p. 31.

189) 외교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국영문 설명자료(검색일: 2025.8.1.)

190) 위의 문서, pp. 9-11.

191) 관계부처 합동(2021.1.20.)

192) OECD(2025), DAC list of ODA recipients(검색일: 2025.6.30.)

193) ODA Korea, 국가협력전략(CPS)(검색일: 2025.1.18.)

194) 관계부처 합동(2021.1.20.)

외교부 조직 구도에서도 태평양·카리브해·인도양 도서국이 여러 부서에 분산 관리되고 있어, 군소도서국 대상 협력이 부처·지역 단위로 파편화된 실정이다.¹⁹⁵⁾ 이는 장기적으로 협력 전략의 부재, 사업 축적의 어려움, 수요 대응의 비일관성으로 이어졌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은 현재 아세안 중심의 지역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협력 수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 그렇기에 외교 전략 등에서 태평양 도서국 및 중남미 카리브해 도서국과 같은 ‘소규모 도서국가(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와의 협력이 언급되더라도 선언적 수준에만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다. 태평양 도서국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등 실질적인 협력 수요를 인식하고 협력을 확대하겠다¹⁹⁶⁾는 기본 방향성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중남미 카리브해 도서국에 대해서는 더욱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별도의 협력 전략 없이 중남미 연안국 중심의 협력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외교정책 및 국제개발협력이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차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규모 도서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195) 아태2과에서 스리랑카·몰디브 등 남태평양 도서국을, 동남아1과와 아프리카2과에서 동티모르·세이셸 등 인도양 도서국을 나눠서 관리하고, 카리브·중남미협력과에서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을 각각 담당하고 있음. 외교부, 조직도(검색일: 2025.5.25.)

196) 대한민국정부(2022), p. 15.

2) 해양수산 분야 정책

오늘날 해양은 기후변화 위기 심화, 해양환경 오염, 해양생물다양성 손실, 국제수산자원 고갈 등 초국경적이고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Agreement on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협정 등 글로벌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이들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는 공해 보호, 해양자원 지속 가능한 이용,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등 글로벌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며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글로벌 요구에 대응하여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해양주권을 강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녹색해운 전환, 블루카본 및 해양 탄소중립 이행, 국제수산 거버넌스 구축 등 국제협력의 폭과 깊이를 넓혀가고 있다.

이런 환경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는 2023~2025년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 전략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프레임워크인 Korea Ocean Economy Initiative(이하 K-OEI)를 발표했다. K-OEI는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해양환경 보전, 해양수산 인재 양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협력의 기본방향이며 국제개발협력(ODA)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¹⁹⁷⁾

해양수산부 부서별로도 국제 해양수산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각 부서의 수요와 특화된 부분에 기반한 협력 방향을 법정 기본계획을 통해 밝히고 있다. 원양산업과에서는 수산자원 보존·관리, IUU 어업 근절 등에 대한

197)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10.21.)(검색일: 2025.10.27.)

국제협력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하며¹⁹⁸⁾, 국제협력 확대와 관련해 어촌·어항 인프라 개선, 어장보유국가 대상 자원관리, 어업기술 이전, 주민 역량 강화와 같은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원양어선원 송출국 대상 훈련선 제공 및 원양어선원 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¹⁹⁹⁾ 수산정책과는 개발도상국가의 전자보고, 전자 모니터링(EM: Electric Monitoring) 시스템 구축 및 역량 강화, IUU 어업 관련 국내 법제도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²⁰⁰⁾ 해양환경정책과의 경우,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강화 목표의 하나로 아시아 권역 중심의 해양환경 국제 교류와 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아시아 관련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해양환경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²⁰¹⁾

이렇게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협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내 각 부서별로 다양한 협력사업이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이 부서별로 개별 추진되는 경향이 강해,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중복되거나, 상호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수산, 해운·항만, 해양환경, 연구개발 등 분야별로 담당 부서가 상이하고, 국제협력 대상국 및 협력 방식도 다양하게 운영되면서 정책의 통합성과 지속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내 유관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의 방향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전략하에 조정·운영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198)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2024.1.), p. 1.

199)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2024.1.), p. 7, 13.

200) 해양수산부(2021.3.), p. 53.

201) 해양수산부(2021.1.), p. 11.

제2절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실적 분석

1. 분석 프레임워크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군소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국제협력 실적을 분석하여 추진 현황과 그 한계를 실증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제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나 본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ODA)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해당 국가군의 구조적 특성과 협력 수단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대부분 저소득·중소득 개발도상국으로서 시장 규모가 협소하고 인프라 여건이 취약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나 상업적 민간협력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는 IUU 대응, 해양환경 보호, 기후 회복력 강화 등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영역이 주류를 이루어 민간 투자 유인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 협력의 대부분이 정부·공공부문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군소도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우리나라의 협력 실적은 정책·공공협력 기반의 ODA가 사실상 유일하고도 대표적인 협력 경로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자료 접근성·정확성 측면에서도 분석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소도서국 협력을 둘러싼 구조적 맥락을 반영하여 ODA 실적을 중심으로 협력 유형을 재구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협력 전략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분야 협력 실적을 분석함에 있어 최근 5년(2019~2023년)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통계적 최신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해당 기간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분야 ODA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군소도서

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ODA사업을 가장 활발히 수행하는 주관 부처가 해양수산부임을 고려할 때, 2018년 이후 부처 ODA 예산과 사업 규모가 가시적으로 증가하며 협력 패턴이 질적으로 변화한 점은 분석 범위를 이 시기로 한정해야 할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2019~2023년은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ODA 추진 경향과 군소도서국 협력 구조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간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자료원은 전체 ODA 규모에 대해서는 OECD 통계를 활용하되, 개별 사업의 세부 내용과 추진 내역은 우리나라 공식 ODA 통계 데이터베이스인 ODA KOREA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매년 의결·배포하는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 결과 및 한계

1) 분석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태평양 군소도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ODA사업은 514건,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ODA사업은 총 398건으로 확인되어 총 912건의 ODA사업이 수행되었다.²⁰²⁾²⁰³⁾ 이 중 2장 현황 분석 시 활용한 4대 분야(수산, 해양관광, 해상 물류, 해양 기반 에너지 및 기후변화)에 부합하는 해양수산 ODA사업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설정하였다.

202) ODA Korea, ODA 통계(검색일: 2025.7.27.)

203) 이는 통계상의 수치로, 한 사업에서 여러 국가를 지원했을 경우 지원 받은 국가를 기준으로 사업 수가 결정됨. 예를 들어, 10개의 국가가 참여한 다국가 연수 1건은 통계상 10건으로 기록됨. 아울러, 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수행된 모든 사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년도 사업의 경우 실제로는 1건의 사업일 지라도 사업 수행 동안 사업 수에 포함됨.

〈표 4-1〉 해양수산 협력 분야별 키워드

구분	키워드
수산	수산, 어업, 자원관리, IUU, 감시·단속, MCS, 양식, 종자, 사료, 육성, 수산물 유통·콜드체인, 가공, 어선원, 어촌 개발
해양관광	해양관광, 해변·리조트 개발, 해양레저, 자연·문화 활용 관광
해상 물류	항만, 항로표지, 해상 교통, 항만 운영, 해운, 해수·해양측량, 해상 안전, 선원 양성
해양 기반 에너지,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완화, 회복력, 재난·태풍·해안침식 대응, 해양 산성화, 블루에너지, 재생에너지, 해양 환경, 생태계, 오염·쓰레기 관리

자료: 저자 작성

분야별 키워드로 분석하였을 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대상으로 수행된 해양수산 ODA사업은 총 92건으로 나타나 전체 군소도서국 협력사업의 약 10%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태평양 대상으로는 총 76건이 수행되어 83.5%를 차지하였으며, 카리브해 대상으로는 16건(17.3%)만 수행되었다.²⁰⁴⁾ 사업 수로는 수산 분야가 가장 많았으나 지출액으로는 해양 기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분야가 가장 많았다.

〈표 4-2〉 군소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ODA사업 분야별 분포(2019~2023년)

분야	사업 수(건)	금액(백만 달러)	주요 사업 내용
수산	53	7.533	양식, IUU 어업 대응, 수산물 유통 시설
에너지, 기후변화	14	5.515	친환경 에너지, 해양 조사
해상 물류	14	1.320	선원 양성, 항로 표지, 해상 안전
해양관광	0	0	
기타	11	0.060	해양법 및 해양 정보 역량 강화
총합	92	14.428	

자료: ODA Korea, ODA 통계(검색일: 2025.7.27.)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4) ODA Korea, ODA 통계(검색일: 2025.7.27.) 바탕으로 저자 작성

권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태평양에서는 수산 분야 편중이 더욱 심화되었다. 반면, 카리브해는 해양 기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분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⁰⁵⁾ 단, 카리브해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업 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큰 해양 기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분야 사업이 수행되면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태평양 군소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ODA사업 분야별 분포(2019~2023년)

분야	사업 수(건)	금액(백만 달러)	비중(사업 수 기준)
수산	47	6.915	64.4%
해상 물류	12	1.110	16.4%
해양 기반 에너지, 기후변화	11	1.915	15.1%
해양관광	0	0	0%
기타	6	0.024	4.1%
총합	76	9.964	100%

자료: ODA Korea, ODA 통계(검색일: 2025.7.27.)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4〉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ODA사업 분야별 분포(2019~2023년)

분야	사업 수(건)	금액(백만 달러)	비중(사업 수 기준)
수산	6	0.618	37.5%
해상 물류	2	0.210	12.5%
해양 기반 에너지, 기후변화	3	6.600	18.7%
해양관광	0	0	0
기타	5	0.036	31.3%
총합	16	7.464	100

자료: ODA Korea, ODA 통계(검색일: 2025.7.27.)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5) ODA Korea, ODA 통계(검색일: 2025.7.27.)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분석 한계

본 실적 분석은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군소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ODA의 전반적 추진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소표본 문제(Small sample problem)로 인한 통계적 불안정성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태평양(514건) 및 카리브해(398건) 군소도서국 대상 전체 ODA 912건 중 해양수산 분야는 92건(10.1%)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한된 표본 크기는 높은 분산과 표준오차를 야기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사업 구성이 연수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프로젝트형 사업의 대표성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주요한 한계로 작용한다. 둘째, 영향력 있는 관측치(Influential observations)에 의한 통계적 왜곡이다. 카리브해의 경우, 전체 16건 중 기후변화 분야의 단일 대형 프로젝트가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극단적 레버리지 효과’가 관찰된다. 이는 비중의 과대 대표(Over-representation) 현상을 유발하여, 단일 사업이 마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집중으로 오인되는 통계적 착시를 발생시킨다. 셋째, 구성 편향(Composition bias)과 해석상 한계다. 범주형 데이터의 불균형이 드러났다. 사업 유형과 분야별 구성이 극도로 불균등하여 비교 분석의 타당성이 저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적 비중과 실제 정책적 중요도 간의 불일치로 인해 진정한 협력 우선순위 파악이 곤란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현황 분석 결과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군소도서국과의 협력 방향에 대해 2025년 기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소속 위원 1인²⁰⁶⁾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06) 전문가 자문회의(2025.9.1., 서면)

상기 한계를 고려할 때, 본 분석 결과는 탐색적 기초자료(exploratory baseline data)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적 분석을 위해 연구 방법론적으로는 질적분석과의 혼합 방법론(mixed methods) 적용, 사업 규모별 가중치 적용 또는 로버스트 통계 기법 활용, 메타분석을 통한 유사 연구 결과와의 통합적 해석 등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군소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국제협력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화와 체계화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소규모 분절적 사업을 지양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프로그램 단위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현지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형 사업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통계적 의미와 실질적 영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군소도서국과의 해양수산 국제협력 수요 분석 —

1. 분석 프레임워크

군소도서국과의 효과적인 해양수산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협력 대상국의 수요뿐만 아니라 협력을 제공하는 한국 측의 역량, 경험, 그리고 향후 협력의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실제 ODA사업을 수행한 실무 담당자들은 현장에서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통해 축적된 실천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력국의 현실적 여건과 한국의 기술적 강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주체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한국 측 담당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실무적 관점에서의 협력 수요와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제1절에서 살펴본 정책적 수요와 더불어,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조사는 2025년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환경공단 등), 전문 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군소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ODA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하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설계되었다. 첫째, 경험 기반 분석을 통해 기수행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체득한 교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업 대상국, 협력 분야,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향후 사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둘째, 수요 중심 분석을 통해 한국 측 실무자들이 판단하는 유망 협력 분야와 혁신적 사업 모델을 파악하였다. 특히 전통적인 수산 분야를 넘어 해양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기술 등 융복합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하고, 각 사업이 기여할 수 있는 SDGs 목표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셋째, 실행 가능성 평가를 통해 제안된 사업들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한국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적용 가능성, 예산과 인력 등 자원 동원 가능성, 민간 부문 참여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넷째, 제약요인 분석을 통해 협력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식별하였다. 현지의 낮은 유지관리 역량, 이해관계자 변동, 한국 측의 예산

제약, 부처 간 협력 한계, 사후관리 체계 미비 등 다양한 차원의 제약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본 절에서는 한국 측 실무자들이 인식하는 협력 수요와 실제 추진 가능성 간의 격차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협력국 수요(제2장), 한국 담당자 수요(본 절), 실제 ODA 실적(제3장) 간의 3자 정합성 분석을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의 해석을 보완하고, 정량 응답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맥락적·질적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소규모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표본 규모가 16명으로 제한적이지만, 응답자 전원이 최소 5년 이상 해양수산 분야 ODA사업을 직접 기획·수행·관리한 실무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한 인식 조사 차원을 넘어 현장 경험에 기반한 전문적 판단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질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주요 협력 수요, 제약 요인,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검증과 해석을 위해, 해양수산 국제협력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석좌급 전문가 3명²⁰⁷⁾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군소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ODA사업의 장기적 성과와 한계, 부처 간 협업 구조, 모듈형 사업 설계 및 협력 방향의 현실적 가능성, 그리고 향후 전략적 고도화를 위한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층 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와 FGI의 병행을 통해 본 연구는 단순한 인식 수준의 수요 파악을 넘어, 실무 경험과 전문가 판단이 교차 검증된 협력 수요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후 제시되는 OCEAN SHIELD 모듈 구성, 사업(안) 설계, 후속 시범사업 제안의 실증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207) 전문가 자문회의(2025.11.4., 서울)

2. 분석 결과

1) 태평양 군소도서국

(1) 해양수산 기반 경제 인프라 구축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연안·항만·어업 인프라의 현대화와 식품 유통망 개선을 통한 해양수산 관련 경제 기반 강화가 태평양 도서국의 시급하고 실질적인 협력 수요로 도출되었다. 해양·수산 기반 경제 인프라 구축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다수의 도서국에서는 수산물 가공, 냉장·저온 물류체계 등 콜드체인 인프라가 미비하여 어획물의 신선도 유지와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설문에서는 수산물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콜드체인 및 저온물류망 구축 수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후화된 부두와 어항시설, 미비한 어시장 및 커뮤니티 기반 시설은 어업 활동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파푸아뉴기니, 마이크로네시아, 솔로몬제도, 나우루 등에서는 어촌 인프라 개선사업, 즉 부두·어항 정비, 어시장 리모델링, 어업훈련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와 함께 어선 현대화 및 조업 안전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장비 개선도 필요한 과제로 제안하였다. 피지와 바누아투 등에서는 친환경 선체 및 기관 교체, 조업안전 시스템 도입, 항행 정보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연안여객선의 노후화와 항만 보안체계 미비로 인해 해상 교통 안전성과 물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바누아투와 솔로몬제도에서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칙(ISPS cod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이행과 항만보안 역량 제고가 주요 수요로 확인되었다.

(2) 해양환경 및 자원관리 역량 강화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환경 및 자원관리 역량 강화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즉, 해양환경 및 자원관리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양감시 및 환경관리 역량 강화, 그리고 해양오염 저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이 핵심 협력 수요로 도출되었다.

이 지역은 광대한 해양과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IUU 어업으로 인한 자원 남획과 수산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피지, 키리바시, 솔로몬제도 등에서는 모니터링, 통제 및 감시(MCS: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시스템의 통합 고도화를 통해 어업 활동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단속 역량의 강화를 수요로 제시했다.

특히 태평양 도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감시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위성, 무인기(UAV),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등을 활용한 기술 기반 감시 체계 확충이 요구된다.

더불어, 해양환경 변화와 재해 리스크 대응을 위한 디지털 기술 도입 수요도 뚜렷하다. 마셜제도, 사모아 등에서는 항만 및 연안 지역의 환경 변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기후·재난 예측을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반의 해양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이미 태평양 도서국 전역에서 심각한 환경·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피지와 마이크로네시아 등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포함한 순환경제형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과제로 꼽혔다.

(3) 수산자원 관리와 식량안보 확보

태평양 도서국의 수산자원 관리와 식량안보 확보는 지역 주민의 생계 유지와 국가경제 안정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기후적응형 양식기술 보급과 블루카본 복원을 통한 생태적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해양바이오자원 산업화와 기술기반 식량안보 역량 강화가 주요 협력 수요로 도출되었다.

이 지역은 수산자원 의존도가 매우 높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어종 이동, 산호 백화 등으로 인해 전통 어장과 수산 생산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²⁰⁸⁾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 해역의 생태 특성과 기후 여건에 맞는 기후적응형 수산 및 양식 기술 도입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피지와 마셜제도 등에서는 해조류 및 어류 양식을 통해 식량 자립도를 높이고, 블루이코노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요는 단순한 생산 증대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관점에서 블루카본 및 연안 생태계 복원 사업은 태평양 도서국의 새로운 협력 수요로 부상하였다. 특히 연안 생태계의 회복과 어류 서식지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보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가, 쿡제도 등에서는 스마트양식 및 기후적응형 수산기술 전수를 통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 체계와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구축을 희망하고 있으며, 마이크로네시아는 해양생물 생산 지원 센터 설립 및 대량생산 역량 강화를 통해 해양 바이오 산업화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8) SPC, Fisheries Story: Climate change and pacific coastal fisheries(검색일: 2025. 10.15.)

(4) 해양 기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기후적응형 인프라 마련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전환과 기후적응형 인프라 구축, 그리고 해양·에너지 융합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체계 마련에서 협력 수요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전환은 태평양 도서국의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국가적 과제이자, 국제협력의 핵심 분야로 인식되었다.

이 지역은 전력·식수·냉방 등 필수 인프라가 매우 제한적이며, 동시에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난 위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해양기반 재생에너지와 청정 기술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마셜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등에서는 해수온도차 발전과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지역 냉방 시스템 구축이 주요 협력 수요로 제기되었다. 이는 전력과 냉방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해양에너지 융합기술로, 도서국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통가 등은 신재생 해수 담수화 시설과 해상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만성적인 식수 부족과 전력 불안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통합형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개선과 기후 적응력 향상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피지와 마이크로네시아 등에서는 폐자원의 에너지화 사업을 통해 쓰레기 처리와 에너지 생산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모델을 도입²⁰⁹⁾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폐기물 관리 문제 해결과 동시에 지역 전력 공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209) Department of Energy(2014), p. 6; Pacific Trade Invest(2024), pp. 27-28.

아울러 피지, 키리바시, 사모아 등에서는 연안 재해 대응형 해양관측·예측 시스템 구축을 통해 태풍, 해일, 홍수 등 재난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기후회복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지역사회·관광·문화 연계형 블루이코노미

태평양 도서국의 블루이코노미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주도의 해양경제 창출, 그리고 해양 관광·문화·바이오 산업을 연계한 사업이 핵심적인 협력 수요로 도출되었다. 태평양 도서국의 지역사회·관광·문화 연계형 블루이코노미는 경제적 자립과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지역은 풍부한 해양 생태 자원과 독특한 문화·전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 기반이 미흡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역경제 다각화 모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해양 자원과 문화 자산을 활용한 해양관광 및 지역사회 연계형 사업을 통해 지역의 고용 창출과 소득 기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어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기반 해양경제 프로젝트가 주요 협력 수요로 제시되었다. 이는 지역 주민이 사업의 기획·운영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 순환경제를 강화하고 외부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어촌을 중심으로 한 해양 생태관광, 전통어업 체험, 해양 문화 전시 등은 관광객 유입과 동시에 지역 정체성을 보존하는 이중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양식 기술과 해양 바이오 산업화 연계를 통해 지역주도형 블루이코노미를 확산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해양 바이오 자원의 활용, 식품 화장품 산업과의 연계, 친환경 양식기술 도입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단순한 생산지를 넘어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6) 인적 역량 강화와 제도 개선

태평양 도서국의 인적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 분야에서 정책과 기술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립적 해양·수산 거버넌스 구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태평양 군소도서국 전반에서는 해양수산 정책 수립과 사업 실행을 담당할 전문인력과 제도적 기반의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대부분 인력 규모가 제한적이고, 국제규범이나 최신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행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체계적인 인적 자원 개발과 제도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해양수산 분야 정책 관계자 및 국제 옵서버의 역량 강화를 중요한 협력 수요로 제시하였다. MCS 시스템, IUU 어업 대응 등과 같은 국제규범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태평양 도서국이 자국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국의 정책 담당자와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정책기획, 해양관측, 환경평가 등 분야별 고급 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기적인 기술 습득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정부 내 해양 행정 전문성을 내재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ODA 연계형 교육·훈련센터 설립 역시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현지 직업훈련센터를 기반으로 한 공동연수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현장 훈련을 통해 각국의 정책·기술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표 4-5〉 태평양 도서국 협력 수요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야	주요 수요 키워드	대표 대상국
해양·수산 인프라	콜드체인, 항만·어항, 어선현대화	키리바시, 사모아, 마셜 제도, 피지, 솔로몬
해양환경 관리	IUU 대응, MCS, 해양폐기물, 디지털 트윈	피지, 키리바시, 바누아투, 사모아, 마이크로네시아
기후·에너지	해수온도차 발전, 담수화, 청정에너지	투발루, 마셜 제도, 통가, 쿡제도
수산·식량안보	해조류 양식, 스마트양식, 블루카본	피지, 통가, 쿡제도
블루이코노미	해양관광, 지역연계, 커뮤니티 기반	마셜 제도, 사모아, 바누아투
인적 역량	정책관계자 교육, 오피서, 훈련센터	전체

자료: 설문조사 결과지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1) 해양수산 기반 경제 인프라 구축

카리브해 일부 도서국들은 항만과 공항 등 기본 물류 인프라의 노후화와 에너지 의존도를 동시에 겪고 있어, 스마트시티형 항만·공항 복합 개발에 대한 수요가 크다.²¹⁰⁾ 이는 전문가 설문에서도 카리브해 소도서국의 해양·수산 인프라 및 산업 분야가 협력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해수 담수화, 스마트팜, 전기차 및 친환경 선박, 육상 재생에너지 복합 인프라 구축 등은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녹색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협력 분야로 주목된다.

또한, 빈번한 허리케인과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항행 정보 인프라 개선 수요도 높았다. 기상·해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재난 대응과 기후서비스를 결합한 항행정보시스템 구축은 해상 안전과 물류 효율성 제고를

210) IDB(2019), p. 3, 11.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분야로, 기술협력 및 역량 강화 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수산 가공 및 콜드체인 산업의 현대화는 카리브해 지역 대부분의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협력 수요로 나타난다. 바베이도스, 도미니카, 엔티가바루다 등에서는 어획물의 품질 유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냉장·가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며, 한국의 수산물 가공 및 저온물류 기술 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어업관리와 IUU 어업 감시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카리브해 국가들은 어업이 주요 생계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감시·통제 시스템이 미흡하여, 한국이 보유한 MCS 시스템 및 기술협력이 실질적인 수요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는 중장기적으로 카리브해 지역의 블루푸드(Blue Food) 산업 육성 및 수산자원 지속가능성 확보로 연결될 수 있는 협력 과제이다.

(2) 기후·환경 대응 및 재해 복원력 강화

기후·환경 대응 및 재해 복원력 강화 분야 협력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지역의 생존 기반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일 것이다. 우선, 허리케인·해일 등 빈번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연안 방재 인프라 구축 수요가 제시되었다. 도미니카연방과 그레나다 등은 반복되는 폭풍 피해로 항만·주거지·관광지 복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따라 스마트 경보시스템, 친환경 방파제, 침식방지 녹지 인프라 등 기후탄력형 방재 인프라에 대한 협력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카리브해 전역에서는 블루카본 및 해양생태계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벨리즈,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등은 해수면 상승과 연안 침식으로 맹그로브·해초 생태계가 빠르게 훼손되고 있어, 한국이

보유한 복원기술과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시스템 구축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환경 보전 차원을 넘어, 기후금융 접근성 강화와 탄소 경제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자원화 분야 역시 지역 공통 수요로 확인되었다. 섬 국가 특성상 폐기물 처리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에서, 순환경제형 폐기물 관리 체계, 해양오염 저감 기술, 재활용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공공위생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청정 해양 에너지 개발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중장기 협력 수요로 확인된다. 파력, 해수온도차, 마이크로 그리드, 태양광·풍력 복합 재생에너지 등은 높은 발전 비용과 불안정한 전력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분야는 한국의 해양에너지 기술과 탄소중립형 에너지 전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협력 영역으로, 향후 카리브해 지역의 기후회복력 강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협력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해양 안보와 재난 대응 역량 제고

해양 안보와 재난 대응 역량 제고가 협력 수요가 높은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항만보안(ISPS)과 사이버보안 분야의 역량 격차가 커, 항만보안·사이버보안 통합훈련과 관련한 기술이전 및 공동훈련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진다. 세인트루시아, 바베이도스, 엔티가바부다 등은 항만 운영 및 물류 관리체계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보안 시스템과 인력 교육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MDA(해양상황인식) 및 사이버 수사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모델이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의 해양치안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 사례로 제시되었다. 지역 내 불법조업, 해양오염, 인신매매 등 해양 범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및 국제기구의 역량이 연계된

수색, 구조, 환경보호, 폐어구 단속 분야 협력은 실질적 파급력이 큰 협력 분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 및 기상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수요도 높게 나타난다. 허리케인, 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실시간 기상데이터 공유와 대응 체계 통합이 미흡하기 때문에, 위성·드론 기반 모니터링, 기상·해양 데이터 연계, 스마트 경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재난 대응을 넘어, 해양안전·환경보호·기후서비스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카리브해 지역의 해양 거버넌스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

(4) 과학기술·R&D 및 인적 역량 강화

과학기술·R&D 및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바하마와 쿠바 등 주요 관광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의 해양 관광지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수요가 제시되었다. 이는 해양생태계와 관광자원을 동시에 보호하면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관광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스마트 관광, 문화유산 복원, 환경데이터 관리 등에서 한국의 ICT 기술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해양 바이오 공동 연구를 통한 산업화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제안되었다. 자메이카, 벨리즈 등을 중심으로 천연 해양 소재를 활용한 제약·화장품 산업 연계 연구, 바이오 소재 가공 및 품질관리 기술 이전, 현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해양과학, 수산, 항만, 기상, 재난관리 등 분야별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에 대한 수요도 뚜렷하다. 다수의 도서국은 기술인력 부족과 실습 기반이 미비해, 장비 지원 및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포함한 현장 중심형 기술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승선 실습 및 해기 면허 취득 교육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 수요도 확인할 수 있다. 중소형 조선소 및 해기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술 전수와 훈련 인프라 조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해운·어업 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한국의 해사 교육 및 실습 훈련 경험이 중요한 협력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분야는 단순한 기술이전이 아니라, 산업·교육·인적자원개발을 통합한 지속가능한 역량 강화 협력 모델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

(5) 지역사회·관광·경제 연계형 블루이코노미

카리브해 군소도서국들은 관광 중심의 경제 구조를 보유하면서도 기후변화와 재난, 환경오염 등으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어, 지역사회·관광·경제 개발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관광산업을 생태·문화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국가들이 많아, 에코투어리즘에 대한 협력 수요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 디지털 문화콘텐츠(VR/AR)를 활용한 해양·문화유산 홍보, 지역 기반 관광 교육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관광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야는 한국이 보유한 스마트관광 기술과 지역관광 활성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자립형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양쓰레기 중 하나인 모자반 활용 산업화는 카리브해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협력 과제이다. 매년 대량으로 발생해 연안 생태계와 관광업에 피해를 주는 모자반을 자원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이오매스·사료화, 비료·신소재 개발, 순환경제형 산업 모델 구축으로 연계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 한국의 해양 바이오 및 자원화 기술을 적용하면, 해양폐기물 저감과 동시에 지역 경제 순환 및 녹색산업 기반 강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여성·청년 참여형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수요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과 청년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기반 모델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경제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분야는 블루이코노미의 핵심인 사람 중심의 지역 기반 해양경제 모델을 구현하는 협력 축으로서, 관광·환경·사회개발을 통합한 지역 기반의 융합형 ODA 협력 수요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6〉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협력 수요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야	주요 수요 키워드	대표 대상국
해양인프라·산업 현대화	항만·여항·연안 인프라 개선, 수산가공·콜드체인 및 스마트양식, 어선 현대화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엔티가바부다
기후·환경 대응 및 블루카본	기후탄력 도시계획, 맹그로브·해초 복원, 해양폐기물,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파력·해수온도차 발전, 해수담수화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벨리즈,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해양안보·재난대응 협력	항만보안 사이버보안, 수색구조, MCS, 해양범죄, 항행정보, 조기경보, 연안 방재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엔티가바부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과학기술·R&D 및 인적 역량 강화	디지털트윈 기반 해양관리, ICT·빅데이터 활용,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기술교육 및 승선실습, 직업훈련	바하마,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지역사회·관광·경제 연계형 블루이코노미	블루투어리즘, 문화유산 보전, 지역 커뮤니티 기반 관광교육, 여성·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모자반 활용	바하마, 쿠바, 자메이카, 벨리즈, 트리니다드토바고

자료: 설문조사 결과지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제4절 군소도서국과의 해양수산 국제협력 정합성 분석 —

1. 분석 프레임워크

본 절에서는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과의 해양수산 국제협력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3자 정합성 분석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 이는 ① 협력국의 공식 협력 수요(2장 분석 결과), ② 우리나라 해양수산 전문가 및 국제협력 담당자의 협력 의향(설문조사), ③ 실제 ODA 추진 실적(2019~2023년 89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접근법이다.

분석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수요 정합성을 통해 협력국 요청사항과 우리나라 담당자 관심 분야의 일치도를 확인하고, 실행 정합성을 통해서는 협력국의 수요와 실제 ODA사업의 부합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략 정합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전략적 이익(원양어업 진출, 해운항로 확보, 기술수출 등)과 협력사업의 연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3차원 분석을 통해 단순한 수요-공급 격차를 넘어, 협력 의지는 있으나 실행되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분석 결과

1) 태평양 권역 3자 정합성 분석

(1) 협력국 수요와 우리나라 담당자 의향 비교

태평양 도서국의 핵심 협력 수요는 수산자원 관리(IUU 대응, MCS 강화), 기후변화 대응(해수면 상승, 연안 침식), 해양관광 개발, 해상물류 인프라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우리나라 담당자 설문에서도 유사한 우선순위가 확인되었다. 수산 분야에서는 어촌 뉴딜(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콜드체인 구축(사모아), MCS 통합(피지, 키리바시) 등이 언급되었으며, 기후변화-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수온도차발전(마셜제도, 키리바시), 해상태양광(마이크로네시아), 블루카본 복원 등이 언급되었다. 융복합 사업으로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냉방 시스템 구축 및 양식장 조성, 그리고 스마트양식 기술 이전과 식량 안보 확보가 제안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담당자들은 전통적 수산협력을 넘어 혁신기술 기반 융복합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수온도차발전, 친환경 어선 도입, 해양폐기물 에너지화 등은 협력국의 에너지 자립과 환경보전 수요에 부합한다.

(2) 실제 ODA 실적과의 정합성

태평양 군소도서국은 해양경제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수산업은 국가 재정, 고용, 식량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다. 이에 따라 IUU 어업 대응, 양식·종자기술 개발, 연안·원양 어업 관리, 수산 인프라 개선 등 ‘수산 중심’의 협력 수요가 가장 지속적이면서도 구조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한-태평양 외교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해양수산 협력 의제 역시 대부분 수산 관리, 어업 감시·통제·감독(MCS), 수산 인프라 조성,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ODA 실적을 살펴보면, 태도국 대상 해양수산 사업 73건 중 47건(64.4%)이 수산 분야에 해당해 매우 높은 정합성을 보인다. 특히 어업관리 시스템 교육, 양식기술 보급, 수산물 가공 및 유통 개선, IUU 대응 역량 강화 등은 태도국의 공식 협력 요청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며, 사업 규모는 작더라도 현지 정부와의 협력도 높고 수요 대응력이 양호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한국이 수산기술·양식 분야에서 갖는 비교우위를 잘 활용하여 협력 기반을 넓혀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태도국이 강력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해양관광·생태관광 분야는 실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태도

국은 연안 생태계(산호, 맹그로브, 라군 등)를 활용한 자연 기반 관광자원을 중요한 경제 자산으로 간주하며, 다수 국가에서 관광업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 ODA는 관광·레저·커뮤니티 기반 관광 분야에 단 한 건의 사업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²¹¹⁾ 이 분야는 한국의 경험·기술·브랜딩 역량을 충분히 연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ODA 체계가 주로 수산·역량 강화 중심으로 설계되어 관광 부문을 포착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해상 물류 분야에서도 유사한 불합치성이 확인된다. 태평양 도서국들은 광대한 EEZ 및 도서형 지형으로 인해 해상교통·항만·해상안전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항만 현대화, 항로표지 설치, 해상교통 관리, 해양조사 및 해상안전 협력은 높은 정책 수요를 가진 분야이다. 그러나 한국의 실적 중 해상 물류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은 12건(16.4%)으로, 대부분 소규모 교육 또는 연구 중심이며, 항만·여항의 물리적 인프라 지원이나 해상안전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 협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태도국의 해상안전·물류 기반 개선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영역으로 평가된다.

기후변화·해양환경 분야 역시 주요 협력 수요임에도 한국의 대응은 제한적이다. 태평양은 기후변화의 최전선 지역으로 해안침식, 연안홍수, 해양산성화, 해양쓰레기, 생태계 붕괴 문제가 심각하며, 다수의 국가가 블루카본·해양보호구역(MPA)·해양쓰레기 관리 등 종합적인 기후·생태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실제 사업은 연구 중심의 기후 관련 소규모 사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태도국 측이 요구하는 본격적 프로그램—예컨대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쓰레기 수거·저감 시스템 구축, 소규모 항만 기반의 기후 회복력 강화—과는 거리가 있다.

211)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투발루 어촌 그린뉴딜-친환경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관광이 아닌 수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수산 분야로 분류함

(3) 전략적 정합성 평가

태평양은 한국 원양어업의 핵심 어장으로 참치 어획량 60% 이상이 어획된다.²¹²⁾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배경으로 해양수산부 부처 ODA사업 추진 시 태평양 권역에서의 수산 분야 사업은 우선순위가 높았다. 이런 점은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담당자들이 제시한 어촌뉴딜 사업(파푸아뉴기니, 솔로몬 등)은 원양어업 거점국과의 관계 강화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이며, MCS 통합 고도화(피지, 키리바시)는 IUU 어업 대응을 통한 한국 원양어업의 합법적 조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 외 해수온도차발전, 스마트 양식 등 혁신기술은 우리나라 해양기술의 수출 시장 개척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전략적 격차도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태평양 군소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ODA사업은 연수 중심의 소규모 단기 사업 위주로, 장기적 전략 자산 구축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해양관광 분야 공백은 현지 일자리 창출, 민관 협력 기회 확보,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발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의 협력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ODA가 여전히 수산 중심의 협력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하면, 태평양에서만큼은 우리나라의 수산 분야 정합성은 매우 높지만, 관광·해산물류·기후·생태 분야는 수요 대비 실적이 낮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ODA 전략 재정비 과정에서 다변화가 필요하다.

212) 한국원양산업협회(2025.8.27.)(검색일: 2026.1.9.)

2) 카리브해 권역 3자 정합성 분석

(1) 협력국 수요와 우리나라 담당자 의향 비교

카리브해 도서국들은 태평양과 달리 경제 구조가 비교적 다변화되어 있으며, 관광업·수산업·해양물류·기후재난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지역이다. 특히 기후변화 취약성이 매우 높아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 해안침식 등 자연재해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리브 고위급 포럼에서 제기되는 협력 수요는 대부분 해양환경 보전, 연안 생태계 복원, 기후변화 적응, 해안침식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등 기후·환경 중심의 어젠다가 주류를 이룬다. 또한 카리브해는 국제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관광 기반 경제 회복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모델 구축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 담당자 설문에서도 기후·환경(해수면 상승 대응 인프라, 연안재해 예측시스템), 해양 안보(해상 마약밀수 대응, AIS 기반 감시체계 구축), 관광 연계(생태관광 인증제, VR/AR 해양체험 콘텐츠 등) 사업을 향후 추진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담당자들은 카리브해의 관광 중심 경제구조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 분야에서의 협력 제안이 아닌 관광-환경-안보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을 제시했다.

(2) 실제 ODA 실적과의 정합성

우리나라의 ODA 실적을 보면, 카리브해 대상 사업 16건 중 기후·환경 분야가 금액 기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EDCF·KOICA가 추진한 기후 적응·재해 대응 인프라 중심 사업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ODA는 기후·재난·환경 대응 분야에서는 높은 정합성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이 카리브해에서 '기후·환경 파트너'로 자리 잡을 잠재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산 분야는 협력 수요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제한적이다. 카리브해 국가들은 남획과 IUU 어업, 연안 자원 감소 문제로 인해 과학 기반의 수산관리 역량 강화, 통계체계 구축, 양식 기반 확충 등의 분야를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의 수산 관련 사업은 대부분 소규모 역량 강화 또는 조사 중심이며, 실제 정책·제도 정비나 기술 이전으로 연결되는 사업은 부족하다. 이는 한국이 수산 분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해상 물류 분야에서도 불합치가 확인된다. 카리브해 지역의 물류 네트워크는 국가 경제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 항만 인프라는 관광·무역·식량안보 등 여러 분야와 연결된다. 그러나 한국의 실적은 극히 소수의 교육·연구 중심 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해상안전, 항만 회복력 강화, 항만 운영 역량 제고와 같은 실질적 협력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해양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관련 지원 실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해양관광 분야는 태평양과 마찬가지로 전혀 이행되지 않은 공백 영역이다. 카리브해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 관광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은 다수 국가의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한국 ODA는 관광 기반의 해양경제, 생태관광, 커뮤니티 기반 관광 개발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이는 ‘가장 큰 수요-가장 작은 실적’이라는 구조적 불합치로, 전략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3) 전략적 정합성 평가

카리브해는 파나마 운하 연결 해운항로와 미주 시장 진출 거점으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해양수산 전략적 협력 대상지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안보 협력(AIS 감시체계 등)은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 항행 확보에 도움이 되며, 항만 인프라 개선은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물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생태관광 기술(VR/AR 콘텐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 진출 교두보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의 영향권 내에 있는 카리브해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입지 구축 노력이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했으며, 중국이 인프라 투자로 해당 권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3) 종합 정리

3자 정합성 평가 결과는 한국의 해양수산 ODA가 수산 분야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서는 수요와 실행 간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수산 분야는 협력국 수요, 한국 담당자 의향, 실제 실행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일치하며, 한국 원양어업 보호라는 전략적 이익과도 부합하여 가장 성공적인 협력 분야로 평가된다.

반면 해양관광 분야는 협력국의 높은 수요와 한국 담당자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행 사례가 거의 없어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나타났다. 특히 카리브해 국가들의 경우, 2022년 기준 평균 10.9%, 많게는 GDP의 90%를 관광이 차지함에도 이 분야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²¹³⁾ 에너지·기후변화 분야는 해수온도차발전, 블루카본 등 한국 담당자들이 제시한 혁신적 접근법들이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고 있으나, 기술 수출 가능성과 국제규범 준수 측면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상 물류 분야는 태평양과 카리브해의 해운 항로 확보라는 전략적 가치에 비해 실제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213) Statista, Caribbean countries or territories with the highest share of GDP generated by travel and tourism in 2022(검색일: 2025.8.1.)

〈표 4-7〉 3자 정합성 평가 결과

분야	수요 정합성	실행 정합성	전략 정합성	종합 평가
수산	높음	높음	높음(원양어업)	우수
해상 물류	중간	낮음	높음(해운항로)	전략적 강화 필요
해양 기반 에너지·기후변화	높음	중간	높음(기술수출/국제규범)	잠재력 높음
해양관광	높음	없음	중간(민관협력)	개선 필요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정합성 격차의 배경에는 몇 가지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해양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 에너지 분야는 산업통상부와 의 협업이 필요하나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 둘째, 기존의 성공 경험이 있는 수산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기획되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분야 진입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해양관광, 해양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사업 기획과 실행에 제약이 있다. 넷째,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해양관광과 에너지·기후변화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민관합작투자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을 통한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재원과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타 부처와의 협업 MOU 체결을 통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융복합 사업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하여 부서 간 협력을 원활히 하고, 혁신기술 R&D와 ODA를 연계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SPC, CARICOM 등 지역기구와의 공동사업 플랫폼 구축을 통해 개별국 접근을 보완하고 권역 단위의 효율적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3자 정합성 분석 결과는 한국의 해양수산 ODA가 기존의 강점인 수산 분야를 유지하면서도, 해양관광, 에너지·기후변화, 해상물류 등 새로운 협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변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협력국과 한국 담당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혁신적 협력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산 중심 협력을 기반으로 하되, 융복합 분야로의 점진적 확대와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향후 협력 방향

1) 태평양

한국과 태평양 군소도서국 간의 해양수산 협력은 단순한 인프라 이전이나 기술 전수 수준을 넘어,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제도 기반 정책 수립 등 다층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해양이라는 공유 공간의 특성상, 협력 분야는 명확히 구분되기보다 중첩되고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간 통합과 조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앞서 3자 정합성 평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협력국과 한국 담당자 모두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혁신기술 기반 융복합 분야와 해양관광 분야의 실제 이행률이 극히 낮다. 이러한 정합성 불일치의 근본 원인은 현재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이 부처 간 단절적 구조, 민간 및 전문가 집단의 낮은 참여도, 다자기구와의 연계 미흡,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부족 등의 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내부적으로도 부서별로 협력사업이 분절되어 있고, 종합적인 전략 목표가 부재하여 중장기적인 일관된 국제협력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해양수산 ODA 사업 수행 담당자가 국가기관 소속이라 보직 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 연속

성 확보의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으며, ODA 관련 지식 없이 기관 국제 업무 중 하나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해양수산 관련 전문성은 뛰어나나 ODA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실제 사업 수행에서의 애로사항도 발생하고 있다.²¹⁴⁾ 이로 인해 정책 실행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입지 확보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태평양 도서국과의 해양수산 국제협력은 다음과 같은 협력 수요에 기반한 5대 전략 방향 중심의 통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첫째, IUU 어업 대응 및 수산자원 공동관리 수요에 따라, 감시·통제·감독(MCS) 역량 강화,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 불법 어업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등 해양자원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해양주권 수호와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한국 원양어업의 안정적 조업환경 확보라는 전략적 이익과도 부합한다.

둘째, 수산가공·유통·수출 활성화를 포함한 수산업 전반의 역량 강화 수요에 대응하여, 어촌 인프라 정비, 수산시장 현대화, 가공 및 유통 체계 개선, 수산업 교육 및 훈련 제공 등 수산업 전주기 협력이 요구된다. 이 분야는 이미 높은 정합성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 담당자들이 제안한 혁신적 접근법들을 적극 반영하여 전통적 지원을 넘어선 차별화된 협력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식수원 부족 및 식량안보 수요에 따라, 친환경 해수담수화 기술 보급, 지속가능한 양식기술 전수, 지역 농수산 복합 모델 도입, 해양관광 연계 생계 다변화 등 복합적 민생형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완전한 공백 상태인 해양관광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계 다변화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214) 전혜은 외(2025), pp. 122-123, 181-183, 213-217.

넷째, 에너지 자립 및 산업 다변화를 위한 수요에 따라, 해양에너지 실증 협력, 연안산업 인프라 개발, 심해저 자원 조사·활용 기반 조성, 해양과학기술 연구 및 공동실험 플랫폼 구축 등이 요구된다. 이 분야는 우리나라 담당자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실제 이행이 거의 없는 대표적 격차 영역으로, 부처 간 협업과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실행력 강화가 시급하다.

다섯째,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요에 따라, 해양산성화 모니터링, 블루카본 및 연안 생태계 복원 데이터 구축, 기후 리스크 예측 기술 공유, 과학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교류 및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 대응 체계 구축과 국제적 연대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되며,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 수출 기회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국가별 상황과 수요가 상이하므로, 표준화된 모델이 아니라 맞춤형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태평양 도서국들이 가진 지리적 특성(폴리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과 제도, 경제 구조, 언어, ODA 의존도 등을 고려한 세분화 전략이 필요하다. 반면, IUU 어업, 해양쓰레기, 해양오염, 기후변화 등은 단일 국가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초국경적 이슈로, 권역별 공동 대응이나 다자기구 연계 전략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한국은 개별국 맞춤형 협력과 더불어, 권역 단위 플랫폼과 다자협력 채널을 병행 추진하여 정책 연속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2) 카리브해

카리브해 군소도서국과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은 해당 지역의 독자적인 지정학적 특성과 경제 구조, 협력 수요를 반영하여, 태평양 도서국과는 차별화된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카리브 국가들은 관광을

핵심 산업으로 삼고 있으며, 연안 생태계와 직결된 해양환경의 악화, 기후 위기에 따른 연안 침식, 해수면 상승, 허리케인 등의 피해에 취약하다. 또한 해상에서의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 전통적인 수산 중심 협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협력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앞서 태평양 협력 방향에서도 언급했듯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의 구조적 개선사항도 고려해야 한다.²¹⁵⁾

3자 정합성 분석 결과,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평균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많게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관광산업²¹⁶⁾과 해양 안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협력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일치는 한국의 해양수산 ODA가 여전히 수산 중심의 전통적 틀에 머물러 있고, 타 부처와의 협력 부재로 인해 관광이나 안보 같은 융복합 분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다음과 같은 5대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해양환경 거버넌스 및 IUU 어업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카리브해는 어업 활동이 활발하지 않지만, 해양환경 보호와 연계된 불법어업 감시 체계 구축, 해양법령 정비, 국제기준 이행(예: WTO 수산보조금 협정) 등 제도 기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해양보호구역(MPA) 설정, 연안통합관리(ICM: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지역 어업기구(CRFM 등)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 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해양기반 산업 및 인프라 역량 강화에 대한 맞춤형 협력이 필요하다. 카리브 국가들은 항만과 연계된 관광 물류, 해양관광, 연안서비스 산업 중심의 해양경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수산물 수출보다는 관광과 연계된

215) 전혜은 외(2025), pp. 122-123, 181-183, 213-217.

216) Statista, Caribbean countries or territories with the highest share of GDP generated by travel and tourism in 2022(검색일: 2025.8.1.)

연안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연안관광 인프라 개선, 친환경 선박 기술 도입, 소규모 선착장 및 해양관광 연계 수산시장 현대화, 연안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등 연계형 협력이 요구되며, 이는 현재 완전히 공백 상태인 관광 분야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 회복력 제고가 시급하다. 카리브는 해수면 상승과 잦은 허리케인 등으로 연안 생태계와 기반 시설이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블루카본 기반 해양생태 복원, 연안 침식 저감 인프라, 해양쓰레기 대응 등 지역 특화 환경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기후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재해복원 매뉴얼 제공, 지역의 조기경보시스템(EWS) 강화, 탄력적 연안 관리 기술 등 환경 기반 협력은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분야는 현재 어느 정도 정합성을 보이고 있으나, 규모와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해양과학기술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지원이 핵심이다. 카리브 국가들은 EEZ 면적 대비 데이터 보유·활용 수준이 낮으며, 해양과학기술 인프라와 정책 기획 역량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해양관측 장비 지원, 해양지도 구축, 과학자·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해양공간계획(MSP) 역량 강화 등 데이터 기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CRFM, CARICOM, ACS 등 지역기구와 연계한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해양안보 및 초국경 범죄 대응 지원이 필요하다. 카리브해는 주요 마약·인신매매 루트에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의 도서국은 해양감시 및 해상 단속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나라 ODA 담당자들도 이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이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IS 기반 모니터링 체계, 연안 감시 드론, 해상 단속 훈련, 선박등록 시스템 고도화 등은 한국의 기술 경험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더불어, 해양법 집행, 국경 간 정보 공유, 공역 해상안보 플랫폼 구축 등 제도적 협력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카리브해 군소도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은 관광 중심의 해양 경제와 기후취약성, 해양환경 보호 수요, 해상안보 위협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전제로 한 다차원적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한국은 제도-기술-인프라-인력 역량이 통합된 맞춤형 협력 모델을 설계하되, 특히 현재 공백 상태인 관광 및 안보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카리브 지역과의 실질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소결

본 장에서는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과의 해양수산 국제협력 현황을 3자 정합성 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체계적으로 평가하였다. 협력국의 공식 수요, 우리나라 ODA 담당자의 협력 의향, 실제 ODA 추진 실적을 종합 분석한 결과, 전통적 수산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심각한 정합성 불일치가 확인되었다. 특히 협력국과 우리나라 담당자 모두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해양관광, 해양보호(침식 포함), 해양 기반 친환경 에너지, 해양안보 분야의 실제 이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수요는 일치하나 실행이 안 되는” 구조적 격차가 드러났다.

이러한 정합성 불일치의 근본 원인은 해양수산 분야가 해양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공유하는 특성상 수산자원의 이용·관리, 인적 자원의 활용, 해양환경 관리 등에서 분야 간 업무의 중첩이 불가피한 구조적 특성을 지니며, 현재의 국제협력 체계로는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협력총괄과, 해사산업기술과, 해양환경정책과 등 여러 부서들이 친환경 기술, 해양산업, 환경보호, 국제협정 등에서의 국제협력을 개별적으로 다루면서, 부서 중심의 사업 수행으로 통합적 정책 추진 및 관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²¹⁷⁾

특히 해양수산부 부처 전체를 대표하는 통합적 국제협력 목표가 설정되지 않고, 각 과에서 분야별 국제협력 목표에 근거해 국제협력 및 개도국 대상 ODA 우선순위를 수립함으로써, 해양수산부 국제협력 사업의 우선순위가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 계획에 부합하는 일관된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과 확대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협력국의 다변화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²¹⁸⁾

대부분의 해양수산 ODA사업 수행 담당자가 국가기관 소속이라 보직 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확보의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으며, ODA 관련 지식 없이 기관 국제 업무 중 하나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해양수산 관련 전문성은 뛰어나나 ODA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실제 사업 수행에서의 애로사항도 발생하고 있었다.²¹⁹⁾

아울러 부처 간 연계와 민관협력의 부재도 심각한 제약요인이었다.²²⁰⁾ 3자 정합성 분석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해양관광 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민간과의 협력 없이는 실질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며, 혁신에너지 분야 역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공동 추진 없이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민관협력 혹은 민간 참여 사업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OECD 등 국제기준에서 강조하는 PPP 혹은 민간 주도의 산업 기반 조성 등의 모델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다자협력 플랫폼의 활용도 제고도 필요한 영역이다.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 ODA사업 수행기관은 FAO와는 IUU 어업 퇴치와 수산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²²¹⁾해왔고, IMO에서는 선박 탄소배출

217) 전혜은 외(2025), pp. 122-123, 181-183, 213-217.

218) 전혜은 외(2025), pp. 122-123, 181-183, 213-217.

219) 전혜은 외(2025), pp. 122-123, 181-183, 213-217.

220) 전혜은 외(2025), pp. 122-123, 181-183, 213-217.

221) FAO(2024.10.21.)(검색일: 2025.6.25.)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에 참여²²²⁾하고 있다. UNEP와는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해양이니셔티브에 관여하고 있으며, KOICA를 통해 UNEP, IOC/UNESCO와 연계한 해양환경 모니터링 역량 강화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대부분 개별 프로그램 차원에서 단발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으며, 중장기 전략이나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체계로 발전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회원국으로서 과학기술적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내 수산정책과 연계된 전략적 대응 체계는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PEMSEA와의 협력도 동아시아 해양 환경 이슈 중심으로 머물러 있으며, 기후변화·기술협력·해양개발 ODA 등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태평양의 SPC, FFA와 카리브해의 CARICOM, CRFM 등 지역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개별국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권역 단위 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종합하면, 태평양과 카리브해 군소도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에서 나타난 정합성 불일치는 표면적으로는 분야별 수요-공급 격차로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해양수산 국제협력 체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권역별 협력 방향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부처 간 협력 강화, 민간 참여 확대, 다자협력 플랫폼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군소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ODA사업의 절대적 규모가 작고, 사업 유형이 연수 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협력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등 향후 군소도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화와 체계화가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222) GHG SMART(2023.2.21.)(검색일: 2025.6.25.)

상기 언급한 구조적 개혁 없이는 군소도서국의 다변화된 협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해양수산 분야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 확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합성 격차를 해소하고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의 수산 중심 단편적 접근에서 벗어나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협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05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전략 수립

제1절 군소도서국 맞춤형 협력 방향

1. 모듈형 협력 모델 및 권역별 차별화 접근의 필요성

태평양과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모두 해양에 기반한 경제구조와 기후변화 취약성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지니지만, 실제 정책 환경과 산업 구조, 제도 기반, 역량 수준은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 동일한 도전과제(IUU 어업 대응, 연안관리, 해양환경 보전, 기후위기 대응)라 하더라도 국가별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준, 인력 역량, 제도적 구비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개입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질성이 큰 국가군에 단일한 표준형 ODA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정책 적합성과 수용성이 낮아지고, 특히 자원과 제도가 취약한 군소도서국의 특성상 사업 지속성과 효과성 역시 확보되기 어렵다.

더욱이 본 연구의 정합성 분석 결과, 태평양과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모두에서 수요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실제 ODA사업은 수산 중심으로 협력 분야가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으며(전체

92건 중 수산 53건), 해양관광·해양물류·기후·환경 등 다수의 핵심 수요 분야는 거의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력국이 요구하는 다양한 해양수산 관련 과제가 기존 우리나라 ODA 체계의 구조적 제약(부처 내 분절성, 신규 분야 리스크 회피, 타 부처 및 민간과의 협업 부족 등)²²³⁾으로 인해 사업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협력국별로 상이한 문제 구조와 협력 수요를 반영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재정적·제도적 여건 속에서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모듈형 협력 모델이 적합한 대안으로 도출된다.

모듈형 협력 모델은 해양수산 분야를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작은 단위의 모듈(자원관리(IUU·MCS), 양식기술, 수산물 가공·유통, 해양보호구역 운영, 생태관광, 연안탄력성, 기후데이터, 해상안전, 정책·제도·통계 등)로 구성하고, 이를 각 국가의 조건과 수요에 맞춰 조합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법은 크게 세 가지 근거에서 유효성을 가진다. 첫째, 국가별 역량 격차가 큰 군소도서국 환경에서 모듈형 사업은 수요 기반 맞춤형 설계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의 적합성과 수용성을 높인다. 둘째, 모듈 단위 설계는 예산·인력·제도적 제약이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도 단계적·선택적 조합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며, 기존 수산 편중 구조에서 탈피해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셋째, 기능 단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 추적이 용이하고 중복·단절 사업 문제도 해소할 수 있어, 군소도서국 특유의 기초 통계 부족과 정보 공백을 보완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평양 군소도서국과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모두 ‘군소도서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협력 경로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태평양의 경우, 우리나라는 양식·수산기술·MCS 교육 등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권역 내 다수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수산협력 경험이 누적되어 있어, 모듈들을

223) 전혜은 외(2025), pp. 122-123, 181-183, 213-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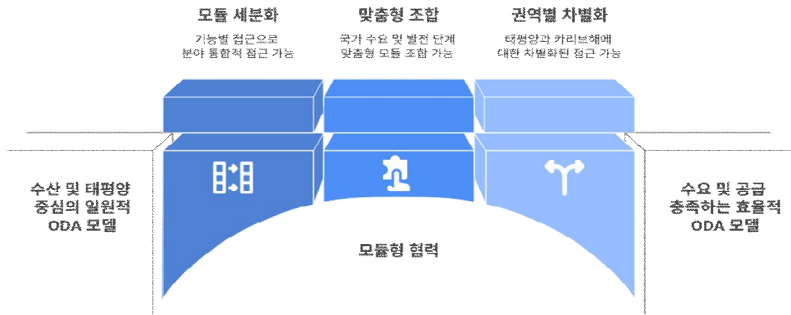
직접 조합하여 패키지형 ODA사업 모델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팔라우·키리바시·투발루 등은 IUU 어업 대응, 기후탄력성, MPA·연안관리, 콜드체인 등 수요가 다양하므로, 국가별로 다른 모듈을 조합해 맞춤형 협력사업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팔라우는 해양보호구역이 넓고 상대적으로 관광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MPA 고도화+생태관광 연계’ 모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수산 분야 의존도가 높은 키리바시는 ‘MCS+제도기반+기초양식’을, 수산 분야 의존도가 높으나 동시에 기후 위기에 취약한 투발루는 ‘기후탄력성+연안생태계 복원+데이터 구축’과 같은 조합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카리브해에서는 우리나라와의 협력 경험이 거의 없고, 언어·제도·문화 차이가 커 직접 협력 개입 시의 리스크가 높다. 또한 이 지역의 핵심 수요는 생태관광, 연안보전, 기후·환경, 해양안보 등 단일 기관 혹은 단일 국가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카리브해 협력은 개별국 중심의 양자협력 추진보다는 CRFM, CARICOM, CBF, CCI 등 지역기구·국제기구를 통해 진입하는 다자협력 기반의 간접 접근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들 기관은 이미 데이터, 정책정보, 생태계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부족한 분야에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카리브해에서는 모듈형 모델을 적용하되, 개별국 추진이 아닌 ‘정책·데이터 중심 모듈’을 국제기구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군소도서국과의 협력 방향은 모듈형 기반의 맞춤형 협력사업 구성 + 권역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진입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태평양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존 수산 비교우위를 확장해 다분야 모듈을 직접 조합하는 직접형 접근을, 카리브해에서는 직접 개입보다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를 통한 간접형 접근을 통해 협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적합하다. 이러한 방향은 3자 정합성 분석에서 드러난 ‘수요-의향-

실적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가 수산 중심 단편성에서 벗어나 구조적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그림 5-1〉 모듈형 협력 모델 및 권역별 차별화 접근의 필요성



Made with Napkin

자료: 저자 작성(NAPKIN AI 활용)

2. 태평양 군소도서국 협력 방향

태평양 군소도서국은 해양경제 의존도가 높아 수산·해양관광·해상물류·기후·환경이 서로 긴밀히 연결된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의 3자 정합성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협력 실적은 수산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협력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기후변화 대응, 연안탄력성, 해상안전, 해양관광 등 다층적 수요와의 간극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일치는 태도국의 복합적 문제 구조가 기존의 단일 분야 중심 ODA 체계로는 충분히 포착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향후 태평양 협력은 모듈형 모델에 기반하여 수산 중심 협력에서 융·복합 협력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IUU 어업 대응과 MCS 고도화를 중심으로 한 해양자원 거버넌스 강화가 핵심 전략으로 제시된다. 태도국은 광대한 EEZ와 부족한 감시 인력을

갖고 있어 IUU 어업에 취약하며, 이는 국가재정·식량안보·지역사회 생계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IUU 어업 지정국 해제 및 대응 경험, 위성 기반 감시, VMS/AIS 활용기술)를 활용해 MCS 통합 플랫폼 구축, 단속 인력 훈련, 공동 감시 메커니즘 등 다층적 모듈을 조합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원양어업의 합법적 조업 환경 확보라는 한국의 전략적 이익과도 정합성을 갖는다.

둘째, 수산업 전주기 역량 강화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 ODA는 양식·연수 중심에 머물렀으나, 협력 수요는 훨씬 광범위하다. 콜드체인, 유통·가공, 어촌경제 활성화, 시장 현대화 등 ‘전주기 수산 시스템’을 모듈화해 국가별로 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모아·솔로몬 제도는 수산·관광 복합형 어촌개발이 요구되며, 피지·키리바시는 양식 기반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모듈형 접근을 통해 기존 수산 중심 협력이 고착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생활경제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셋째, 기후변화 및 연안탄력성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 구축이 시급하다. 태도국은 해수면 상승, 연안 침식, 산호·맹그로브 감소 등 심각한 생태·기후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해양산성화 모니터링, 연안생태 복원, 블루카본 기반 탄소관리, 조기경보시스템(EWS) 등 기후 중심 모듈을 결합한 종합적 협력사업은 협력국의 최상위 우선과제와 정합성을 보인다. 특히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해양 과학기술 수출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

넷째, 해상안전·해상교통·항만 기반 개선을 결합한 해상 물류·안보 협력의 필요성이 확인된다. 태도국은 소규모 분산 도서구조를 갖고 있어 연안 항만·항로표지·해상교통 관리 체계가 취약하며, 이는 필수 물자의 이동과 재난 대응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항로표지 설치, 항만 안전관리, 연안선박 운항 안전, 해상교통 관제 등 모듈을 조합한 협력은 경제적·인도적 가치가 크며, 기존 실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

다섯째, 해양관광·생태관광 분야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태도국의 핵심 산업임에도 우리나라의 ODA는 전혀 접근하지 못한 영역이다. 생태관광 인증, 지역사회 기반 관광, 해양문화 콘텐츠, 관광-수산 복합 비즈니스 등 모듈을 추가하여 기존 수산·환경 관련 사업 성과와 결합하면 경제적 자립 기반을 크게 확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평양은 SPC, FFA, PIF 등 역내 기구들의 역량이 강하여 이들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모듈형 협력사업을 추진하되, SPC·FFA가 보유한 데이터·정책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가 단위 사업을 조정함으로써 지속 가능성과 정책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협력 방향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태평양과 달리 관광 중심의 서비스 경제 구조, 높은 재난 위험도, 해양환경 의존성, 미국·영국 등 강대국의 영향, 지역기구의 강한 제도력 등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협력 실적은 극히 제한적이며, 수산 중심 사업 외에는 사실상 개입 경험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의 정합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카리브해 협력 수요는 생태관광·기후·환경·연안보전·재해대응·해양안보 등 고도화된 정책 영역이 중심이며, 이는 한국이 단독으로 개별국에 접근할 경우 비용 대비 효과가 낮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따라서 카리브해 협력 전략은 직접 접근이 아니라, 국제기구·지역기구와 연계한 간접·플랫폼형 협력 방식을 중심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해양·환경 거버넌스 기반 협력이 카리브해 협력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 카리브 국가들은 블루경제, MPA 확대, 연안통합관리, 해양쓰레기 저감 등 정책 기반 수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CRFM, CARICOM,

UNEP, CBF 등은 이미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정책 정보를 보유한 대표적 기관으로, 이들과 공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한국의 부족한 현지 경험을 보완할 수 있다. 특히 MPA 설계 지원, 연안 보전 정책, 생태계 서비스 분석 등은 모듈형 정책 지원 형태로 제공하기에 적합하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 및 연안탄력성 강화 협력 도입이 필요하다. 카리브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허리케인·폭풍 위험도를 보이며, 연안침식·바다 표면 온도 상승·산호 백화 등이 지속적·구조적 문제이다. 따라서 해안침식 데이터 구축, 연안방재 계획, 블루카본 지도 제작, 해양재난 조기경보, 기후리스크 평가 등 정책·데이터 중심 모듈을 결합한 기후 분야 협력이 효과적이다. 이는 다자기구의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단독 사업 대비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셋째, 해양관광·생태관광 중심 협력의 전략적 추진이 요구된다. 카리브해에서 관광산업은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지역 경제의 핵심이다. 한국이 직접 관광 인프라를 건설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으나, 생태관광 인증제, 관광·환경 연계 데이터 구축, 디지털 관광 콘텐츠(VR·AR) 등 소프트 모듈 중심의 지원은 실질적 수요와 일치한다. 이는 한국의 콘텐츠·IT 강점과도 연계될 수 있으며, CARICOM·CBF 등과 공동 추진 시 현지 제도적 수용성도 높다.

넷째, 해양안보 및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이 필요하다. 카리브해는 마약·총기·인신매매의 주요 해상 경로이며, 다수 국가들이 AIS·VMS 기반 감시, 연안감시 드론,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를 요구한다. 한국은 이 분야 기술·훈련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단독 개입 대신 UNODC 등 국제기구와 공동 훈련·정책 지원 형태의 모듈을 제공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다섯째, 정책·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카리브 국가는 해양과학 인프라·정책 데이터 구축 역량이 부족하여 해양공간계획

(MSP), 해양관측, 기후모델링 등에서 체계가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타 대학 및 연구원 등이 보유한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CARICOM·CRFM과 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면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카리브해 협력의 기본 원칙은 ‘직접 개입 최소화 + 다자기구 기반 간접 지원 + 정책·데이터 중심 모듈 제공’이다. 이는 태평양과의 비교 우위, 우리나라의 역량 구조, 지역기구의 제도적 영향력, 기존 협력 공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실효적인 접근 방법이며,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협력 포트폴리오를 수산 중심에서 기후·환경·해양안보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제2절 군소도서국 특화 해양수산 국제협력 모델 수립 —

1. OCEAN SHIELD 모델(안) 개요

군소도서국의 해양수산 협력은 오랫동안 ‘수산’, ‘해양환경’, ‘해상물류’, ‘기후’와 같은 분야(field) 중심의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3자 정합성 분석 결과, 이러한 분야 구분은 군소도서국이 실제로 직면한 도전과제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군소도서국의 정책 수요는 단일 분야가 아니라, 감시·양식·유통·생태·기후·제도·교육 등 다양한 기능(function)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량안보·연안보전·해양안보·관광경제와 같은 현실적 과제들은 분야 간 경계 없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다.

예를 들어, 식량안보 과제는 양식기술뿐 아니라 사료·질병관리, 콜드체인, 연안생태계, 기후 대응 기능이 함께 요구되며, 수산물 수출 확대는 가공·품질·위생 인증, 항만 인프라, 물류 등 기능 요소들의 통합적 조합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이처럼 군소도서국의 수요는 ‘분야’가 아니라 ‘기능’ 수준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분야 중심의 협력 모델로는 수요와 실적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ODA사업이 단편적·편중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군소도서국의 다양한 조건과 수요를 기능 단위로 재구조화하여 모듈형으로 조합 가능한 전략 모델 「OCEAN SHIELD」를 제안한다. OCEAN SHIELD는 감시(Surveillance), 인력(Human Resources), 인프라(Infra - structure), 생태(Ecosystem), 법·정책(Law), 개발(Development)의 여섯 가지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 기능 아래에 세분화된 선택형 모듈을 배치함으로써 국가별로 필요한 요소만 선택해 조합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갖는다.

즉, OCEAN SHIELD는 하나의 단일한 ODA사업 모델이 아니라, 각 국가의 산업 구조, 제도 수준, 정책 역량, 경제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기능만 조립해 구성하는 ‘맞춤형 협력 플랫폼’이다.

이러한 기능 기반(modular function-based) 접근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제공할 수 있다.

1. 수요 정합성 강화: 분야별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던 복합적·통합적 수요를 기능 조합으로 대응
2. 선택적 협력: 협력국의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 식의 요구를 기능 단위로 분명히 구분하여 필요한 모듈만 선택하도록 유도

3. 예산·역량 기반 단계적 사업 설계: 저소득국(LIC: Low-Income Country)-중소소득국(MIC: Middle-Income Country) 모두에게 적용 가능
4. 부처·사업 분절성 해소: 해양수산부 내부 협력 기능을 조율, 사업 담당자의 사업 요소별 구성 파악 및 사업 내용 파악 용이
5. 태평양·카리브해 권역별 차별화 용이: 직접(태평양)·간접(카리브해) 접근 모두 모델 내에서 구현 가능

결과적으로 OCEAN SHIELD는 기존 분야 중심 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소도서국의 실제 정책 수요, 경제 구조, 제도 여건을 반영하여 기능 중심의 모듈형 조합을 통해 최적화된 협력사업을 제공하는 전략적 국제협력 모델이다. 본 모델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가별 정책 체계 강화와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한 해양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해양수산 국제협력의 새로운 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 5-1〉 OCEAN SHIELD 전략 키워드 및 기능 기반 대응 모듈(안)

약어	전략 키워드	범위 및 기준	기능 기반 세부 모듈
S	Surveillance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감시·단속·집행 감시·단속 보안·MCS·안보	• IUU 어업 감시(VMS·AIS) • 전자 모니터링(EM) 시스템 • 위성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 MCS 통합 시스템 • 해상 마약·인신매매 대응 • 연안감시·드론·관측소 • 해상 단속·집행 인력 훈련
H	Human Resources (인적 역량 강화)	사람/조직의 능력 자체 교육·훈련,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 양식·종자·어병·사료 기술 교육 • 수산물 위생·품질관리·가공·경영 교육 • HACCP·수출 인증 체계 • 정책·행정 인력(MCS·MSP·ICM) 역량 강화 • 선원(상선, 어선) 및 오퍼버 양성 • 해양조사·관측·분석 등 연구 능력 확충 • 현지 강사·교사·연구자 양성

약어	전략 키워드	범위 및 기준	기능 기반 세부 모듈
I	Infrastructure (기반 시설 구축)	물리적 시설· 장비·설비 건설·설치·장비· 도구·현장 개선	• 양식장·부화장·사료 생산·질병관리 시설 • 가공·저장·냉동·콜드체인 • 수출 검역·위생·품질 인프라 • 항만·어항·선적장 보수/현대화 • 항만 시스템 고도화 • 항로표지·해양안전·관제센터 • 해양 기반 에너지 도입 • 친환경 선박 전환
E	Ecosystem (해양생태계 보전과 회복)	환경·생태· 기후·복원 자연·환경, 또는 자연 기반 정책	• 연안, 해양, 자원조사 및 데이터화 • MPA 설계·운영·모니터링 • 산호·맹그로브 복원 • 연안침식·해수면 상승 대응 시스템 • 해양쓰레기 수거·저감 시스템 • 블루카본 지도·데이터화 • 기후 조기경보(EWS) 및 해안 재난 대응
L	Law (법제도 정비 및 정책 확립)	법률·규정· 제도·절차 국가 시스템 개선	• 수산·IUU·환경 관련 법령 정비 • 정책·개발전략(MSP·ICM) 수립 • 해양·수산 데이터·통계 체계 구축 • MPA·블루카본 제도화 지원
D	Development (지속가능한 해양개발 전략)	산업·경제 발전 모델 블루이코노미 산업 발전, 지역경제 발전	• 식량안보 및 고부가가치 창출 • 문명 개선·기초·모자 보전 • 지역 경제 발전·어촌 생계 다변화 • 여성·청년 참여형 모델 • 해양 생태 관광 • 관광·수산 복합 개발(AR/VR 등 콘텐츠)

자료: 저자 작성

OCEAN SHIELD의 기능별 모듈 구조는 단순히 협력국의 수요를 선택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가 아니라, 군소도서국 협력에서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분야 중심 접근의 한계, 수요-공급 간 정합성 부족, 우리나라 ODA사업의 분절성 등)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능(function) 단위로 세분화한 모듈을 조합하는 방식은

양식·가공·유통·품질·환경·연안·기후·감시·법제 등 서로 다른 기능이 국가별로 전혀 다른 조합으로 요구되는 군소도서국의 현실을 정밀하게 반영하며, 협력 대상국은 제도 수준·정책 역량·산업 구조에 따라 필요한 기능만 선택하여 자신에게 최적화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처 간·분야 간 분절성을 해결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전통적인 ODA사업은 수산·해양환경·기후·물류·관광 등 분야별로 분리되어 추진되면서 실제 요구되는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수행기관 내부에서도 ODA 관련 배경 부족, 보직 이동으로 인한 업무 변경 등으로 인해 수행사업에 대한 전주기 관리 및 수행이 곤란하였다.²²⁴⁾ 반면, 기능 기반 모듈 구조는 해양수산부 내부의 수산·환경·해사·연구 기능뿐 아니라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수행하는 기능을 동일한 프레임워크 안에서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게 하여, 정부가 최근 강조하는 부처 융복합형·패키지형 ODA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담당하는 ODA사업의 추기별 추진 현황을 기능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해진다. 예를 들어, ODA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수행 단계로 넘어갈 때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기본 사업 구조로는 전체 사업이 왜 인프라, 역량 강화, 제도 개선으로 구성되었는지, 이를 위한 사업의 활동과 산출물, 성과, 영향을 어떻게 구성하고 추진해야 하는지 기관 내 자료로는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기능별로 조합하는 모듈화 사업이라면 협력국이 왜 역량 강화라는 모듈을 선택했는지,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협력 담당기관에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로 설정했는지를 사업 구조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새로 온 담당자도 역량 강화라는 모듈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이 활동을 통한 산출물과 성과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224) 전혜은 외(2025), pp. 122-123, 181-183, 213-217.

용이해진다. 또한, 기능별로 모듈을 구성한다면 다른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지표 및 측정법을 도입하는 것이 기존의 분야별 접근보다 쉬워진다.

아울러 본 모델은 수원국의 경제·제도 수준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저소득국(LIC)부터 중소소득국(MICs)까지 단계적·차등적 적용이 가능하다.²²⁵⁾ 기초 역량이 부족한 ODA 수원국에 대해서는 기초 양식·유통·기후·생태 기반 모듈 등 기반구축형 협력을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제도·기술 기반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된 중소소득국에는 정책 자문, 제도 정비, 데이터·통계 체계 구축, 공동연구 등 고도화 모듈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태평양과 카리브해처럼 물리적 환경·경제 구조·산업 기반이 상이한 권역에서도 동일한 협력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태평양에는 직접형 접근의 협력사업 기획, 카리브해에는 다자 기반 간접형 협력사업 기획이라는 차별화 전략을 구현할 수 있게 한다.

결론적으로, 결국 OCEAN SHIELD는 군소도서국의 복합적 수요를 기능 단위로 재구조화하고, 국가별 여건에 따라 적합한 기능만 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됨으로써, 기존 분야 중심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협력의 효과성과 정합성을 동시에 높인다. 이 모델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수원국의 정책 체계 강화를 촉진하고,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한 해양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해양수산 국제협력이 확장성·통합성·전략성을 갖춘 한국형 해양수산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225) World Bank는 국가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바탕으로 저소득국($\leq 1,135$ USD), 하위 중소득국($1,136 \sim 4,495$ USD), 상위 중소득국($4,496 \sim 13,935$ USD), 고소득국($\geq 13,936$ USD)으로 분류함. World Bank, World Bank Country and Lending Groups(검색일: 2025. 11. 1.). 중소소득국(MICs)은 하위 및 상위 중소득국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75%가 이 범주에 속함.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의 GNI 수준은 제2장 제2절 참조

2. OCEAN SHIELD 구성 요소별 추진 방안

1) S. Surveillance – 감시·단속·모니터링 체계 강화

(1) 추진 방향

군소도서국의 해양수산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IUU 어업을 비롯한 불법 조업, 마약·인신매매 등 해상 기반 초국경 범죄의 확산이다. 태평양과 카리브해 도서국은 광대한 EEZ 대비 단속 인력과 감시 장비가 현저히 부족하여, 인근국 또는 원양국의 불법 조업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 이는 수산자원 고갈과 연안생태계 훼손으로 직결되며, 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와 경제 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감시·모니터링 체계의 강화는 군소도서국 협력에서 가장 핵심이자 전략적 파급효과가 큰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2) 추진 방안

이에 따라 Surveillance 구성 요소는 ① 기술 기반 감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② 현장 집행 역량 강화, ③ 지역기구와 연계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의 세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세 요소는 개별적으로도 추진 가능하지만, 상호 결합할 경우 국가별 해양감시 역량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먼저, 기술 기반 감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현장에서 단속 인력이나 선박 운용이 부족한 군소도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실효성 높은 접근이다.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VMS(Vessel Monitoring System), 위성 영상(VSAT·SAR), 드론 등 원격 기술을 활용하여 다층적 감시 체계를 설계하고, 국가별 조업감시센터(FMC: Fisheries Monitoring Center)를 구축함으로써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상황 분석과 대응이 가능

해진다. 태평양 도서국은 SPC(태평양공동체), FFA(포럼수산기구) 등 역내 기구가 이미 초보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한국형 시스템과 연계한 네트워크형 감시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

둘째, 현장 집행 역량 강화는 기술적 장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로 운영하고 단속 및 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실무 역량 제고에 목적을 둔다. 단속 공무원, 해경, 수산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훈련이 핵심이며, 구체적으로 선박 검색 기법, 증거 수집 및 관리 실무, VMS/AIS 데이터 분석, 위반 선박 나포 절차, CMR(Compliance Monitoring Review) 등의 현장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고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태평양-카리브해의 권역 특성을 고려한다면, 지역기구와 연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가별 관리하는 도서의 수가 많으며 도서간 거리도 상당한 군소도서국이 개별국 단위로 IUU 어업 혹은 기타 해상범죄 대응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렇기에 지역기구를 활용한 공동 대응 체계가 효과적이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FFA, SPC, WCPFC 등과의 연계로 공동 모니터링, 합동조사,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카리브해에서는 CRFM, CARICOM, UNODC와의 협력을 통해 해상범죄·IUU 어업 대응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다자 기반 접근은 국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이행을 보장하는 구조적 장점을 갖는다.

이와 같은 기술 기반 감시체계 구축, 제도·행정 집행력 강화, 지역기구와의 공조는 단순한 장비·교육 제공을 넘어, 군소도서국이 자율적으로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장기적으로는 IUU 어업 단속 및 해양범죄 감시 실효성 제고, 불법조업 감소, 수산자원 보호, 연안생태계 회복 등의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과지표로는 감시(Surveillance) 기능을 구성하는 기술·운영·제도·다자 협력의 네 축을 기준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단속 건수 중심의 결과 지표를 넘어, 국가의 감시 체계가 실제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S·위성 기반 감시시스템 구축 및 가동률, 조업감시센터(FMC)의 운영 수준, 단속 절차 표준화 및 현장 적용 여부, 감시·단속 인력의 교육 수료율, 지역기구(SPC·FFA·CRFM 등)와의 정보 공유·공동 단속 참여 횟수와 같은 지표는 감시 기능의 체계적 작동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역내 IUU 어업 감소율, 합법 조업 신고율 향상, 해상범죄 탐지율 등 기능 기반 성과지표를 적용함으로써, 감시체계 구축—집행—성과로 이어지는 전과정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3) 예산(안)

Surveillance 사업의 예산(안)은 FMC 기능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한정하여 산정하였다. 즉, 건물·전기·기초 통신 인프라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 시스템만 구축하면 된다는 물리적 가정하에 산출하였다. 기술 기반 감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군소도서국의 해양 감시 역량을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지만, 국가별 여건과 기존 시스템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구축 범위와 비용이 상이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협력국 혹은 국제기구가 분담해야 하는 운영비·인건비, Human Resources에 포함될 교육·훈련(역량 강화)과 순시선, 단속 장비 등 현장 단속을 위한 자산을 제외하고,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전제로 한 감시 시스템(FMC) 구축 비용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협력국의 수요와 재정 여건에 맞춘 현실적인 사업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본 사업의 예산(안)은 AIS/VMS·위성 등 데이터 연계, FMC 소프트웨어, 서버·스토리지·백업 등 정보시스템 기반, 시스템 통합(SI)·보안설계·시험가동으로 구성하였다. 국가의 EEZ 규모, 기존 데이터 체계(AIS/VMS 보유

여부), 위성 데이터 활용 수준, 지역기구 연계 범위에 따라 예산은 단계적으로 차등화될 필요가 있다.

〈표 5-2〉 Surveillance 사업 예산 범위(안)

구분	적용 상황	주요 구성	예산 (USD)	예산 (원)
S-1. 기본형	단일 기관 수준의 최소 운영	기본 FMC SW(대시보드·경보·리포트), 기본 서버/스토리지, AIS 데이터 연계 (수신 또는 외부피드), 최소 통합	0.5~ 1.2M	7~ 16.8억
S-2. 표준형	단일 국가 감시 (운영 정착)	FMC SW 고도화(위반탐지 룰·케이스 관리), VMS/AIS 연계, 위성데이터 연계(초기), 이중화/백업, 선택적 API 연계	1.2~ 3.0M	16.8~ 42억
S-3. 고도형	다도서·다기관 통합 운영	표준형 + 위성(SAR/광학) 연계 고도화, 자동 이상탐지(고급 룰/분석), 증거·로그관리 강화, 고가용성(HA) 구성, 확장형 스토리지	3.0~ 6.0M	42~ 84억
S-R. 지역 연계형	역내 공동 대응	(S-2 또는 S-3) + 지역기구 연계 API, 공동운영 포털(권한관리), 상호운용 표준 적용	0.5~ 2.0M	7~ 28억

주: 원화 환산은 1 USD = 1,400원 기준의 대략치이며, 구성 요소 및 계약 방식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ODA KOREA, ODA 통계(검색일: 2025.11.10.); 전문가 자문회의(2025.9.4. 서면, 2025.11.4. 서울) 결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H. Human Resources - 인적 역량 강화

(1) 추진 방향

군소도서국은 구조적으로 인력 기반이 취약하므로 기술·정책·행정 전반에서의 전문인력 부족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자주성·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는 태평양·카리브해 양 권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순 장비·시설 공급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운용 및 정책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양식 수산물 생산 및 어병 대응, 선원 및 해기사 양성, 해양환경·자원 조사 및 분석, 데이터 기반 실행과제 수립 등 분야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군소도서국의 현지 기관은 이를 담당할 충분한 인력과 교육 혹은 훈련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추진 방안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Human Resources 구성 요소는 ① 기술·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 강화, ② 정책·행정 기반의 전문성 강화, ③ 현지 교육 생태계 구축(ToT: Training of Trainers) 및 연구 능력 확충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술·현장 인력 강화를 위해 양식기술(종자, 사료, 질병관리), 수산물 위생·가공(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승선 교육, 오피서 양성, 해양조사와 환경 모니터링 등 실습 중심 훈련이 필수적이며, 현장 기반 기술을 직접 습득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 실무 역량 강화는 수립된 정책과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집행하는 공무원과 실무자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법·제도 자체를 만드는 것(L의 영역)이 아니라, 만들어진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태평양 군소도서국의 경우, 이미 지역기구 차원에서 여러 규범 및 지침을 만들었으며, 이를 국별 법 및 제도에도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집행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 집행력 제고를 위해 구체적으로 행정 절차 처리, 보고서 작성 실무, 데이터 입력 및 관리, 예산 집행, 사업 모니터링, 이해관계자 조정 등 행정 실무 능력과 관련된 교육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 보고서 작성, 프로젝트 주기 관리(PCM: Project Cycle Management), 모니터링·평가(M&E: Management and Evaluation) 등 행정 운영 역량도 포함할 수 있다. 셋째, 협력사업이 끝나더라도 전수된 기술 및 강화된 역량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력국 스스로 유지 및 개선할 수 있는 역량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국 스스로 교육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제공자(Trainer)를 양성하는 접근법인 현지 교육생태계 구축(ToT)과 더불어 주체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자 양성을 병행할 수 있다. 사업 수혜자를 현지 대학·연구기관·

정부훈련기관으로 설정하고, 그들이 지역 주민, 어업인, 청년 등을 교육하는 구조를 확립한다면 중장기적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적 역량 강화 접근은 군소도서국의 산업 기반을 공고하게 함과 동시에, 제도·정책 집행 기능 강화와 산업 현장 실행력 강화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파급효과가 크다. 또한 기능 기반 접근을 적용함으로써, 식량안보가 우선인 국가는 양식·질병 관리 인력을,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 필요한 국가는 전문가(선원·오피서버 등) 전문인력을, 재해 대응이 시급한 국가는 데이터 분석 및 제도 집행 인력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등 국가별 맞춤형 인력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성과지표 또한 기능 단위로 설정함으로써 단순 교육 횟수가 아니라 역량 강화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기술 현장 분야에서는 실습 중심 연수 이수자 수, 양식·위생·가공 등 특정 기술 분야 자격 또는 인증 취득 인원 증가, 현장 운영 능력 향상 정도 등을 지표로 삼을 수 있다. 정책·행정 영역에서는 정책 교육 이수자 수, 교육 이수자의 실제 직무 배치율, 데이터·통계 보고 체계 운영 참여도 등이 중요한 성과를 구성한다. ToT 및 연구 능력 확충 영역에서는 현지 교사 양성 인원, 현지 교육기관이 독자적으로 개설한 교육과정 수, 자체 교육 운영 횟수, 연구 실적 및 연구 결과 적용 정책 건수 등이 대표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협력 종료 이후에도 국가가 스스로 역량을 유지·확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이러한 기능 기반 지표를 적용할 경우, 인력 양성 과정의 단계별 성과와 장기적 자립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예산(안)

Human Resources 구성 요소의 예산(안)은 군소도서국의 해양수산 분야 핵심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축 및 초기 실행’에 한정하여 산정하였다. 즉, 교육 시설·훈련 센터 등 물리적 인프라는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기존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교육 과정 설계, 교재·콘텐츠 개발, 단기 집중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장 실습 및 평가 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만을 반영하였다. 본 예산에는 협력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운영비, 학위 과정, 급여성 장학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군소도서국의 인력 역량 강화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감시·인프라·생태·제도 등 타 구성 요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인력 수요 수준, 교육 대상 규모, 전문성 요구 정도에 따라 단계적·모듈형 예산 범위를 설정하고, 기술·현장 인력, 정책·행정 인력, 교육 전수(ToT) 역량을 중심으로 차등화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Human Resources 예산(안)은 교육과정 설계 및 교재 개발, 단기 연수 및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파견 및 초빙, 성과 평가 및 인증 체계 구축으로 구성되며, 교육 대상 인원의 범위와 전문 수준, 현지·국외 연수 병행 여부 등에 따라 예산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

〈표 5-3〉 Human Resources 사업 예산 범위(안)

구분	적용 상황	주요 구성	예산 (USD)	예산 (원)
H-1. 기본형	단일 기관·소규모 인력 대상	기본 교육과정 설계, 표준 교재·매뉴얼 개발, 단기 연수(현지 중심), 기초 실습 및 평가	0.3~0.8M	4.2~11.2억
H-2. 표준형	국가 단위 핵심 인력 양성	분야별 전문 교육과정 개발, 현지·초청 병행 연수, 현장 실습 강화, 성과 평가·인증 체계 구축	0.8~2.0M	11.2~28억
H-3. 고도형	다분야·다기관 인력 양성	고급 전문 과정(기술·정책·데이터), 장기 파견·초빙 혼합, 다부처 공동 교육, 고급 평가·자격 연계	2.0~4.0M	28~56억
H-R. ToT 연계형	자립형 교육 체계 구축	(H-2 또는 H-3) + 교육자(ToT) 양성, 현지 교육과정 독자 개설 지원, 교재 현지화	0.3~14M	4.2~19.6억

주: 원화 환산은 1 USD = 1,400원 기준의 대략치이며, 교육 대상 규모·연수 방식(현지/국외)·전문 분야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ODA KOREA, ODA 통계(검색일: 2025.11.10.); 전문가 자문회의(2025.9.4. 서문, 2025.11.4. 서울) 결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I. Infrastructure - 기반시설·장비·설비 구축

(1) 추진 방향

군소도서국의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생산·가공·유통·물류·해상 안전 등 사업 전반에 있어 인프라 부족이 가장 두드러진 제약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은 지리적 고립성과 높은 물류비, 기초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생산성과 식량 안보가 취약한 상태이며, 카리브해 국가들은 반복되는 허리케인·폭풍 등 기후 재난으로 인프라 파손과 회복 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취약성은 단순한 시설 부족을 넘어 양식·가공·유통 단계의 연결을 약화시키고, 수출 경쟁력 감소, 연안 안전성 저하, 해상사고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반 시설 구축은 단순한 물적 지원을 넘어 전체 해양경제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요소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추진 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nfrastructure 구성 요소는 ① 생산·가공·유통 기반 확충, ② 해양안전·항만·연안 정비, ③ 해양 기반 에너지 및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전환), ④ 운영·유지관리(O&M: Operation and Management) 체계 확립의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첫째, 생산 기반 인프라는 양식장·부화장·질병관리시설·수질관리 시스템 등 식량안보 및 초기 생산을 뒷받침하는 도로·수도 등의 인프라와 관련 설비 구축을 포함한다. 기술·재정적 여건이 부족하며 어획 중심의 수산물 확보 구조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태평양 도서국에서는 소규모·저비용·친환경 양식 기반 구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어획 생산량은 충분하나 유통이 어렵다면 제빙 시설, 냉동창고 등 저장소와 더불어 도로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도로·수도 등의 기초 인프라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유상원조 혹은 타 분야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둘째, 해양 안전·항만·연안 정비는 항만·어항·선적장 보수/현대화, 항만 시스템 고도화, 항로표지(AtoN), 해상교통관제(VTS) 등 국가의 항만 물류 기능 강화와 해상 안전성 제고 요소를 포함한다. 이는 Surveillance, Ecosystem 기능과도 긴밀히 연동되는 영역이므로 기능 간 조합의 효과가 특히 크다. 또한, 물류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며, 카리브해와 같이 관광·물류 기반 경제가 중요한 지역에서 수요가 높다. 셋째, 해양 기반 에너지 및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전환)은 태평양과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모두에서 수요가 높은 분야이다. 전기는 기초 생활은 물론 산업 기반 조성에 필수적이나 군소도서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수온도차 등 해양 기반 에너지 생산 기술 전수 및 기반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높은 유류비 및 제한된 토지로 인한 공항 건설 불가 등 운송수단의 제약으로 도서 간 이동이 어려운 도서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선박 도입 혹은 전환을 통해 이동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운영·유지관리 체계 확립은 군소도서국은 지금까지 ODA 등을 통해 설비 구축 및 장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유지 관리력이 부족해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경험이 많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운영 매뉴얼 개발, 예방정비 계획 수립, 비용 분담 모델 도입, PPP 방식 운영 등을 통해 지원한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프라 구축 전략은 국가별 경제구조와 발전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식량안보가 시급한 국가는 생산·가공 인프라를, 수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국가는 항만·물류 인프라를, 에너지 자립이 절실한 국가는 해양에너지 인프라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운영·유지관리 체계를 모든 인프라 사업에 필수 요소로 포함함으로써, 과거 ODA사업의 고질적 문제였던 '인프라 조성 후 방치' 현상을 예방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기반 접근은 단순히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해양경제로 전환하는 데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핵심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이가 있다.

성과지표 또한 네 가지 축에 맞춰 설정할 수 있다. 생산·가공·유통 인프라에서는 양식 생산량, 콜드체인 가동률, 수출 검역 통과율 등 가치사슬 전반의 효율성을 측정한다. 해양안전·항만 인프라에서는 항만 처리능력, 해상 사고 감소율, 항로표지 정상 운영률 등 안전성과 효율성 지표를 활용한다. 해양에너지·친환경 운송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량, 에너지 자립도, 친환경 선박 운항률, 도서 간 이동시간 단축 등 에너지 안보와 접근성 개선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O&M 체계에서는 장비 가동률, 현지 유지보수 수행률, 운영 지속기간 등을 통해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한다. 이러한 기능별 지표는 단순한 시설 구축 실적을 넘어, 인프라가 실제로 작동하여 군소도서국의 해양경제 전환에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3) 예산(안)

Infrastructure 구성 요소의 예산(안)은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분야의 핵심 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장비·설비의 ‘구축’에 한정하여 산정하였다. 즉, 토지 매입, 건물 신축, 기초 전력·상하수·도로 등 범정부 차원의 기본 인프라는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타 사업을 통해 병행 구축된다는 전제하에, 해양수산 분야에서 직접 활용되는 시설·설비·장비 및 이에 부수되는 시스템 구축 비용만을 반영하였다. 본 예산에는 협력국이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 인건비, 장기 유지관리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표 5-4〉 Infrastructure 사업 예산 범위(안)

구분	적용 상황	주요 구성	예산 (USD)	예산 (원)
I-1. 기본형	단일 시설·기능 보완	소규모 양식·가공 설비, 제빙·냉동 장비, 기본 수질·위생 관리 설비, 제어 시스템	0.1~3.0M	1.4~42억
I-2. 표준형	지역 단위 핵심 인프라 구축	양식·가공·저장 연계 설비, 콜드체인 핵심 장비, 항만·여항 보수(설비 중심), AtoN·VTS 일부	0.8~2.0M	11.2~28억
I-3. 고도형	국가 단위 다기능·복합 인프라 구축	표준형 + 항만·연안 안전 설비 고도화, 물류·관리 시스템 연계, 친환경 설비 포함	2.0~4.0M	28~56억
I-E. 에너지·친환경	에너지 자립·전환 필요 국가	(I-2 또는 I-3) + 해양에너지 설비, 친환경 선박·운송 설비(전환 포함)	3.0~25.0M	42~350억
I-O. 자립운영	지속가능성 확보	운영 매뉴얼, 예방정비 시스템, 부품·소모품 관리 체계, PPP 운영 정책 및 제도 제안 등	0.2~0.8M	2.8~11.2억

주: 원화 환산은 1 USD = 1,400원 기준의 대략치이며, 설비 사양·물류비·조달 방식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ODA KOREA, ODA 통계(검색일: 2025.11.10.); 전문가 자문회의(2025.9.4. 서면, 2025.11.4. 서울)
 결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군소도서국의 인프라 수요는 식량안보, 수출 경쟁력, 해양 안전, 에너지 접근성 등 국가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생산·가공·유통 인프라, 해양안전·항만·연안 인프라, 해양 기반 에너지·친환경 운송 설비, 운영·유지관리(Operation & Management)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인프라 유형을 구분하고, 기존 시설 보유 여부와 구축 범위에 따라 단계적 예산 범위를 제시하였다.

Infrastructure 예산(안)은 설비·장비 도입 및 설치, 제어·관리 시스템 구축, 시운전 및 초기 검증으로 구성되며, 국가의 경제 규모, 도서 분산 정도, 기후·재난 노출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4) E. Ecosystem - 해양생태계·환경·기후 회복력

(1) 추진 방향

군소도서국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으로, 산호 백화, 맹그로브 훼손, 연안침식, 해양쓰레기 증가, 해수면 상승 등 생태계 기반의 위기가 국가 전체의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생태계의 단순한 훼손을 넘어 수산 생산성 감소, 관광 수입 축소, 연안 지역 생활환경 악화로 연결되며, 식량안보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은 해수면 상승과 연안침식에 특히 취약하고, 카리브해는 허리케인·폭풍 등 극한 기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권역별 특성도 뚜렷하다. 이러한 생태·기후 기반 문제는 개별 사업이나 단일 분야의 접근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생태 복원·환경 관리·기후 대응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합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2) 추진 방안

해양생태계 보호는 군소도서국의 생태적 회복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와 생계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이 모듈의 구성 요소는 ① 연안·해양·자원조사 및 데이터 구축, ② 해양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복원 강화, ③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및 해양오염 저감, ④ 연안침식·해수면 상승 및 기후재난 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안·해양·생태 특성, 수산자원 분포 및 변동, 해안선 변화 및 침식, 산호·맹그로브·블루카본 현황 등의 조사를 수행하여, 국가 단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군소도서국의 환경·기후 관련 정책, MPA 설계, 연안 재해 대응계획 등 모든 하위 사업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둘째, 해양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복원 강화는 종 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한다. MPA 및 기타 효과적 구역 기반 보전수단(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설계·지정·운영·모니터링 체계 확립, 산호 및 맹그로브 등 훼손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태적 연결성을 회복하고, 어류 산란장·서식처 기능을 강화한다. 셋째,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및 오염 저감은 해양쓰레기의 발생-수거-재활용/처리의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연안·항만·어항·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유입 경로 분석 기반 배출 저감 사업, 자원 순환 구조 마련,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및 통계 구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넷째, 연안침식·해수면 상승 및 기후재난 대응 체계 구축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국토 유실 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 아울러 연안 생태계 보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연안침식·해수면 상승 대응 시스템 구축, 기후 조기경보(EWS: Early Warning System) 및 해안 재난 대응 체계 마련, 연안침식 취약성 평가 및 연안관리구역 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출 가능한 주요 성과 지표(안)로는 수거된 해양쓰레기양, 해양보호구역 확대 면적률, 해양보호종 관리 및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항목 수, 쓰레기 저감 혹은 해안 재난 대응 관련 지역 주민 참여율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생태계 보전 성과와 지역사회 수용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다.

(3) 예산(안)

Ecosystem 구성 요소의 예산(안)은 군소도서국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능의 '구축 및 초기 실행'에 한정하여 산정하였다. 즉, 침식 대응 등을 위한 대규모 토목 공사, 장기 복원 유지관리, 상시 모니터링 인건비 등은 제외하고, 기초 조사·데이터 구축, 복원 시범사업, 관리·모니터링 체계 구축, 초기 실행 단계의 장비·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비용만을 반영하였다.

군소도서국의 생태·환경 수요는 해수면 상승, 연안침식, 산호·맹그로브 훼손, 해양쓰레기 유입 등 기후·환경 리스크의 유형과 심각도에 따라 크게

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안·해양·자원 조사 및 데이터 구축, 생태계 복원 및 보호 체계 구축,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체계, 연안침식·기후재난 대응 시스템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국가별 취약성과 적용 범위에 따라 단계적 예산 범위를 제시하였다.

〈표 5-5〉 Ecosystem 사업 예산 범위(안)

구분	적용 상황	주요 구성	예산 (USD)	예산 (원)
E-1. 기본형	단일 생태·기후·환경 요소 대응	연안·해양 기초 조사, 생태·자원 데이터 구축, 기본 모니터링 장비	0.8~2.0M	11.2~28억
E-2. 표준형	국가 단위 관리 체계	생태·자원 조사 확대, MPA/OECM 설계·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장비·플랫폼	2.0~6.0M	28~84억
E-3. 고도형	국가 단위 복합 리스크 관리	표준형 + 산호·맹그로브 복원 시범, 해양쓰레기 관리 시스템, 연안침식 대응 설비	6.0~15.0M	84~210억
E-C. 기후대응	재난·기후 취약 국가	(E-2 또는 E-3) + EWS, 연안침식·해수면 대응 시스템, 기후 데이터 통합	3.0~10.0M	42~140억
E-M. 관리·모니터링	지속가능성·확장성 확보	장기 모니터링 설계, 성과지표 체계화, 지역사회 참여형 관리 모델	0.3~1.0M	4.2~14억

주: 원화 환산은 1 USD = 1,400원 기준의 대략치이며, 적용 생태 유형·복원 범위·장비 사양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ODA KOREA, ODA 통계(검색일: 2025.11.10.); 전문가 자문회의(2025.9.4. 서면, 2025.11.4. 서울) 결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cosystem 예산(안)은 조사·모니터링 장비 및 시스템 구축, 시범 복원 사업, 관리·평가 체계 설계, 초기 실행 및 검증으로 구성되며, 단일 생태 요소 중심의 접근부터 복합적 기후·생태 대응 체계 구축까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Ecosystem 예산(안)은 조사·모니터링 장비 및 시스템 구축, 시범 복원 사업, 관리·평가 체계 설계, 초기 실행 및 검증으로 구성되며, 단일 생태 요소 중심의 접근부터 복합적 기후·생태 대응 체계 구축까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5) L. Law - 법·제도·정책·데이터 거버넌스

(1) 추진 방향

군소도서국의 해양수산 부문은 기술·인프라·생태계 등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지만, 이를 규율하고 통합할 법·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공통된 한계를 가진다. 관련 법령은 오래되었거나 국제기준과 불일치하며, 최근 이슈가 되는 IUU 어업 대응, MPA 관리, 블루카본 활용 등을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시스템과 역할 분담도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여러 군소도서국이 해양수산 관련 데이터 혹은 기초 통계 체계가 부재하거나 단편적으로만 존재하여 감시·단속, 어획물 관리, 연안·생태 보호, 수출·검역 등의 각 기능이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개발 산업 혹은 지역 단위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국가 내 통합, 국가 간 협력, 지역기구와의 조정, 국제규범 이행, 블루이코노미로의 전환에 구조적 제약을 초래하며, 다른 구성 요소(S/H/I/E/D)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 요소에서는 법·제도·정책·데이터 거버넌스를 독립된 하나의 요소로 보고, 모든 정부 활동 및 민간 활동이 국가 시스템 내에서 일관되게 기획·집행·평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추진 방안

Law 구성 요소는 ① 수산·양식·해양환경 법령 및 규제 정비, ② 정책·계획 수립 체계 고도화, ③ 데이터·통계 기반 구축 및 운영, ④ 지역·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법령 및 규제 정비는 IUU 어업 단속과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 양식 및 수산자원 이용·보전 기준, 연안관리·환경영향평가(EIA) 규정 등 핵심 규범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하는 작업이다. 단순한 조문 개정을 넘어, 수산·양식·환경·관세·사법 등 관련 법령 간 정합성과 집행 절차의 명확화를 통해 국가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다. 둘째, 정책·계획 수립 체계 고도화는 국가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전략과 중장기 계획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MSP, ICM, 기후·환경 계획, 수산·양식 계획 등이 대표적이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부처 협력 및 이해관계자 참여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데이터·통계 기반 구축은 과학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수산자원 조사, 양식 생산 통계, 연안환경 모니터링, 수출·검역 데이터 관리 등 데이터 생성·관리·보고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넷째, 지역·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는 SPC·FFA·WCPFC·CARICOM 등 지역기구의 규범과 보고 체계를 준수하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국제해사규정, FAO 가이드라인 등을 이행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법·정책 기반 강화는 군소도서국이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정책을 설계·관리하며 국제규범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자립성으로 이어진다. 또한 기능 기반 접근의 장점을 활용하면, 식량안보가 우선인 국가는 양식 규제·질병 관리 규정 정비에 중점을 두고, 해상범죄 문제가 심각한 국가는 감시·단속 관련 법적 기반을, 관광 중심 국가는 MPA·연안관리 규정 정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등 국가별 차별화된 조합이 가능하다.

법령·규제 정비 영역에서의 성과지표는 수산·양식·환경 관련 법령의 제·개정 건수, 규정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정도, 단속·관리 절차의 표준화 수준 등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 정책·계획 수립에서의 성과지표는 MSP·ICM 등 주요 계획 수립 여부, 정책 문서의 발간 및 실행 가능성 평가, 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 구축 정도가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데이터·통계 영역에서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부, 데이터 정기 보고 체계의 가동률,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데이터 활용도 등이 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국제 기준 정합성에서는 지역기구 보고 준수율, 국제협약 이행 평가 등이 성과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군소도서국이 국제협력 체계에서 신뢰가능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3) 예산(안)

Law 구성 요소의 예산(안)은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분야의 법·제도·정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 및 실행에 한정하여 산정하였다. 즉, 대규모 법제 개편, 상시 행정조직 운영, 장기 통계조사 인건비 등은 제외하고, 핵심 법·정책 분석, 제도 설계, 데이터 체계의 기본 골격 구축,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정합성 확보에 필요한 비용만을 반영하였다.

〈표 5-6〉 Law 사업 예산 범위(안)

구분	적용 상황	주요 구성	예산 (USD)	예산 (원)
L-1. 기본형	단일 법·규제 정비	핵심 법·규제 검토, 개정(안) 마련, 기본 이행 가이드라인	0.2~0.5M	2.8~7억
L-2. 표준형	국가 단위 정책·계획 정비	수산·양식·해양환경 정책 정비, MSP·ICM 등 핵심 계획 수립 지원	1.2~2.5M	16.8~35억
L-3. 고도형	통합 거버넌스 정비	다법령 정합성 점검, 정책·집행 연계 체계 설계, 기본 M&E	6.0~15.0M	84~210억
L-D. 데이터	최소 데이터 기반 구축	기본 통계 항목 정의, DB 구조 설계, 보고 체계 정비	0.3~0.8M	4.2~11.2억
L-I. 국제 정합	국제규범 이행 필요	CMR·FAO·IMO 등 기준 반영, 지역기구 보고 체계 연계	0.2~0.6M	2.8~8.4억

주: 원화 환산은 1 USD = 1,400원 기준의 대략치이며, 정책 범위·데이터 수준·국제기준 적용 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ODA KOREA, ODA 통계(검색일: 2025.11.10.); 전문가 자문회의(2025.9.4. 서면, 2025.11.4. 서울) 결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군소도서국의 법·정책 수요는 제도 성숙도와 국제규범 이행 수준에 따라 상이하나, 대부분의 경우 ‘전면적 제도 개편’보다는 기존 제도의 정비·보완과 실행력 제고가 우선 과제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법·규제 정비, 정책·계획 수립 지원, 기초 데이터·통계 체계 구축, 국제·지역 기준 정합성 확보를 중심으로 비교적 경량화된 예산 범위를 설정하였다.

Law 예산(안)은 제도·정책 분석 및 설계,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 기본 데이터 플랫폼 구축, 초기 적용 및 검증으로 구성되며, 다른 구성 요소(S·H·I·E)의 효과적 작동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기능에 초점을 둔다.

6) D. Development - 지속가능 해양경제(블루 이코노미)·산업 개발

(1) 추진 방향

군소도서국의 경제 구조는 전반적으로 수산·관광·연안 자원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지만,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경제활동이 단일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지닌다. 식량안보 문제가 상존함에도 양식 산업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고, 수산물 가공·물류·위생·수출 기능은 부재하거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한 생계 기반이 관광업이나 특정 자연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해 있어 기후 재난·시장 변동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지역경제가 쉽게 흔들리는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개발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지역사회 생계 유지, 수출 경쟁력 확보, 식량 자립도 제고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복합적 목표를 지닌다. 특히 해양수산 부문만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단독 수행하기 어렵고, 관광·농업·보건·교육·금융 등 타 부문과 지방 정부, 민간기업, 지역사회·NGO가 함께 참여하는 다부문·다주체 협력 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Development 구성 요소는 다른 기능과 차별화되는 성격을 가진다.

(2) 추진 방안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여 Development 구성 요소는 ① 식량안보 및 가치사슬 강화, ② 지역사회 기반 해양경제 산업·생계 다변화, ③ 해양·생태 관광 연계 해양경제 모델 확대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식량안보 및 가치사슬 강화는 종자 생산력 확보, 질병관리, 사료 효율화,

양식기술 고도화,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 등을 포함하며, 식량안보를 중시하는 국가에서 가장 수요가 높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 부문뿐 아니라 농업·보건·교육 분야 협력사업 및 식품·물류·유통 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종자·사료·가공·검역·물류까지 이어지는 전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기반 해양경제 산업·생계 다변화는 소규모 양식·어업, 해양쓰레기 수거·재활용 기반 경제, 해양환경 교육·커뮤니티 기반 사업 등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지방정부뿐 아니라 어촌계·협동조합, 여성·청년 단체, NGO·시민사회 조직이 사업 설계·운영 단계에 참여하여, 실제 지역 수요와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반영한 포용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과 연계한 지역 기반 소규모 비즈니스를 육성하는 접근도 중요한 수단이 된다. 셋째, 관광·생태 연계형 해양경제 모델은 생태관광, 지역 특산품 수산식품 개발, 블루카본 연계 관광 프로그램 등 환경과 경제가 연계된 융복합 산업으로, 카리브해 지역에서 수요가 크고 태평양에서도 빠르게 증가하는 분야이다. 관광·환경·문화 분야 협력사업, 민간 관광업체, 지역 주민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친환경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과 소득 창출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Development 기능은 개별 산업 육성에 그치지 않고, 생산-가공-유통-서비스-관광-생계의 전 가치사슬을 공공-민간-시민사회가 함께 강화하여 군소도서국의 지역 경제 기반을 안정화하는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이는 과거에 분야 중심 협력에서 나타났던 수요-사업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군소도서국의 현실적 경제 구조와 다부문·다주체 협력 필요성을 정확히 반영한 맞춤형 산업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양식 분야 성과지표로는 생산량 증가율, 종자 자급률 향상, 질병 발생률 감소 등을 설정할 수 있다. 가공·수출 분야에서는 수출 품목 다양화, 위생·

품질 인증 획득 건수, 수출량 증가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경제·생계 다변화 분야에서는 신규 생계 프로그램 운영 건수, 지역 주민 참여도, 소득 증가율 등이 성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광·생태 연계 분야에서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수, 관광수입 증가율, 지역 커뮤니티의 관광 연계 활동 참여도 등을 대표적인 지표로 삼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참여 기업·NGO·지역조직 수, 여성·청년 참여 비율, 타 부문(관광·농업·보건·교육 등)과의 공동사업 수와 같은 지표를 추가한다면, 단순한 경제활동 촉진을 넘어 지역사회회 회복력과 자립도를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3) 예산(안)

Development 구성 요소의 예산(안)은 군소도서국의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블루 이코노미) 및 산업 개발을 위한 ‘연계·촉진형 투자’로서, 단일 사업 또는 단일 주체에 의해 독립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라, 다른 구성 요소와의 결합을 전제로 한 공동 접근 방식에 따라 산정하였다. 즉, Development는 감시·인력·인프라·생태·제도 기반 위에서 가치사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 참여 촉진을 유도하는 촉매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Development 예산을 개별 설비·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산정하지 않고, 공공부문 ODA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 타 부처 사업, 국제기구 재원, 지역사회 기여가 결합되는 ‘공동 투자 규모 범위’로 제시하였다.

〈표 5-7〉 Development 사업 예산 범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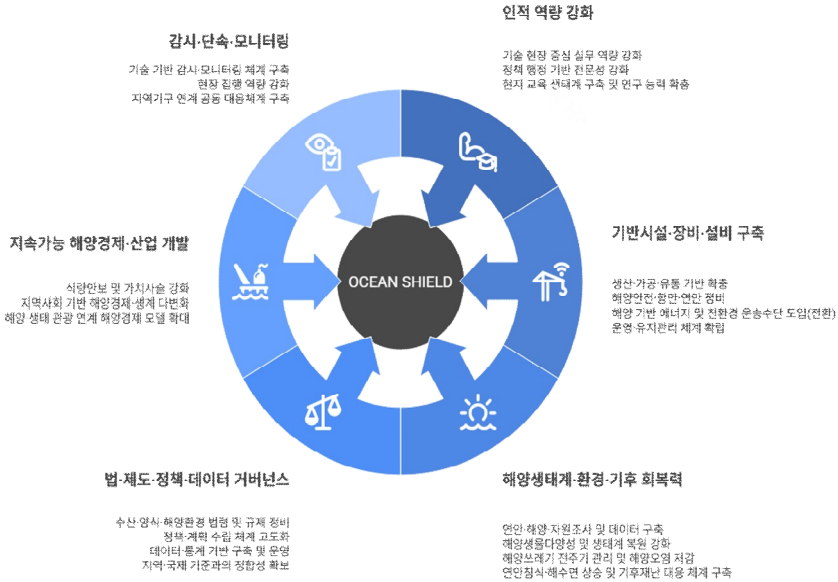
구분	적용 상황	주요 구성	ODA 예산 (USD)	총 예산 (USD)
D-1. 기본형	단일 가치사슬 연계	소규모 양식·가공 연계, 지역 생계 모델 시범, 민간·NGO 참여 설계	1.0~3.0M	3.0~8.0M
D-2. 표준형	국가 단위 가치사슬 강화	종자·생산·가공·유통 연계, 민간기업·금융 연계, 위생·품질 고도화	3.0~8.0M	8.0~20M
D-3. 고도형	지역 경제 구조 전환	산업·관광·생태 결합 모델, 다부처·민간 컨소시엄, 수출 연계	8.0~15.0M	20~40M
D-P. 민간연계	민간 투자 유치 필요	(D-2 또는 D-3) + PPP 설계, 금융 연계, 위험 분담 구조	1.0~3.0M	5.0~15M
D-C. 지역사회	지역사회·취약계층 중심	여성·청년·어촌계 기반 생계 모델, 지역 기반 경제 모델 구축	0.5~2.0M	2.0~6.0M

주: 본 예산은 공공 ODA 기준의 '촉매적 투자' 범위를 의미하며, 민간·국제기구·타 부처 재원은 총 사업 규모 산정 시 참고값으로 제시
 자료: ODA KOREA, ODA 통계(검색일: 2025.11.10.); 전문가 자문회의(2025.9.4. 서면, 2025.11.4. 서울) 결과 참고하여 저자 작성

Development 예산(안)은 식량안보 및 수산 가치사슬 강화, 지역사회 기반 해양경제·생계 다변화, 관광·생태 연계형 해양경제 모델의 세 축을 중심으로, 국가의 경제 구조와 협력 파트너 구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종합하면, OCEAN SHIELD는 감시(S), 인적 역량(H), 기반시설(I), 생태·기후(E), 법·제도(L), 산업·개발(D)이라는 여섯 개 기능을 개별 사업이 아닌 상호 연계된 기능 모듈의 집합으로 설계한 통합 협력 프레임워크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듈별 추진 방향과 예산 범위는 단순한 자원 산정이 아니라, 국가별 여건과 협력 수요에 따라 선택·조합·단계화가 가능한 전략적 설계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림 5-2〉 OCEAN SHIELD 모듈별 구성 요소



자료: 저자 작성(NAPKIN AI 활용)

다시 말해, OCEAN SHIELD는 특정 분야나 단일 사업을 전제로 하지 않고, 군소도서국이 직면한 해양안보, 식량안보, 기후위기, 산업 취약성이 라는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능을 구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제도-현장 실행-성과 확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능 기반·모듈형 접근은 기존의 단편적 사업 중심 ODA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향후 시범사업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소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국제협력의 실천적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실행과제

1.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군소도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은 정책 설계, 감시 체계 구축, 생태·기후 대응 등에서 개별 국가 단위 접근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특히 카리브해 국가들은 통계·데이터 접근성 부족, 정책 설계 기능의 취약, 사업 집행 역량의 제약 때문에 국제기구와 지역기구가 사실상 협력사업의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태평양 국가들 또한 SPC, FFA 등 역내 기구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 및 기술 전수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제도적 연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정보 공유 차원을 넘어, 기획-수행-평가 등 사업 수행 주기는 물론 자원 확보까지 포괄하는 전 과정 기반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실행과제를 도출하였다.

1) 데이터 공유-공동조사-통계 생산 체계 구축

군소도서국과의 협력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기초 통계 부재와 정보 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PC·CRFM·CBF·PIF 등과의 공동 연구 및 기초조사 사업을 정례화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동 생산·공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기술·인력 부족 국가에는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함께 데이터 관리·분석 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2) 협력 수요 도출-정책 조율 기능의 외주화

정책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협력 수요 발굴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시 SPC·CRFM·CARICOM·FFA 등 지역기구를 수요 도출

및 사전 조율의 중개자로 활용하고, 프로젝트 개요서(PCP: Project Concept Paper) 작성, 기술 수요 매칭, 정책 진단 등을 지역기구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조정 비용을 줄이고, 협력의 정합성과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3) 국제·지역 펀드 연계 및 공동 자원조달 구조 구축

기후·생태·감시·인프라 등 SHIELD 기능 중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 중심의 단일 ODA 재원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GEF, GCF, Adaptation Fund, PROBLUE 등 국제기후·해양 펀드와의 연계 사업을 개발하고, SPC, CRFM 등과 함께 공동 제안서(Joint Proposal) 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여금 활용 시에는 기여금-프로젝트 연계 방식(Programmatic Approach)으로 구조화하여 지속성·규모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재정 제약이 큰 군소도서국 협력의 실질적 실행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4) 정례 협력 채널 구축 및 제도화

단발성 협력은 지속성 확보 및 성과 확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한-SPC, 한-CRFM, 한-CARICOM 간 연례 정책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협력 성과 공유, 신규 수요 발굴, 평가 체계 정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협력의 지속성과 제도적 정착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협력국

군소도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이 지속가능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원만이 아니라 협력국 내부의 정책 체계와 행정 기반이 일정 수준 이상 갖추어져야 한다. 이는 사업 기획의 정확도, 집행 안정성, 사후관리 및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과도 직결된다. 그러나 실제로 다수의 태평양·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정책 우선순위 미설정, 정보 부족, 담당 부처 혹은 기관 부재, 부처 간 분절, 관리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수용할 준비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협력국이 수행해야 할 실행과제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기초통계 생산·관리·공개 체계 구축

효과적 협력사업 기획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초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한다. 협력국은 국가통계청·수산청·환경부 등 관련 기관 간 데이터 생산 기능 배분 및 정례화,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등과 연계한 공동조사 참여 및 국가 차원의 데이터 검증 강화, 통계 공개 원칙 수립 및 데이터 기반 정책 평가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범부처 정책 조정 메커니즘 구축

군소도서국의 해양수산 이슈는 수산-해양-관광-환경-기후 부문이 중첩되어 있으므로, 관련 부처 혹은 기관 간 정책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의 효과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협력국은 해양·수산·환경·관광 부처를 포함한 범부처 정책 조정기구 설치, 국가개발계획·세부 분야별 전략·세부 분야별 기본계획 간 정합성 점검,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부 개발 협력 파트너와의 정례 협의체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 정책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3) 협력 수요 발굴 및 정책 설계 역량 강화

대부분의 군소도서국은 정확한 우선순위가 없어 전 국가 차원의 전 분야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담당 정책 결정자의 개인 선호도에 따라 협력 과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 협력의 지속가능성이 낮으므로 협력사업 성과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개발계획 및 부문 전략에 해양수산 목표·지표 명시, 협력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개요서(PCP) 작성·예산 추계·정책 기획 등 행정역량 강화, 한국과의 정례 협의 플랫폼을 통해 수요 기반 협력 요청 체계 정착 등의 활동을 협력사업 추진 전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

4) 지역 협력 참여 확대 및 역내 공동자원 활용

군소도서국은 개별 국가 단위로는 행정·기술·재정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역내 협력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협력국은 SPC, FFA(태평양), CRFM, CARICOM(카리브해) 등 지역기구 회의·훈련·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역내 국가 간 공동 데이터 생산, 공동 감시(MCS), 공동 정책 수립 등 집단적 역량 강화, 지역기구를 통한 다자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 추진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 보전, 양식·수산기술, IUU 대응 등에서 기술적·제도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국제협력은 주로 태평양 일부 국가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카리브해를 포함한 타 권역에서는 협력 실적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군소도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협력 경험의 부족, 수요 파악의 어려움, 지역기구와의 연계 기반 부재 등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의 전략적 확장을 제약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국제협력은 ‘부처 내부의 기능 분절’, ‘단기·소규모 중심의 사업 반복’, ‘민간·시민사회·NGO 참여 부족’, ‘다자 연계 심화 필요’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²²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SHIELD 모델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내부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지역·다자 플랫폼을 연계한 단계적 접근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실행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모듈형 기반의 국가별 맞춤형 협력 설계 체계 구축

SHIELD 기능별 모듈을 조합하여 국가별·권역별로 상이한 협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듈형 협력 설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능별 요소를 조합하는 “사업 기획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태평양 군소도서국은 국가에서 직접 기획에 참여하는 직접형 사업 기획을 추진하고, 카리브해는 국제기구나 지역기구가 중재하는 간접형 사업 기획에 참여함으로써 권역별 및 국가별 차별화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 기획 체계는 국가별 개발 수준(LIC-MIC)에 따라 협력 모델을 기반조성형·기술이전형·제도 고도화형으로 단계화할 때도 용이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분야 중심 접근

226) 전혜은 외(2025), pp. 122-123, 181-183, 213-217.

에서 벗어나 협력국의 실질적 필요와 역량 수준에 부합하는 권역별·국가별 맞춤형 협력 전략을 구현할 수 있다.

2) 지역기구 연계 기반의 진입전략 체계화(카리브해)

카리브해는 우리나라와의 해양수산 분야 협력 경험이 거의 없어 ‘단일국 단독 접근’은 진입 장벽이 높을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애로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경험이 풍부하다면 기존 경험에 근거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나 카리브해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활한 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기구와의 공동 플랫폼 구축, 지역기구를 통한 정책 수요 도출·초기 조사·사업 검증 등 간접 진입 방식 확대, 국제기구와의 공동조사·공동사업 기획을 통한 신뢰 기반 확보 및 위험 분산 등의 과제 수행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기구를 통한 협력은 카리브해 진입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태평양에서는 사업 지속성과 확장성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전 기반구축형 협력의 우선 추진

군소도서국과의 해양수산 분야 협력의 효과적·효율적 수행 가능 여부는 현지의 데이터·제도·정책 기반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통계 시스템·데이터 플랫폼 구축, 법·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지원, 해양·수산·기후 부문 정책 진단 도구 개발 및 적용, 협력국의 기술·제도 준비도를 평가하는 사전검증지표 운영 등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반조성형 협력은 제안한 SHIELD 모듈 적용의 선결 조건이며, 태평양-카리브해 모두에서 협력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4) 도서국 국제협력 전담 기능 강화 및 부처 내 협업 체계 고도화

우리나라 해양수산 국제협력의 분절성과 단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체계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조직 설치 없이 기존 관계 부서(수산, 해양환경, 항만·안전, 기후·국제협력 등) 및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비상설 협의체 또는 과제 중심의 실무 협의 구조를 운영함으로써, 도서국 대상 협력사업의 기획-집행-성과 관리 전 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부처 및 산하기관 간 사업 정보, 국가별 협력 이력, 성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내부 정보 공유 체계(플랫폼 또는 공동 관리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유사 사업의 반복과 단절을 방지하고 중장기 협력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별도의 제도 개편 없이도 기존 행정·업무 체계 내에서 충분히 구현 가능한 조치로, SHIELD 모듈 기반 협력사업을 국내외적으로 보다 일관되게 집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군소도서국의 해양수산 협력 환경을 분석하고, 태평양과 카리브해의 국가별·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협력 방향과 모듈형 전략모델(OCEAN SHIELD)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제기구·협력국·우리나라의 역할을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군소도서국이 직면한 도전은 전통적인 분야(field) 구분(해양, 수산, 해운, 항만 등)을 넘어, 감시·단속, 양식기술, 가공·유통, 생태·기후 대응, 정책·제도, 인력·교육 등 기능(function) 단위에서 서로 긴밀히 얹혀 있는 복합적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 분야 중심 ODA 방식으로는 수요-실적 간 정합성을 맞추기 어렵고, 사업의 효과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수산 분야를 기능 단위로 재구조화하고, 이를 조합하여 국가별로 최적화된 협력사업을 구성하는 모듈형 협력 모델로서 ‘OCEAN SHIELD’를 제안하였다. Surveillance-Human Resources-Infrastructure-Ecosystem-Law-Development로 구성된 이 모델은 국가별 산업·제도·역량 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모듈을 조합할 수 있어, 군소도서국이 요구하는 다차원적 수요와 한국의 재정적·제도적 제약을 동시에 고려한 실현 가능한 협력 구조를 제공한다. 특히 태평양에는 직접형 접근(생산·감시·연안·기후 기반), 카리브해에는 국제기구·지역기구를 통한 간접형 접근이 적합함을 확인함으로써, 동일한 모델 안에서 권역별 차별화 전략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본 장에서는 OCEAN SHIELD의 6개 기능별 추진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개념적 모델을 넘어 실제 사업으로 연결 가능한 실천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감시체계 고도화(S), 인재·행정 역량 강화(H), 기반 인프라 확충(I), 생태·기후 회복력 제고(E), 법·정책·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강화(L), 지속가능한 해양경제·생계 개발(D) 등은 군소도서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고 장기적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핵심 기능으로 확인되었다. 각 기능은 단독으로도 적용 가능하지만, 국가별 우선과제에 따라 조립(assembly)될 때 가장 높은 정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구체적 실행 기반 측면에서는, 국제기구·지역기구는 데이터·정책·기술 기반이 취약한 군소도서국에서 사실상의 협력 관문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동조사·공동사업·국제펀드 연계 등 전주기 협력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다. 협력국은 통계 생산·정책 조정·행정역량 강화 등 협력사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며, 우리나라는 모듈형 사업 기획 체계

구축, 국제기구·지역기구와의 연계 강화, 사전 기반조성 사업 확대, 협업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전략적·체계적 접근을 제도화해야 한다.

종합하면, 본 장에서 제시한 모듈형 협력 방향과 OCEAN SHIELD 모델, 그리고 국제기구-협력국-한국의 3자 실행과제는 군소도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에 있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수산 및 태평양 중심의 단편적 구조를 넘어 기후·환경·감시·관광·해양경제 등 새로운 영역으로 협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점을 제공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ODA가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다른 분야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패키지 ODA사업으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 기반이 될 것이다.

06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태평양과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이 공통적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연안·해양 자원 의존성, 산업 구조의 단순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 국가별 기반시설, 정책·제도·인력 수준은 크게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ODA는 태평양 및 수산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수산·관광·연안관리·기후변화·해양안보 등 복합적 기능이 동시에 요구되는 군소도서국의 실제 수요와 충분히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분야(field) 중심 접근’을 넘어, 군소도서국이 당면한 문제를 ‘기능(function) 단위’로 재구조화하여 국가별·권역별 조건에 따라 조합할 수 있는 모듈형 전략 모델 OCEAN SHIELD를 도출하였다.

OCEAN SHIELD는 감시(Surveillance), 인적 역량(Human Resources), 인프라(Infrastructure), 생태(Ecosystem), 법제(Law), 개발(Development)의 여섯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되며, 각 기능 아래에 세분화한 모듈을 배치해 협력국이 필요로 하는 기능만 선택·결합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갖는다.

이는 단순한 개념적 모델이 아니라, 군소도서국의 다양한 문제 구조를 실제 협력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플랫폼이다. 예를 들어, IUU 어업 대응에는 감시(S)·법제(L)·인력(H)이 동시에 필요하고, 관광 기반 경제국의 연안 관리에는 생태(E)·인프라(I)·정책(L)을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모델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양식·가공 중심의 생산 기반 강화형, 기후·생태 중심의 회복력 강화형, 정책·데이터 중심의 제도 고도화형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확장될 수 있어, 기존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가 직면했던 ‘단편성·편중성·분절성’ 문제를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상위 전략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권역별 협력 방향을 비교한 결과, 태평양과 카리브해는 동일한 OCEAN SHIELD 모델을 공유하되, 적용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먼저 태평양 군소도서국은 해양경제 의존도가 높고, 수산업이 국가 생계·경제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인력·인프라 전반의 기반이 취약하여 단편적 기술 이전만으로는 협력 추진 및 성과 지속이 어렵다. 그러나 SPC·FFA 등 지역기구와의 협력 구조가 비교적 정비되어 있고, 우리나라와의 기존 수산 협력 경험이 풍부하며, 현지에서의 우리나라 기술 수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태평양 협력은 OCEAN SHIELD의 다양한 기능 모듈을 국가가 직접 조립하는 ‘직접형’ 접근 전략이 적합하다. 예를 들어, IUU 어업 문제 해결에는 감시(S)·법제(L)·인력(H)·인프라(I)를 통합한 MCS 협력 사업이, 수산 가치사슬 강화를 위해서는 양식-가공-유통을 연결한 생산-유통 협력사업이 효과적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국가에는 연안 침식 저감·해양재난 대응·블루카본 기반의 생태(E) 모듈을 조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반면,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관광 중심의 서비스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물리적 인프라는 태평양 군소도서국보다 양호하지만, 해양수산 정책·제도·통계 기반은 취약한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경험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외부 협력 파트너가 개별 국가에 직접 접근할 경우 수요 파악의 오류, 정책 도입 실패, 협력 지속성 부족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카리브해 권역에서는 태평양 권역과 같은 양자협력 중심의 직접형 접근 방식보다, 국제·지역기구를 통한 간접형 접근이 전략적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또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카리브해 협력은 OCEAN SHIELD의 기능 중에서도 정책·데이터·생태·기후 중심의 모듈을 다자기구 플랫폼에서 공동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하는 방향이 효과적일 수 있다. 수요가 많은 연안복원·해양쓰레기·기후적응·관광·생태 연계 프로그램 등은 국제기구와의 공동 설계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협력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군소도서국 협력 전략은 OCEAN SHIELD라는 기능 기반 모듈형 모델을 상위 프레임워크로 두고, 이를 태평양에는 ‘직접형 접근’으로, 카리브해에는 ‘다자기구 연계형 간접 접근’으로 적용하는 권역별 차별화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전략은 기존의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 기반·기능 기반·권역 기반이라는 세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효적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실천적 의의가 크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군소도서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협력 실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책 및 수요와의 부합도 확인을 권역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사업 실적이 적어 소표본 문제(Small sample problem)로 인한 통계적 불안정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연구 방법론적으로는 질적분석과의 혼합 방법론(mixed methods) 적용, 사업 규모별 가중치 적용, 메타분석을 통한 유사 연구 결과와의 통합적 해석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과제로 군소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국제협력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사업의 규모화와 체계화를 제안한다. 소규모 분절적 사업을 지양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프로그램 단위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현지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형 사업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통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개발 효과성 제고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를 통해서만 통계적 의미와 실질적 영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한 OCEAN SHIELD 모듈형 협력 프레임워크의 실증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 기획 연구를 후속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당 후속 연구는 특정 군소도서국 또는 권역을 대상으로, 수요 분석-모듈 조합-예산 설계-추진 체계 설정을 포함한 협력 사업 기획을 실제 사업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둘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듈 간 연계 효과, 단계적 투자 구조, 부처·기관 간 협업 방식, 성과 지표의 적합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ODA사업으로 확장 가능한 실행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범사업 기획 연구는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을 단순한 개념 제시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천적 협력 모델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정책 제언

군소도서국과의 해양수산 국제협력은 그동안 분야 중심 접근과 연수·시범사업 중심의 단편적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협력국의 통계·제도 기반 미흡, 협력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 미정립, 권역 간 이질성 등의 제약으로 인해 기존 사업의 성과 확산과 지속가능성이 제한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능 기반의 모듈형 전략(OCEAN SHIELD)과 권역별

차별화 접근을 제안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국제기구·협력국·우리나라 세 주체가 각각의 역할을 분명하게 수행하는 다층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도 제시하였다.

우선,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는 군소도서국 협력에서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통계 생산, 수요 도출, 사업 기획, 공동 집행, 평가, 재원 연계까지 협력 전주기에서 핵심 파트너로 기능해야 한다. 태평양의 SPC·FFA·PIF, 카리브해의 CRFM·CARICOM 등은 이미 풍부한 데이터와 정책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군소도서국과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필수적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들 기구와 함께 공동조사 및 데이터 생산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플랫폼을 활용해 국가 간 수요 조율과 정책 협의를 수행하며, 국제 기후·해양 펀드 등을 활용한 공동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기구와의 정례 정책협의체를 운영하여 협력의 지속성·제도화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협력국은 외부 ODA의 수혜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협력사업 기획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 파트너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사업 기획에 필요한 기초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개하고, 수요 기반 협력사업 요청 능력을 강화하며, 교통·수산·환경·관광 부처 간 조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SPC·CRFM 등 지역기구 참여를 확대하여 국가 간 정책 연계성과 역내 협력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반 강화는 협력국 정책 체계가 OCEAN SHIELD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OCEAN SHIELD와 같은 모듈형 전략을 바탕으로 군소도서국의 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권역별 전략적 차이를 고려한 접근 방식을 제도화할 수 있다. 태평양은 우리나라의

수산·양식·감시·연안 분야 경험을 기반으로 직접 접근을 통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카리브해는 협력 실적과 정보 기반이 부족하므로 다자기구 및 지역기구 연계형 간접 접근을 통한 진입 전략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계·법제·정책 등 사전 기반구축형 협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 협력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 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협업 기능을 고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 정부-국제기구-협력국-전문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여 협력의 지속성·확장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기존 해양수산 ODA사업 성과와 연계하여 장기적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상인·김이진·강주연(2017), 신기후체제 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 분석, KEI 기후환경정책연구 2017-0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2021.1.20.),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 국가안보전략연구원(2022), 중국과 솔로몬제도의 안보협정 체결 의미와 시사점, 이슈브리프, 352(2022.4.2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2),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전략경쟁 동향과 시사점.
- 대한민국정부(2022),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 박나연·김영선(2022),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전략경쟁 동향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22-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영민·이웅규·김용완(2023), 윤석열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따른 태평양 도서국(太平洋島嶼國) 접근 전략 연구, 한국도서연구, 35(4), 한국도서(섬)학회, pp. 57-78.
- 설규상·유호근(2019), 중국의 태평양 도서국 정책: 타이완의 국제적 고립화 전략을 중심으로,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5(2), pp. 33-59.
- 외교부(2023a), 태평양 도서국 개황.
- _____(2023b), CARICOM 개황.
- 장학봉·백인기·박영길·최수정·이혜은 외(2010), 소도서국가(SIDS)와의 해양협력 방안 연구, 정책연구 제2010-04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전혜은·한덕훈·김양희·임해주·김주형·이민정·허재영(2025),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증장기 전략 연구, 수시연구 제2024-19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정명화·조정희·한덕훈·문석란·김세인·마창모·이승우·박상우(2015),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발굴 연구: 아프리카 및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정수나(2018), 한국과 일본의 원조 결정요인 연구-남태평양 도서국을 중심으로,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4, pp. 1-20.
- 정수나·김영완(2017),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중국 원조 결정 요인 연구(The Determinants of Chinese Foreign Aid to Pacific Island Countries), 사회과학논집, 48(1),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65-86.
- 조원득(2023.5.25.),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 확대와 미·호 전략적 대응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소(IFANS) 연구보고서.
- 최인아·오지영·김영선·김소은·장한별(2023),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한-태평양 도서국 증장기 협력 방안, 연구보고서 23-3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인아·장한별(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덕훈·김정현·전혜은·이지인·차보민(2021), 해양수산 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해양수산 ODA 증장기 발전 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해양수산부(2021.1.),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
- _____(2021.3.),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2024.1.),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24~2028).

국외 문헌

- Andrew, William, & Ingrid, Vanessa A(2022), Pacific Islands Forum Fisheries Agency mid-term reviews: Review report.
- Asian Development Bank(ADB)(2025), Energy Transition Readiness Assessment for Developing Asia and the Pacific, Asian Development Bank(ADB).

- Australian Government(2023), Australia's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16.1.), Pacific Fisheries for Food Security Program Final Evaluation Report.
- Caricom Impacts(2023), Caribbean maritime security strategy & implementation plan: Securing the blue economy for present & future prosperity, CARICOM IMPACS.
- CARICOM(2025), Caribbean Community: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Policy Framework.
- CRFM(2024), Caribbean Community Common Fisheries Policy.
- Department of Energy(2014), Fiji Renewable Energy Power Project(FREPP).
- Drugan, Jocelyn, Obregon, Pablo, Lout, Gabrielle, & Anderson, Jada Tullos(2019), Fishery Improvement Project(FIP) Scoping Document:Guyana Artisanal Finfish Fishery, <https://clmeplus.org/app/uploads/2020/06/Annex-4a-FIP-Scoping-Document-Guyana-Artisanal-Finfish-Oct-22-2019-Final.pdf>.
- Everett, H., Simpson, D. & Wayne, Scott(2018), Tourism as a Driver of Growth in the Pacific: A Pathway to Growth and Prosperity for Pacific Island Countries, Asian Development Bank(ADB).
- FAO(2023), Overview of Marine Fisher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ommission of Small-scale, Artisanal Fisheries and Aquaculture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18th session).
- FFA(2019), Pacific Islands Forum Fisheries Agency Strategic Plan 2020-2025.
- Gillett, R. & Fong, M.(2023), Fisheries in the Economies of Pacific Island Countries and Territories(Benefish Study 4), Pacific Community(SPC).
- IDB(2019), Country Infrastructure Briefs: Caribbean Region.
- Lannon, Erwan(2023), The European Union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he geo-political/legal, trade, and cooperation dimensions. Oasis, 37(diciembre 2022).
- McManus, E., Collins, M., Yates, O., Sanders, M., Townhill, B., Mangi, S. & Tyllianakis, E.(2019), Commonwealth SIDS and UK Overseas Territories

-
- sustainable fisheries programmes: An overview of projects and benefit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unding, Marine Policy.
- OECD(2024a), Partnership for Action on SIDS.
- _____(2024b), Helping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graduate to success.
- Pacific Trade Invest(2024), Transforming Waste into Value.
- Patil, P.G., Virdin, J., Diez, S.M., Roberts, J., & Singh, A.(2016), Toward A Blue Economy: A Promise for Sustainable Growth in the Caribbean; An Overview, The World Bank.
- PIF(2022), 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
- Petzold, J., & Magnan, A. K.(2019), Climate change: thinking small islands beyo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SIDS), Climatic Change, 152-1, pp. 145–165.
- Petzold, J., & Ratter, Beate M.W., More than just SIDS: local solutions for global problems onsmall islands, Island Studies Journal, 14(1), 2019, pp. 3-8.
- Sachs, Jeffrey et al.(2019), The Decade of Action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Measuring and Addressing SIDS' Vulnerabilities to Accelerate SDG Progress, SDSN & UN Resident Coordinators Working Paper,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United Nations, https://files.unsdsn.org/WP_MVI_Sachs%20Massa%20Marinescu%20Lafortune_FINAL_cVeeBVmKSKyYYS6OyiiH.pdf
- SPC(2024), Pacific Community Results Report 2023.
- Terauds, Kris, & Zhuawu, Collin(2021), Alternative Development Strategies for SIDS: Building Competitiveness in New Industries, Commonwealth Economic Paper No. 98, Commonwealth Secretariat, ISBN 978-1849291989, 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aldcinf_2021d2_en.pdf
- Thomas, A., et al.(2020), Climate change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nual Review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45, pp. 1–27.
- Uitto, Juha I., Kohlitz, Jeremy & Todd David(2017), Evalu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Lessons from the Pacific

- and the Caribbean, in van den Berg, Rob D., Naidoo, Indran & Tamondong, Susan D.(eds.), Evaluation for Agenda 2030: Providing Evidence on Progress and Sustainability, International Development Evaluation Association/UTS(ISF), pp. 119-133,
- UN-OHRLLS(2014), SIDS Accelerated Modalities of Action (S.A.M.O.A.) Pathway.
- UNIDO(2019), UNIDO'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trategy, 2019-2025.
- USAID(2017.9.30.), Caribbean Marine Biodiversity Program Year 3 Annual Technical Report.
- Vaughan, N.(2024), Towards sustainable blue tourism in the Caribbean: Policy pathways to support community-based coastal and marine tourism, Blue Tourism Initiative.
- Vollmer, Frank et al.(2024), The rural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applied to 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 FAO, <https://openknowledge.fao.org/bitstreams/468151e3-790c-4609-ac54-22901e5be553/download> (검색일: 2025.7.9.)
- WCPFC(2013),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on the Special Requirements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Territories.
- Waqavakatoga, W. et al.(2024), Geopolitical competition, bilateral aid, and the collective interests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ODI Global.
- World Bank(2023), A Blue Transformation for Pacific Maritime Transport.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WMO)(2025), State of the Climate in South-West Pacific 2024(WMO-No. 1374), Geneva.
- Yezza, Hacene, Smith, John, & Tanaka, Keiko. (2021), Small islands, genuine partnerships.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UN DESA).

인터넷 자료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2018.5.4.), 군소도서국(SIDS)에 대한 효과적 개발협력 방안, 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9/view.do?seq=1342727(검색일: 2025.7.9.)

외교부, 인도-태평양 전략 소개, https://www.mofa.go.kr/www/wpge/m_25838/contents.do(검색일: 2025.10.10.)

___, 조직도, https://www.mofa.go.kr/www/pgm/m_4276/uss/org/orgcht.do?type=list(검색일: 2025.5.25.)

___,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국영문 설명자료, https://mys.mofa.go.kr/www/brd/m_3924/view.do?seq=363570&page=1(검색일: 2025.8.1.)

___,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 비공식 번역본, https://www.mofa.go.kr/cntntsDown.do?path=www&physic=4_%EC%9E%90%EC%9C%A0%ED%8F%89%ED%99%94_%EB%B2%88%EC%98%81%EC%9D%98_%ED%83%9C%ED%8F%89%EC%96%91%EC%9D%84_%EC%9C%84%ED%95%9C_%ED%96%89%EB%8F%99%EA%B3%84%ED%9A%8D%EB%B9%84%EA%B3%B5%EC%8B%9D_%EB%B2%88%EC%97%AD%EB%B3%B8.pdf&real=4_%EC%9E%90%EC%9C%A0%ED%8F%89%ED%99%94_%EB%B2%88%EC%98%81%EC%9D%98_%ED%83%9C%ED%8F%89%EC%96%91%EC%9D%84_%EC%9C%84%ED%95%9C_%ED%96%89%EB%8F%99%EA%B3%84%ED%9A%8D%EB%B9%84%EA%B3%B5%EC%8B%9D_%EB%B2%88%EC%97%AD%EB%B3%B8.pdf(검색일: 2025.10.27.)

원형민(2024.11.30.), 파나마 운하 화물 운송량 상위국,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41130000200044>(검색일: 2025.11.21.)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어류 소개-참치, <http://www.kosfa.org/home/ss21.php>(검색일: 2025.11.21.)

한국원양산업협회(2025.8.27.), WCPO 2024년 참치 어획량, 사상 최대치 기록, <http://www.kosfa.org/home/ss51.php?pp=2&bcidx=27&md=READ&idx=5680>(검색일: 2026.1.9.)

- KOICA(2023), KOICA's Practice and Strategy in the Caribbean, 13th High-Level Forum on Korea-Caribbean Partnership 발표자료, https://www.mofa.go.kr/www/brd/m_20057/view.do?seq=154&page=1(검색일: 2025.5.25.)
- ODA Korea, ODA 통계, <https://www.odakorea.go.kr/statistic/main?type=Stats#/mainLayout>(검색일: 2025.7.27.; 2025.11.10.)
- ____, 국가협력전략(CPS), https://www.odakorea.go.kr/kor/cont/ContShow?cont_seq=22(검색일: 2025.1.18.)
- 21st-Centry Maritime Cooperation Committee(2021.2.26.), The Guyana Fishery Industrial Park Project (Fuzhou Overseas Fishery Base) Completed and Put Into Operation, https://www.21cmcc.org.cn/English/news/newsreleases/202102/t20210226_922.htm(검색일: 2025.8.18.)
- Australian Fisheries Management Authority, Regional cooperation in the Pacific, <https://www.afma.gov.au/fisheries-management/international-fisheries-management/regional-cooperation-pacific>(검색일: 2025.8.25.)
- Belt and Road Portal(2025.11.20.), Political parties of China, Pacific island countries vow to deepen cooperation, <https://eng.yidaiyilu.gov.cn/p/0NET6UOG.html>(검색일: 2025.11.30.)
- ____(2025.11.20.), Xinhua Headlines: China, Caribbean countries deepen comprehensive cooperation, <https://eng.yidaiyilu.gov.cn/p/259563.html>(검색일: 2025.11.30.)
- CIA(2025),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검색일: 2025.6.10.)
- Early Warnings for All, About EW4All, <https://earlywarningsforall.org/site/early-warnings-all/about-ew4all>(검색일: 2025.6.25.)
- FAO, SIDS Solutions Platform, <https://www.fao.org/sids-solutions/en>(검색일: 2025.6.25.)
- ____(2024.10.21.), <https://www.fao.org/iuu-fishing/news-events/detail/en/c/1714559>(검색일: 2025.6.25.)
- FAO(2025), FishStatJ – Software for Fishery and Aquaculture Statistical Time Series, <https://www.fao.org/fishery/en/statistics/software/fishstatj>(검색일: 2025.5.23.)

-
- GHG SMART(2023.2.21.), <https://ghgsmart.imo.org/imo-and-republic-of-korea-partner-to-address-ships-ghg-emissions/>(검색일: 2025.6.25.)
- Government of UK(2022.6.25.), Establishing the Partners in the Blue Pacific (PBP): joint statement, <https://www.gov.uk/government/news/joint-statement-on-the-establishment-of-the-partners-in-the-blue-pacific-pbp>(검색일: 2025.5.7.)
- GSTC(2021), Pacific Tourism Organisation (SPTO), Pacific Sustainable Tourism Policy Framework (PSTPF), and the GSTC, Global Sustainable Tourism Council (GSTC), <https://www.gstc.org/gstc-spto-pacific-sustainable-tourism-policy-framework/>(검색일: 2025.8.11.)
- IFC(2022.5.), Creating Markets in Jamaica, <https://www.ifc.org/content/dam/ifc/doc/mgrt/cpsd-jamaica.pdf>(검색일: 2025.8.18.)
- International Collective in Support of Fishworkers, Papua New Guinea's fisheries boom, <https://icsf.net/newss/papua-new-guinea%C2%92s-fisheries-boom>(검색일: 2025.8.16.)
- Jamaica Information Service(2021.9.15.), Investors Urged to Get Involved In Fisheries Sector, <https://jis.gov.jm/investors-urged-to-get-involved-in-fisheries-sector/#:~:text=Investors%20Urged%20To%20Get%20Involved%20In%20Fisheries%20Sector%20%E2%80%93%20Jamaica%20Information%20Service>(검색일: 2025.8.18.)
- Kiene, W. & Brenner, J.(2022), Marine Protected Area Diplomacy with the Caribbean: Securing the Health of Our Shared Ocean Ecosystem, Science & Diplomacy, <https://www.sciencediplomacy.org/perspective/2022/marine-protected-area-diplomacy-caribbean>(검색일: 2025.8.11.)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Pacific Islands Leaders Meeting (PALM), <https://www.mofa.go.jp/region/asia-paci/palm/index.html>(검색일: 2025.5.25.)
- ____, Japan-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lations, <https://www.mofa.go.jp/region/latin/index.html>(검색일: 2025.11.30.)
- New Zealand Foreign Affairs and Trade, Our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https://www.mfat.govt.nz/en/aid-and-development/our-approach-to-aid#bookmark0>(검색일: 2025.6.25.)

- NOAA(2025), Annual High Tide Flooding Outlook, <https://tidesandcurrents.noaa.gov/cms/wp-content/uploads/2025/08/2024-2025-Annual-High-Tide-Flooding-Outlook.pdf>(검색일: 2025.7.18.)
- NOAA Climate.gov, Climate Change: Global Sea Level, <https://www.climate.gov/news-features/understanding-climate/climate-change-global-sea-level> (검색일: 2025.8.1)
- OECD(2025), DAC list of ODA recipients, <https://www.oecd.org/en/topics/oda-eligibility-and-conditions/dac-list-of-oda-recipients.html#note-4>(검색일: 2025.6.30.)
- ____,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https://data-explorer.oecd.org/vis?df\[ds\]=DisseminateFinalBoost&df\[id\]=DSD_CRS%40DF_CRS&df\[ag\]=OECD.DC.D.FSD&dq=....._T..&pd=%2C&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df[ds]=DisseminateFinalBoost&df[id]=DSD_CRS%40DF_CRS&df[ag]=OECD.DC.D.FSD&dq=....._T..&pd=%2C&to[TIME_PERIOD]=false)(검색일: 2025.6.25.)
- Oxford Business Group, Fisheries and natural resources are at the heart of push to boost industry in 파푸아뉴기니, <https://oxfordbusinessgroup.com/reports/papua-new-guinea/2017-report/economy/on-the-line-fisheries-and-natural-resources-at-heart-of-push-to-boost-industry>(검색일: 2025.8.16.)
- Pacific Islands Forum Secretariat(2022), 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 Pacific Islands Forum Secretariat, <https://forumsec.org/2050> (검색일: 2025.5.9.)
- Rosmiati, N.(2025), Adapting to Climate Change: Planned Migration in the Pacific Islands. Modern Diplomacy, <https://moderndiplomacy.eu/2025/02/26/adapting-to-climate-change-planned-migration-in-the-pacific-islands/> (검색일: 2025.8.11.)
- Roy, D.(2024), How the Caribbean Is Building Climate Resilienc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org/backgrounder/how-caribbean-building-climate-resilience>(검색일: 2025.8.11.)
- Sea Around Us (2025), Sea Around Us Global Fisheries Catch Data - EEZ, <https://www.seaaroundus.org/data/#/eez>(검색일: 2025.6.9.)
- SeafoodSource(2012.3.6.), New 파푸아뉴기니 JV to export canned tuna,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new-파푸아뉴기니-jv-to-export-canned-tuna>(검색일:2025.8.16.)

Solander, Profile, <https://solander.com.fj/profile/>(검색일: 2025.8.16.)

SPC, Fisheries story: Climate change and Pacific coastal fisheries, <https://fame.spc.int/fisheries-story-climate-change-and-pacific-coastal-fisheries>(검색일: 2025.10.15.)

SPC, History, <https://www.spc.int/about-us/history>(검색일: 2025.6.24.)

____(2025), PIF, SPC and UNDRR establish strategic partnership to strengthen Pacific disaster resilience, <https://www.spc.int/updates/news/joint-release/2025/03/pif-spc-and-undrr-establish-strategic-partnership-to-strengthen> (검색일:2025.6.24.)

Statista, Caribbean countries or territories with the highest share of GDP generated by travel and tourism in 202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789517/caribbean-direct-contribution-travel-tourism-gdp-country/#:~:text=Table_content:%20header:%20%7C%20Characteristic%20%7C%20Share%20of,Anguilla%20%7C%20Share%20of%20GDP:%2052%25%20%7C(검색일: 2025.8.1.)

The Nature Conservancy(2020), CARIBBEAN MARINE BIODIVERSITY PROGRAM OVERVIEW, <https://www.nature.org/content/dam/tnc/nature/en/documents/Caribbean-Marine-Biodiversity-Program-Overview.pdf>(검색일: 2025.6.26.)

The White House(2022), Indo-Pacific Strategy, <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2022/02/U.S.-Indo-Pacific-Strategy.pdf>(검색일: 2025.5.25.)

____(2022), FACT SHEET: Roadmap for a 21st-Century U.S.-Pacific Island Partnership, <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9/29/fact-sheet-roadmap-for-a-21st-century-u-s-pacific-island-partnership/>(검색일: 2025.11.24.)

____(2023), FACT SHEET: Energizing the U.S.-Pacific Islands Forum Partnership,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fact-sheet-energizing-the-u-s-pacific-islands-forum-partnership?utm_source/(검색일:2025.11.24.)

____(2024), FACT SHEET: U.S. Support to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6>

- /11/fact-sheet-u-s-support-to-small-island-developing-states/(검색일: 2025.6.24.)
- ____, Statement by Australia, Japan, New Zeal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artners in the Blue Pacific (PBP)(2022. 6.24.), <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6/24/statement-by-australia-japan-new-zealand-the-united-kingdom-and-the-united-states-on-the-establishment-of-the-partners-in-the-blue-pacific-pbp/>(검색일: 2025.5.25.)
- U.S. Department of State(n.d.), U.S.-Caribbean Partnership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2030, <https://www.state.gov/pacc2030/>(검색일: 2025.11.24.)
- ____, U.S.-Pacific Island Country Summit, <https://2021-2025.state.gov/u-s-pacific-islands-country-summit/>(검색일: 2025.5.25.)
-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Interior Department Applauds Renewed Economic Assistance for Compacts of Free Association, <https://www.doi.gov/pressreleases/interior-department-applauds-renewed-economic-assistance-compacts-free-association>(검색일: 2025.6.28.)
- UN Tourism(2025), Tourism Statistics, <https://www.unwto.org/tourism-statistics/tourism-statistics-database> (검색일: 2025.6.9.)
- UNCTADstat Data centre, Total trade and share, <https://unctadstat.unctad.org/datacentre/dataviewer/US.TradeMerchTotal>(검색일: 2025.6.24.)
- ____, Foreign direct investment, <https://unctadstat.unctad.org/datacentre/dataviewer/US.FdiFlowsStock>(검색일: 2025.6.25.)
- UNDP(2024),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re on the frontlines of climate change – here's why, <https://climatepromise.undp.org/news-and-stories/small-island-developing-states-are-frontlines-climate-change-heres-why>(검색일: 2025.8.1.)
- United Nations(a), About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https://www.un.org/ohrlls/content/about-small-island-developing-states>(검색일: 2025.6.18.)
- ____(b), List of SIDS, <https://www.un.org/ohrlls/content/list-sids>(검색일: 2025.6.23.)

-
- ___(c), The SAMOA Pathway, <https://www.un.org/ohrrls/content/samoa-pathway> (검색일: 2025.5.25.)
- ___(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io de Janeiro, Brazil, 3-14 June 1992, <https://www.un.org/en/conferences/environment/rio1992>(검색일: 2025.5.25.)
- ___(e), Voting System, <https://main.un.org/securitycouncil/en/content/voting-system>(검색일: 2025.8.1.)
- UNOCHA(2025), HotOSM OCHA roads dataset, Humanitarian Data Exchange (HDX), https://data.humdata.org/dataset/hotosm_atg_roads (검색일: 2025.6.19.)
- Williams, A.(2023), Korea-Caribbean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 Response, Grenada 정부 발표자료, 13th High-Level Forum.https://www.mofa.go.kr/www/brd/m_20057/view.do?seq=152&page=1(검색일: 2025.5.25.)
- WMO, Overview, <https://wmo.int/about-wmo/overview>(검색일: 2025.6.25.)
- World Bank Group(2025), World Development Indicator,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25.6.19.)
- _____, World Bank Country and Lending Groups, <https://datahelpdesk.worldbank.org/knowledgebase/articles/906519-world-bank-country-and-lending-groups>(검색일: 2025.11.1.)
- _____, OVERVIEW: JAMAICA, The World Bank In Jamaica, <https://www.worldbank.org/ext/en/country/jamaica#tab-about>(검색일: 2025.8.18.)
- WWF(2012.6.26.), Sustainable Seafood Series – Slice from the Solander, <https://www.panda.org/es/?205412/Sustainable-Seafood-Series---Slice-from-the-Solander>(검색일: 2025.8.16.)
- 公益財団法人海外漁業協力財団(2025), 財団の役割, <https://www.ofcf.or.jp/pages/28/> (검색일: 2025.7.10.)

보도자료

- 외교부 보도자료(2011.6.1.), 제1차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33782&page=590 (검색일: 2025.5.1.)
- _____(2011.10.6.), 한국과 카리브, 첫 고위급 대화의 문을 열다(제1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개최 결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787205>(검색일: 2025.5.1.)
- _____(2012.7.26.), 제2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개최,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47600(검색일: 2025.5.1.)
- _____(2012.9.18.), 한-태평양 도서국 고위관리회의 개최,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44288&page=1272&pitem=10 (검색일: 2025.5.1.)
- _____(2013.10.20.), 제3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개최,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47600(검색일: 2025.5.1.)
- _____(2013.10.21.), 제2차 한-태평양 도서국 고위급회의 개최,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47628&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page=578(검색일: 2025.5.1.)
- _____(2014.10.20.), 제4차 한-카리브 고위급포럼 개최,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52348(검색일: 2025.5.1.)
- _____(2014.11.24.), 제2차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52814&page=661(검색일: 2025.5.1.)
- _____(2015.10.6.), 우리의 태평양지역 외교, 순항중! - 제3차 한-태평양 도서국 고위관리회의 결과 -,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56589&page=17&pitem=10(검색일: 2025.5.1.)
- _____(2015.10.18.), 제5차 한-카리브 고위급포럼 개최,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56741(검색일: 2025.5.1.)

(2016.10.18.), 태평양으로 하나되는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 간 전략적 상생 협력 강화,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2321&page=896&pitem=10(검색일: 2025.5.1.)

(2016.10.25.),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을 모색하다! - 제6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개최 -,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2416(검색일: 2025.5.1.)

(2018.10.30.), 제8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개최,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700(검색일: 2025.5.1.)

(2019.7.9.), 제9차 한-카리브 포럼 개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449>(검색일: 2025.5.1.)

(2017.11.5.), 제7차 한-카리브 전문가 포럼 개최,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7275(검색일: 2025.5.1.)

(2017.12.7.), 제3차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7726&page=784&pitem=10(검색일: 2025.5.1.)

(2018.10.23.), 제5차 한-태평양 도서국 고위관리회의 개최,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676&page=718&pitem=10(검색일: 2025.5.1.)

(2019.10.17.), 외교부, 태평양 지역 13개 도서국가와 한국-태평양 도서국간 연계성 증진 및 실질분야 협력방안 논의,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9652&page=41(검색일: 2025.5.1.)

(2020.11.11.), 제10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결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0638(검색일: 2025.5.1.)

(2021.11.16.), 제4차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https://overseas.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787(검색일: 2025.5.1.)

(2021.12.1.), 제11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개최 결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862(검색일: 2025.5.1.)

(2022.10.26.), 제5차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920(검색일: 2025.5.1.)

-
- _____(2022.11.30.), 제12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개최 결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081(검색일: 2025.5.1.)
-
- _____(2023.3.26.), 외교차관보, 제7차 한-태평양 도서국 고위관리회의 주재,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506(검색일: 2025.5.1.)
-
- _____(2023.10.10.), 제13차 한-카리브 고위급 토론회 개최,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4181(검색일: 2025.5.1.)
-
- _____(2024.11.5.), 지속가능한 식량안보를 위한 한-카리브 농업 협력 모색,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5599(검색일: 2025.5.1.)
-
- _____(2025.11.18.), 제15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개최,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6662(검색일: 2025.11.19.)
-
- 해양수산부(2025.10.21.), 한-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2025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 개최,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3469&pagecnt=10&searchDeptName=&menuSeq=971&searchEndDate=&searchEtc1=&searchEtc2=&searchEtc3=&searchEtc4=&searchEtc5=¤tPageNo=1&searchSelect=title&searchStartDate=&recordCountPerPage=&bbsSeq=10&searchValue=%EA%B5%AD%EC%A0%9C%ED%98%91%EB%A0%A5>(검색일: 2025.10.27.)
-

부 록

1.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국제협력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 설문지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국제협력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행 중인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방안 수립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 수요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의견은 향후 한국과 군소도서국 간 협력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5년 8월 11일(월)~25(월)이며, 메일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개발협력센터

A. 다음 문항은 태평양 소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국제협력 수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A-1. 태평양 소도서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으시면 횡수, 사업 대상국, 사업 분야를 기입해 주십시오.

--

A-2. 향후 태평양소도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양수산 분야를, 구체적이며 사업화가 가능한 협력 분야 중심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칸 추가)

협력 사업 (특정 대상 국가가 있을 경우 기재, 복수 가능)	직접 기여하는 SDGs 목표 (설문 p.6 참고)
예) 해수담수화 시설 지원(사모아, 키리바시)	6

A-3. 위에서 제시한 협력 사업과 융합 가능한 타분야 협력과제를 작성해 주십시오.

해양수산 분야	연계 가능 타분야 과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SDGs 목표 (설문 p.6 참고)
예) 해수담수화 시설 지원(사모아, 키리바시)	재생에너지, 보건 및 공공위생, 기술교육, 정책 제도 개선 (요금체계, 수질 기준 등)	6, 3, 7, 13, 9, 14
예) 항만개발	배후 녹지/그린 인프라, 콜드체인 유통단지, 항만 및 녹지 지역 수질 관리 시스템, 재해 대비 인프라, 연안 관광문화 자원, 지역 일자리 역량강화	9, 6, 8, 11, 12, 13, 14, 15

A-4.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태평양 소도서국과의 협력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

B. 다음 문항은 카리브해 소도서국 대상 국제협력 수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B-1. 카리브해 소도서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으시면 횡수, 사업 대상국, 사업 분야를 기입해 주십시오.

--

B-2. 향후 카리브해 도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양수산 분야를, 구체적이며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 중심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칸 추가)

협력 사업 (특정 대상 국가가 있을 경우 기재, 복수 가능)	직접 기여하는 SDGs 목표 (설문 p.6 참고)
예) 해수담수화 시설 지원(바베이도스, 도미니카 연방)	6

B-3. 위에서 제시한 협력 사업과 융합 가능한 타분야 협력과제를 작성해 주십시오.

해양수산 분야	연계 가능 타분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SDGs 목표 (설문 p.6 참고)
예) 해수담수화 시설 지원	재생에너지, 보건 및 공공위생, 기술교육, 정책 제도 개선(요금체계, 수질 기준 등)	6, 3, 7, 13, 9, 14
예) 항만개발	배후 녹지/그린 인프라, 콜드체인 유통단지, 항만 및 녹지 지역 수질 관리 시스템, 재해 대비 인프라, 연안 관광문화 자원, 지역 일자리 역량강화	9, 6, 8, 11, 12, 13, 14, 15

B-4.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카리브해 소도서국과의 협력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

C. 소도서국과의 협력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혹은 정부에 바라는 건의 사항을 말씀해주십시오.

애로사항	
정책 건의사항	

D.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또는 기타 제안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SDGs 목표

목표 1	목표 2	목표 3	목표 4	목표 5	목표 6	목표 7	목표 8	목표 9
빈곤종식	기아해결	건강과 복지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혁신과 인프라
목표 10	목표 11	목표 12	목표 13	목표 14	목표 15	목표 16	목표 17	-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글로벌 파트너십	-

2. 해양수산(해양수산부) 특화 국제개발협력 패키지 사업(안)

해양수산(해양수산부) 특화 패키지 사업 모델[안]

25.05.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개발협력센터

*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 구성요소 적용은 각 나라의 대상 사업 발전 단계에 따라 맞춤형 적용 가능

(예 1 : 내부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며 시스템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국가 정책 개선→IUU 어업 대응 체계 보수→자원데이터 분석 역량강화로 접근

예 2: 내부 공감대와 시스템이 없는 경우, IUU 어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IUU 어업

대응 체계 마련 → 국가 정책 개선으로 접근)

*** 현재 제시된 내용은 해양수산 분야 중심이나 사업 영향에 맞춰 참여 원하는 부처에서 자유롭게 제안 가능

① 케냐 블루이코노미 기반 청년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패키지 사업(안)

〈사업 구성요소〉

구성 요소	협력 가능 기관	세부내용
해기사 승선실습 교육	· 해양수산부 · 민간기업 (해외 인력 확보 및 ESG 성과 창출,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	· 해기사 승선 실습 교육 제공(2개월) · 선사 연계 유급 인턴십 기회 제공(10개월) · 선사 문화 교육 제공
해상안전교육	· 해양수산부	· 해상 안전 실습 교육 제공(1주)
일반 보건 및 건강검진 제공	· KOICA 또는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건강검진 모델 확산, 보건 ODA 효과성 제고) · 민간기업 (인재 확보, CSR 성과 및 정부- 민간 파트너십 구축)	· 건강 검진 프로세스 표준화 및 운영 · 선원 특화 건강 관리 프로그램 구축 건강 검진 비용 제공
해상 안전 대응 정보 제공 플랫폼	· 기상청 (우리나라 기상 예측 모델 확산, 기후 변화 대응국제협력 강화, 아세안 권역 내 한국 위상 제고)	· 해상 안전 대응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 플랫폼 전파 · 시스템 운영 위한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해양 안전 정책 역량강화	· 기획재정부	· 해양 안전 정책 개발 지원 · 해양 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프레임워크〉

항목	내용
영향 (Impact)	·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 육성을 통한 청년 실업을 저감 및 포용적 경제성장 기반 구축
성과 (Outcome)	· 해양 분야 청년 인재 양성 및 산업 연계 통한 자원체계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출물 (Output)	· 해기사 교육 및 인턴십 운영 · 해상 안전 교육 · 건강검진 시스템 제공 · 기후 정보 시스템 구축 · 정책 자문 수행
활동 (Activities)	· 승선실습선 및 교육 콘텐츠 운영 · 현지 연수생 초청 · 건강 검진/보건 체계 지원 · 해양기후 플랫폼 기술 구축 및 전파 · 정책 마스터 플랜 자문

② 가나 테마 지역 포용적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한 연안공동체 발전 패키지 사업(안)

〈사업 구성요소〉

구성 요소	협력 가능 기관	세부내용
어업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해양수산부	· 교육 과정 개발 · 교육 기자재 지원 및 교재 개발 · 교육 과정 운영
	· 민간기업 (아프리카 수산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및 ESG 성과 달성, 기업 사회공헌 국가 인증 등)	· 전문 강사 파견 · 선사 문화 교육
교육 시설 및 환경 확보	· EDCF (수행 중인 가나 EDCF 사업 연계, 사업 통해 구축된 인프라 활용도 및 지속가능성 제고 가능, 협력국에서는 긍정적)	· 교육 공간 제공 (임차) · 교육 시설 및 환경 확보
보건 및 위생 교육	· KOICA 또는 보건복지부, NGO (SDGs 3 달성 기여 및 보건 ODA 성과 확대, 중점협력국 사업 다각화)	· 기초 보건 및 위생 교육
문해 교육	· 국제기구 또는 NGO (SDGs4 달성 기여 및 교육-일자리 연계 ODA 모델 구축, 국제기구 내 한국 위상 강화)	· 기초 문해 교육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	· 민간기업 (현지 인력 확보 및 CSR 성과, 현지 비즈니스 기회 창출, 정부-민간 파트너십 강화)	· 유급 인턴십 기회 제공 · 취업 기회 제공

〈사업 프레임워크〉

항목	내용
영향 (Impact)	· 협력국 지역 맞춤형 산업(수산업-연안어획) 기반 강화 및 지역 고용 창출
성과 (Outcome)	· 기술 역량 보건 문해 교육을 통한 어선원 직업훈련 성공 및 취업 연계
산출물 (Output)	· 직업훈련과정 개발 · 교육 인프라 구축 · 문해 보건 교육 운영 · 민간 협력을 통한 인턴십 연계
활동 (Activities)	· 교육 콘텐츠 개발 · 교육 공간 임차 및 설비 제공 · 문해 보건 교육 실시 · 유급 인턴십 및 취업 매칭

③ 태도국(투발루) 해양연안 생태계 통합 보전 및 자원 관리 패키지 사업(안)

〈사업 구성요소〉

구성 요소	협력 가능 기관	세부내용
IUU 어업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강화	·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 WMU, FAO 등 관련 국제기구 (환태평양 IUU 어업 대응 선도국 지위 확보, 국제기구 내 영향력 강화)	· 위성,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기반 어업 활동 감시 체계 도입 · 국제 협력 기반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국제 규범 및 법적 대응 인적 역량 강화 · IUU 어업 방지 위한 법 제도 개선
오피서버 보수 교육	·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 · 민간기업 (또는 명예해양수산관) (ESG 성과, 정부-민간 파트너십 강화)	· 한국 초청 연수 통한 보수교육 제공 · 선사 문화 교육 제공 · 기초 실무 한국어 교육 제공
데이터 분석 역량강화	· 국제기구 및 지역수산기구 · 해양수산부 · 학계 (우리나라 수산 분석 데이터 모델 확산으로 EM 보급 선제 대응, 해양수산 데이터 주도권 확보, 다자 ODA 성과 확대)	· 전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데이터 분석 교육 제공 · 과학 기반 해양수산 자원 데이터 확보
국제기구 및 인재 육성 정책 개선	· 기획재정부	· 예산 및 행정 체계 개선 정책 컨설팅 제공 · 해양수산 인재 양성 및 유지 제도 지원
생물 다양성 보존	·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 (SDGS 14, 15 달성 기여 및 산림해양 통합적 생태계 관리 모델 구축,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 내 한국 위상 제고, 신기후체제 하 탄소흡수원 관리 국제 리더십 확보, 생물다양 성협약(CBD) 이행 ODA 성과 창출)	· 맹그로브 숲 복원 및 관리 프로그램 구축 · 연안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및 운영 역량 강화 ·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전 전략 수립 · 해양보호구역(MPA) 지정 및 관리 체계 구축 지원
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	· KOICA 또는 보건복지부	· 건강검진 제도 구축 및 재정비 · 해양 안전 연계 건강 보호 방안 도출

〈사업 프레임워크〉

항목	내용
영향 (Impact)	· 해양-연안 생태계 통합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통한 태평양 군소도서국의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
성과 (Outcome)	· 생태계 기반 해양자원 관리 역량 강화 및 해양육상 통합 보전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 한 발전 기반 마련
산출물 (Output)	· 보수교육 및 초청연수 운영 · 전자 모니터링 도입 및 데이터 교육 · IUU 어업 감시 시스템 도입 및 활용 교육 · 제도 개선 컨설팅 · 건강검진 제도 구축 · 맹그로브 숲 복원 모델 구축 · 해양보호구역 관리 시스템 도입
활동 (Activities)	· 국제규범 부합 IUU 어업 대응 제도 마련 · 선사 문화언어교육 포함 실무 교육 운영 · 데이터 분석 모듈 개발 및 교육 · 예산/행정/인재양성 정책 컨설팅 수행 · 해양 안전 연계 건강 서비스 도입 · 맹그로브 숲 복원 및 관리 역량강화 ·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 역량강화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5년

01	청색경제 이행지표 개발 및 투자효과 분석	김주현
02	해양문화산업의 지역 경쟁력 진단과 발전전략 연구	이슬기
03	유해·교란 해양생물 지정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여진
04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 방안 연구	김미주
05	해양 복합위험의 실질적 대응 방안 연구	민영훈
06	해양 위성정보 활용 방안 연구	조성진
07	수산업 정책 전주기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안지은
08	소비자 맞춤형 식품시장 성장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대응 방안 연구	임경희
09	외국인 어선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정명화
10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 연구	박해진
11	수산물 업사이클링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이남수
12	어촌과 연안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바다생활권 도입방안 연구	박상우
13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에 따른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김병주
14	연안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류희영
15	그린 암모니아 선박 연료 전환 대응 방안 연구	전서연
16	스마트항만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다예
17	탄소중립항만 전환을 위한 항만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이혜령
18	부산항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김근섭
19	재난·재해 대비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물류공급망 대응 방안 연구	최나영환
20	국제물류시장 공정경쟁질서 확립 방안 연구	김동환

2024년

01	섬·바다·강 연계 관광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최일선
02	해양 스타트업 실패 자산화 방안 연구	좌미라
03	시민친화적 바닷가 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	정지호
04	연안이용 관리 법제 정비방안 연구	최석문
05	특별관리해역 관리제도 재편 방안 연구	최수빈
06	해양관할구역 과세권한의 체계적 배분방안 연구	이혜영
07	어업인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	오서연
08	수산물 무역(수출입) 단기 전망모형 구축 연구	한기욱
09	어촌소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이상규
10	어촌다움에 기반한 어촌공간관리 방안 연구	이승혜
11	파생상품을 이용한 해운선사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 운임선도거래(FFA)를 중심으로 -	김한나
12	내항상선 해양사고 경감방안 연구	허성례
13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김세원
14	해외 항만터미널 확보 전략 연구	김근섭
15	항만 하역능력의 서비스 수준 개선 연구	이화섭
16	국내 무역항 거버넌스 체계 개편방안 연구	김근섭
17	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혜리
18	국제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최나영환
19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정책효과 분석 모형 개발 연구	강무홍
20	한-북미 무역구조 분석 및 물류공급망 변화 대응방안 연구	이성우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5년

01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제도 개선 연구	이정아
02	국제 해양질서 전환 대응 해양대외전략 기반 연구	박수진
03	유기수산물품 국제 동등성 확보 방안	오서연
04	선원 복지 개선방안 연구 - 선내 급식을 중심으로	허성례
05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체계 재정립 연구 - 항만재개발사업 업무 매뉴얼 개선을 중심으로	김세원
06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방안 수립	전혜은
07	어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법·제도 연구	박상우
08	해양생태계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	정세미
09	해양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육근형
10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정보화 정책 방향 연구	이종필
11	해양안보 위협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선박 이상 행위를 중심으로	민영훈
12	지방관리무역항 보안관리체계 재정립 연구	김가현
13	부산항 터미널 위험물 컨테이너 장치 효율 개선 방안 연구 - 법·제도 측면 -	김우선
14	새만금호 수질관리 강화 방안 연구	장원근
15	미 상호주의 대응 수산분야 비관세장벽 영향 연구	이정미
16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이정아

2024년

01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찬웅
02	한-아프리카 국제수산물협력 체계 개선 연구	이채령
03	해양안보 MDA 체계 구축·활용 방안 연구	민영훈
04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략 방안	한장협
05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활력 증진 방안 연구	이슬기
06	부산항 물동량 유치방안 연구	김은우
07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해양수산물분야를 중심으로	채수란
08	국내 연안여객선 관광·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이정아
09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순
10	어업선진화를 위한 어업관리체계 개편방안	심성현
11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따른 해운물류 지원방안	황수진
12	연안 중소선사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정책 지원방안	류희영
13	항만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김보경
14	해양모태펀드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	한기원
15	특별관리해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방안	장원근
1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양식장 안전성 개선 방안 연구	윤미경
17	국가관리연안항 발전전략 수립체계 연구	신정훈
18	글로벌 공급망 대응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발전방안 연구	권보배
19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전혜은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5년

01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플랫폼 활용 제고 방안 연구	김성은
02	동아시아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 자원 조성 방안	이윤정
03	한-아세안 해양협력 전략적 강화방안 연구	최지연
04	수산업 강제노동 규범화 대응체계 구축연구	박찬엽
05	해조류 활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조현주
06	미국 무역환경 변화와 해운 조선산업의 영향 분석 연구	김한나
07	해상운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이효과 분석	최영재
08	스마트항만 개발 효과 산정 방법론 연구	안승현
09	항만 수급분석 체계화 및 지침 마련 연구	신정훈
10	비컨테이너 부두 하역능력 산정을 위한 적정 점유율 기준 연구	이화섭
11	국가 스마트 콜드체인 물류거점센터 구축연구	조지성
12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중개 플랫폼 모델 개발	권보배
13	미국 이력 추적 의무화에 따른 수산물 수출기업 대응실태 분석 연구	박해진
14	AI 활용 글로벌 수산산업 및 무역전망체계 고도화 연구	한기욱
15	섬어촌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이상규

Ⅰ 2024년

01	한-북극권 청색경제 협력사업 추진 방안	김영지
02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의 대응력 강화 연구	박수진
03	해양 지속가능성 시범 평가 연구	최희정
04	Scope 3 기준 원양산업 탄소배출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 원양저연승어업을중심으로	조현주
05	수산물 공급망 관리 개선방안 연구(한태 무역을 중심으로)	한기욱
06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박해진
07	탄소배출 규제 대응을 위한 컨테이너 선대 교체 수요 추정 연구	최건우
08	연안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에 관한 연구	김성아
09	한국과 미동부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방안 연구	김가현
10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Ⅲ) - 철광석, 화학공업생산물, 기타광석, 잡화를중심으로	이나영
11	점안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탄소집약도지수(CII) 변화 분석	김보람

수시연구 2025-06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방안 수립

인쇄 2026년 2월 26일

발행 2026년 2월 28일

발행인 조정희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락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공감(051-903-9909)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정가 15,000원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방안 수립

South Korea's Strategic Approaches to International Oceans and Fisheries
Cooperation with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